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 소관)

2017. 4.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국토교통부	1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5
3. 새만금개발청	69
4. 공공기관	73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75
② 한국수자원공사	99
③ 한국도로공사	115
④ 한국철도공사	131
⑤ 인천국제공항공사	141
⑥ 한국공항공사	153
⑦ 한국감정원	165
⑧ 주택도시보증공사	173
⑨ 교통안전공단	183
⑩ 한국철도시설공단	195
⑪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3
⑫ 한국국토정보공사	209

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13
⑭ 한국시설안전공단	221
⑮ (주)주택관리공단	233
⑯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37
⑰ (주)위터웨이플러스	241
⑱ 코레일유동(주)	245
⑲ 코레일관광개발(주)	249
⑳ 항공안전기술원	253
5. 지방자치단체	257
① 서울특별시	259
② 경기도	293
③ 제주특별자치도	313

국토교통부

공백

□ 국토교통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1. 불법도청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회의실(대회의실 및 중회의실)에 무선도청탐지장비 설치('15.12) ○ 연1회 국정원 합동으로 우리 부 주요시설(장차관실 및 회의실) 무선도청탐지 실시('16.9)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도청탐지가 시급한 회의실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보안대책 강구
기획조정실	2. 공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겠음 <p>* 공직자윤리법 개정('15.3.31 시행) -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후 2→3년), 고위공직자 업무관련 범위확대(근무부서 → 기관전체)</p>
기획조정실	3. 내실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R&D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심사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p>* 실·국 및 전문기관에 R&D사업 사전심사 등 이행 철저 요구('17.4월)</p>
기획조정실	4. R&D사업 예산 투입 대비 기술료 징수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액 상향 방안 검토 - 기술료 징수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련 규정*을 통해 전 부처에서 통일적으로 적용 중이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범정부적인 기술료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국토부 단독으로 기술료 징수액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30%→10%('12.05)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40%→30%('15.12)
기획조정실	5.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설물 이용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국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교통DB 보완('15), 부실수요예측시 제재규정 마련('13.7), 수요예측 재조사 제도 도입('14.5) 등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제반여건이 변동될 경우 국가교통DB를 보완하는 등 교통수요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기획조정실	6. 총무계획 용어 및 배부선 부적합 문제를 시정하고 철도, 항공관련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계획 용어 수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발간 총무집행계획의 건설교통부 용어는 '16년 7월에 국토교통부로 기수정 반영 ○ 배부처 포함 문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7월부터는 집행계획에 배부처를 포함하여 책자를 발간 후 배부 ○ 항공 및 철도분야 세부계획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는 업체동원하여 국방부 인계, 국방부에서 운영계획 구체화 - 철도는 수송소요와 차량편성 등을 구체화하여 철도공사 총무계획에 반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7. 법정계획간 연계성 강화 등 법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성과 평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정책연구용역」 추진 중('16.12-'18.3, 국토연구원) ○ 교통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차기 계획(2021~2040) 수립시 계획간의 연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방안 마련 완료 ('16.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20年初 목표)하여 道종합계획 등 하위 계획 수립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 ○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수립시점에 여러 교통 계획의 연계성을 조정 반영토록할 계획 ○ 법정 계획간 연계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사항 등을 병행검토
국토도시실	8. 국토발전전시관 건립에 있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 되도록 건립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발전전시관은 국토·인프라 분야에 특화하여 한국전쟁이후 국토계획 및 개발 노하우, 국토교통분야 발전과정, 해외 성공 사례 등에 대해 11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전시할 계획임('16.6월 전시설계 완료) * 국토발전, 도시·토지, 주택·건축, 수자원,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미래국토, 해외건설 -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역사발전의 광범위한 주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 연대기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는 차별성이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 공사 및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 후 '17년 하반기 개관 예정
국토도시실	9.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 지역에서 신규 산업단지 건설이나 도시개발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사업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사업 추진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교육 * 개발제한구역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16.12.7)
국토도시실	10. 기존건축물 중 내진 설계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설계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기준 완화하는 인센티브 부여('17.2.4 시행)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화 용적률 (10%이내),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국토도시실	11.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완료('1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현황을 근거로 2개년에 걸쳐 방치건축물 안전점검 등 실태조사 완료 *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87곳으로 확인 ○ 정비모델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적이고 다양한 정비모델 마련을 위해 국토부 주도의 선도사업 6곳 추진 중 * 과천시 의료시설, 광진구 공동주택 등 6곳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계획 수립 지원 - 개별 방치건축물별 체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광역시·도) 지원
국토도시실	12. 현장점검 및 인허가 시 전문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재추진 검토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전현희 의원·'16.12.30) 및 본회의통과('17.3.3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건축안전센터 하위 규정 마련 및 시행
국토도시실	13.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정책추진 시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17.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연구개발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검토 추진 *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 등 중장기 전략 추진 시 적극 검토할 계획
국토도시실	14. 국민의 안전과 건축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공사의 설계비 및 감리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 추진 - 건축사 업무의 적정대가 지급을 공공 부분은 의무화하고 민간부분은 권장 * 현재 건축사법에서는 적정대가 지급을 공공 부분에서만 권장하고 있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법 개정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재정 투입이 어려운 공원 조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 마련('16.11월) * 민간이 조성하는 도시공원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시설의 설치 허용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공원 제도도입(공원녹지법 개정,'17.12월)
국토도시실	16. 가설건축물의 내진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안전, 피난·방화 규정 적용 등 가설건축물 안전관리 방안 검토 - 건축학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관련 규정 개정 검토
국토도시실	17. 수도권 규제의 정책 목표 실현 및 지역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 부작용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성장관리방안과 같은 도시계획 활용을 확대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
국토도시실	18.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 입지 공장들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제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면적제한 완화는 계획적 공장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9.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 등록의무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의 장단점 및 부작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아울러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행복주택 4.8만호 사업승인, 주거급여 81만가구 지원을 지속 추진 중
주택토지실	20.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수준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 강화 *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오프라인 상담센터(전국 40곳 운영 중) -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 주거복지 홍보자료 배포, 담당자 교육 등 ○ 주거지원 시급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R 30%이상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및 가점 부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17.7) 등을 통해 지원 확대방안 검토(중장기) ○ 공공임대 우선지원 확대 적용('17.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R 30%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전세임대까지 확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21. 비닐하우스·판자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 공고('17.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주거실태조사와 별도로 표본수를 확대하고 별도의 조사표를 통해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실태조사 실시
주택토지실	22.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주택 임대료 인하 및 지속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14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16.4), 행복주택 15만호 입지 확정('17.3) ○ '16년보다 1만호 확대된 2만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추진중 * '17년 1분기 11개소 4천호 모집(3.30 공고) ○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60~80% 범위내에서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지속 관리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까지 4.8만호 사업승인을 통해 15만호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연내 2만호 입주자 모집 실시
주택토지실	23.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 재개 및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임대부분양주택사업) 공급가능택지, 주택수요 등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 중 ○ (건축원가 공개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세부항목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확대에 따른 실익 및 실효성, 사업자와 수분양자간 분쟁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24.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범위 및 적용요건 개선, 청약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3 부동산 대책 발표('16.11.3) -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주택 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청약조정대상지역(수도권 일부지역, 부산, 세종 등) 설정, 1순위제한(2주택이상 소유자 제외 등), 재당첨 제한(1~5년간)], 전매제한 기간 강화(1년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등 * 분양가상한제 지정범위는 시·군·구 등 기초단위까지로 기 시행중
주택토지실	25.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 주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주거빈곤층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관련 통계 정확성 제고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주택보급률 등 통계 생산('16.12) -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의 표본을 확대(2만→6만)하여 조사 추진('17.3.23~) * 표본 수 확대를 통해 자가보유율, 점유율 등 통계에 대한 정확성 제고 ○ 비주택 거주 주거빈곤층 실태조사 용역 발주('17.3.20, 5.6억원)
주택토지실	26.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주변 시세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차원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당한 임대료 증액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부당한 임대료 증액 신고시 조정권고하고, 미이행시 고발 조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에서 민간사업자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적정성을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감독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적정성 판단 검토기준 지자체 통보 예정
주택 토지실	27.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16.11.22 김현아의원) * 주요내용 :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가 전에 공공기관의 검증 의무화
주택 토지실	28. 분양권 불법전매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분양권 거래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강화) 상시점검팀을 구성, 일회성이 아닌 수시, 상시 점검 체제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17.3 6차에 걸쳐 현장점검 실시하여 불법시설 총 170여개 철거, 공인중개사법 위반 39건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 실거래 허위신고 리니언시제도 시행('17.1.20)하여 2개월간 자진신고 103건 접수, 39건에 대하여 과태료 총 5억여원 부과 ○ (제도개선 방안)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현가능성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 거래소 신설보다는 현행 제도의 틀내에서 분양권 거래 시장을 투명화 하는 것이 바람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 점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있으며, 분양계약도 거래 신고대상에 포함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 하는 등 관리를 강화('17.1)한 바 있음 <p style="margin-left: 20px;">*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797호)」 시행('17.1.20) 제3조제1항제2호</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 다운계약 신고포상금제 시행 - 허위신고 방지 및 양도소득세 탈루 방지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전매 억제 효과 기대
주택토지실	<p>29. L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홍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LH공사 분양 주택단지의 중도금 대출 중단에 따른 입주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양주택의 분양홍보시 공공성을 벗어난 문구 등으로 공공주택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LH 주관 지역본부에 대한 교육 및 안내 실시(3월) <p style="margin-left: 20px;">* (일시) '17.3.8~3.10(3일간), (주관) LH 본사 판매보상기획처, (대상) 지역본부 분양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공공분양 중도금 협약 체결('17.3.20) 및 납부일 연장 - '17.4월 중도금 납부가 도래한 수원 호매실 A7 사업장 3.20일 협약체결(KB, 3.9%) - 8.25대책 이전 공급한 3개 단지의 납부일을 6개월 연장 · 8.25대책 이후 공급한 3개 지구(수원 호매실, 부산명지, 동탄)는 분양 당시부터 중도금비율을 최소화(10~30%)하고, 납입횟수를 축소(4회→1~2회)하여 분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홍보시 공공분양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매분기마다 지속적인 분양담당자 교육 실시 ○ 중도금 대출 차질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주택토지실	30. 10년 공공임대리츠가 LH공사의 부채감축 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직접공급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방식은 동일함 -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된 표준임대조건*의 범위내에서 시중전세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결정 <p>*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국토부 고시 제2015-638호</p>
주택토지실	31. 공공임대주택 보다는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국민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사업승인·착공물량 확대 계획 수립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승인·착·준공 물량 관리
주택토지실	32.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 개선('16.6.28) - 1인당 보증건수, 보증한도 및 대상 주택가격 제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16.8.25) - 보증범위 축소(100→90%) 및 주금공, HUG 통합 2건으로 강화</p> <p style="text-align: center;">< 보증제도 개선내용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중도금대출보증 제도 변경 전·후 비교표</th> </tr>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기관</th> <th style="width: 10%;">기존</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0%;">6.28 발표</th> <th style="width: 10%;">8.25 대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인당 보증건수</td> <td>HUG</td> <td>제한없음</td> <td rowspan="2">⇒</td> <td>2건</td> <td rowspan="2">⇒ HUG·HF 합산 2건으로 강화</td> </tr> <tr> <td>HF</td> <td>2건</td> <td>2건</td> </tr> <tr> <td rowspan="2">1인당 보증한도</td> <td>HUG</td> <td>제한없음</td> <td rowspan="2">⇒</td> <td>수도권 광역시 6억 지방 3억</td> <td rowspan="3">중전과 동일</td> </tr> <tr> <td>HF</td> <td>3억</td> <td>중전과 동일</td> </tr> <tr> <td rowspan="2">대상주택 가격</td> <td>HUG</td> <td>제한없음</td> <td rowspan="2">⇒</td> <td>9억 이하 주택</td> </tr> <tr> <td>HF</td> <td>9억</td> <td>중전과 동일</td> </tr> <tr> <td>보증범위</td> <td>HUG</td> <td colspan="2" rowspan="2">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액의 100%까지 보증</td> <td rowspan="2">⇒</td> <td rowspan="2">대출액의 90%까지 보증</td> </tr> <tr> <td></td> <td>HF</td> </tr> </tbody> </table> <p>< 향후 추진계획 ></p> <p>○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p>	중도금대출보증 제도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	기관	기존		6.28 발표	8.25 대책	1인당 보증건수	HUG	제한없음	⇒	2건	⇒ HUG·HF 합산 2건으로 강화	HF	2건	2건	1인당 보증한도	HUG	제한없음	⇒	수도권 광역시 6억 지방 3억	중전과 동일	HF	3억	중전과 동일	대상주택 가격	HUG	제한없음	⇒	9억 이하 주택	HF	9억	중전과 동일	보증범위	HUG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액의 100%까지 보증		⇒	대출액의 90%까지 보증		HF
중도금대출보증 제도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	기관	기존		6.28 발표	8.25 대책																																											
1인당 보증건수	HUG	제한없음	⇒	2건	⇒ HUG·HF 합산 2건으로 강화																																											
	HF	2건		2건																																												
1인당 보증한도	HUG	제한없음	⇒	수도권 광역시 6억 지방 3억	중전과 동일																																											
	HF	3억		중전과 동일																																												
대상주택 가격	HUG	제한없음	⇒	9억 이하 주택																																												
	HF	9억		중전과 동일																																												
보증범위	HUG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액의 100%까지 보증		⇒	대출액의 90%까지 보증																																											
	HF																																															
주택토지실	33.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p>○ 하자보수 대책</p> <p>- 분양 주택(다세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하자담보책임,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p> <p>- 분양이 아닌 다가구 주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건설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하자보수제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문제점이 나타나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음 * 시·도의 건의내용, 관련업체 및 협회 요청사항,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등을 검토 및 확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17.2.8) - 빈집과 노후된 소규모 단위의 주택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
주택 토지실	34. 최저주거기준에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쪽방, 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최저주거기준에 준주택을 제외하고 있지 않음
주택 토지실	35.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 등 예산 당국 설명 및 협의 지속 추진
주택 토지실	36.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난을 겪고 있는 수서·세곡 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고개로 확장(6→8차로)을 포함한 수서역세권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지자체·사업시행자와 협의중('16.6~현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TF회의를 통해 교통개선대책의 대상노선, 비용 및 분담방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하고 시행주체별 추진 * 밤고개로 확장은 서울시 주관으로 '18.12 완료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37.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6년까지 43.1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올해에는 공급(준공) 물량을 당초 11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실적 점검·관리를 통해 올해 공급 목표 달성 추진
주택 토지실	38. 승인 후 장기 미착공된 영구·국민임대주택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착공물량 41.3만호('14년말 기준) 중 '16년말 기준 22.5만호*(54.5%)를 해소하여 잔여 미착공물량은 18.8만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6.5만호, ('15년) 9만호, ('16년) 7만호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 미착공물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및 리츠 등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 활용 등 미착공물량 적극 해소 추진
주택 토지실	39.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자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완료* <p>*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16.11</p>
주택 토지실	40. 뉴스테이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후속 기준 및 초기임대료 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테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중('17.4 계약)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 방안 마련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41. 뉴스테이 입주자의 주택 보유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테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중('17.4 계약)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 방안 마련 검토
주택 토지실	42. 뉴스테이 임대 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양질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지는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리츠에서 각 뉴스테이 단지의 임대관리현황 관리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양질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지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도록 관리 <p>* 뉴스테이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제1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능</p>
주택 토지실	43. 감리비가 지급기준보다 낮게 결정되는 것은 감리대가를 사업주로부터 받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개선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은 감리 관련단체와 주택사업자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p>*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부가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99.1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주택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대가를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에 예속되지 않고 객관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 감리자(또는 감리원)의 임의교체를 제한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
주택토지실	<p>44.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총당금 적립 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총당금 적정 적립’ 관련 지자체 지도·감독 의무 철저 협조 요청(‘16.10.11) ○ ‘장기수선총당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 추진방안 마련(‘16.12.23.) - ‘장기수선총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전국 지자체 및 공동주택단지 배부 및 지도·감독 강화요청(‘16.12.29) * 월간 세대별 장총금 산정 및 적립 방법 등 ○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및 장총금 관련 진단지문 확대(‘17.2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개선방안 마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불일치에 따른 이행주체 불명확 문제 해결 ○ ‘장기수선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장총금 집행 등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일선 공동주택단지에 배부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장총금 적립 가이드라인 및 장기수선계획 매뉴얼 배포 등에 따른 장총금 적립 이행실태(표본조사) 점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45.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및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근절 추진(안) 방침결정('17.3.8)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신고(세움터, 건축부서) 정보를 KISCON(등록 등 정보)과 연계, 불법 의심업체 정보를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기능(시스템) 개선('17.6 시행) ○ 건산법 위반혐의 업체 통보 시(매월) 위반혐의대상 확대 (7종→9종, '17.6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증 불법대여, 기술자 중복배치 혐의 업체 추가 ○ 등록증 불법대여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 강화(3년, 3천만원 → 5년, 5천만원), 재등록 결격사유 강화(5년 → 10년), 등록증 불법대여 공모행위를 한 건축주도 처벌('17.9 시행)
건설정책국	46. 공공발주공사 직접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시공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제도* 도입('17.3.21 건산법개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위원실(윤관석 의원)과 협의하여 직접시공 시공능력 평가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17.1.6,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되어 개정·공포됨('17.3.2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와 함께 직접시공의 확대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47. 다세대 주택 등 소형 건축물에 대한 무등록 직접시공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단독주택(가정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공관 등)에 대해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축하도록 제도 운영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관련 법안이 입법발의되어 심의예정이며,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의 효과성 및 부실시공 예방여부, 건축주 시공권의 과도한 제한 등을 종합고려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p>*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1.24.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p>
건설정책국	48. SOC 시설물 내진보강 등 지진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후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합동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수립 ('16.12.16) - 17개부처 109개 과제 발굴, 개선추진 <p>* (국토부)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 등 12개 과제</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시설물 내진보강 등 12개 과제 지속 추진 - 도로, 철도, 공항, 댐 등 내진보강 추진 (내진보강율 '16말 93%→'17말 95.4%)
건설정책국	49. 기업들이 내진성능 평가를 성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규정(과태료) 강화 (3백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p>* 시특법 전부개정('17.1.17)</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50. 지반침하(싱크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반침하 업무기준 및 지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6.1, 시행 '18.1) 후 하위법령 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가칭) 제정 중* *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중('16.1~'17.8) ○ 지자체의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안전공단 내 전담 지반탐사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탐사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전현장조사를 거쳐 지반탐사 실시 중('17.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17.9)
건설정책국	51. 안전관리비를 예가기준으로 정액 책정하는 방법,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체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당국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의 필요성 설명 및 관련 기준 개정 요청('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필요 ○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이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 제도 마련('16.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 건설현장 안전대책('15),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16)</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및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 추진 ○ 발주청·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반드시 안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감독강화 방안 추진('17.8.)
건설정책국	52. 해외건설 수주액 급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인프라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협조체계를 강화 - 해외진출 시장개척자금 및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인프라 마스터플랜 추진중 ○ 주요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차나칼레 교량 및 인니 자카르타 경전철 차량 수주 등 수주지원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사업발굴·F/S 이후 개발단계에서의 정부지원 신설을 위해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신규 조성 <p>*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력, 총 1천억원 목표 조성 ('17년 예산 100억원 반영, 건당 50억원내)</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구 설립) G2G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부터 G2G 및 민간 제안 사업의 개발·금융지원에 이르는 PPP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 ○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주요 프로젝트 진행현황, 정부 간 협력 수요 등을 감안, 전략적인 대상국가시기 선정을 통한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건설정책국	53. 해외건설사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필요 금융지원 정책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발굴단계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 - 금융조달단계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조성 지원 - 사업개발단계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 조성 지원 준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금융지원 정책 운영 및 추가 금융 지원 정책 주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2차 사업타당성조사(F/S)지원 대상사업 공모 예정('17.4) -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금융투자 추천사업 모집 예정('17.4) -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17.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54.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사고 후 현장 도착시간 등 매뉴얼을 준수하고, 사고발생 인지 방법을 개선하는 등 매뉴얼을 정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부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해주도록 국민안전처(119 응급상황센터)와 협의 완료('16.10.) - 건설사고, 화재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우리부에 즉시 상황전파
건설정책국	55. 공공시설물과 다자이용 시설의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특법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수·보강 상태를 확인·분석하여 결함 발견 시 그에 따른 안전등급 부여와 보수·보강 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17.3.23, 관련 의원실 설명)
건설정책국	56.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 수립('16.5., 국가정책조정회의) - 영세현장에 대한 지원 및 소규모 공사 점검체계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 중 * (주요내용) 상시점검반 운영, 추락위험공사 집중관리, 전문건설업주 교육강화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와 협조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대상 확대 등 과제 지속 추진
건설정책국	57.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미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취약시설 보수·보강 시설 후속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16.7월) - 안전조치 필요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30일내 보수·보강 등의 조치 계획 제출 의무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특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4항 개정 ○ ‘17년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교육계획 수립·시행(‘17.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7,000명 * 집합교육 8,000명, 방문교육 9,000명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교육 지속 시행(12월까지)
건설정책국	58. 저품질 외국철근이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건설자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자재품질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16.10.완료) *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 철강재 사용 근절을 위해 철강재 사용 건설현장 점검 등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 추진 * ‘16년 형사고발 2건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18년까지)을 통해 품질시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부실시험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 철강재 유통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지속 실시
건설정책국	59. 정부출연기관인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부 관리감독 강화가 가능하도록 교육원 정관개정 요청 중(‘17.1.31, ‘17.4.5.) * 정관 개정(협회 중심의 이사진을 설립 출연기관 중심의 이사진으로 개선)을 위하여는 먼저 이사회를 통과하여 우리부 허가를 받아야 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개정 지속 요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60.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분야 기술가치평가 수행기관 지정(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12) ○ 발주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소개 및 발주업무 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중 활용이 미흡한 중소기업 보유 신기술을 대상으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지속 추진('14년 ~)
건설정책국	61.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자 경력 관련 비리근절 대책 방침결정’('16.6.22.)에 따라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신고 검증강화, 순환근무, 클린신고센터 등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법령 개정(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은 금년내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관리 위법 행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건설정책국	62. 공공시설물과 다자이용 시설의 균열에 대한 하자 발견 및 보수 필요시 그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수 이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법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수·보강 상태를 확인·분석하여 결함 발견 시 그에 따른 안전등급 부여와 보수·보강 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17.3.23, 관련 의원실 설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자원정책국	63.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4대강 부채 상환 방안을 재조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수공의 부채 상환계획은 과거 수공의 경영성과 및 장래 순익전망 등에 근거하여 협의하에 마련 ○ 수공은 발전, 단지 수익 등을 활용하여 차질없이 부채 상환계획 이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 사업비 절감(1,780억) 및 댐 이수 편익(4,000억), 발전·단지 순이익 등 활용(1,745억)을 통해 7,525억원 상환 - '16년 : 발전, 단지 순이익 등을 활용하여 1,745억원 상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채무원금 2.4조원 및 이자비용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공의 부채 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 <p>* 결산, 중장기 재무관리, 정부 경영평가 결과 이행여부 등</p>
수자원정책국	64. 4대강사업 수공 부채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공의 자체 상환 계획도 재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수공의 부채 상환계획은 과거 수공의 경영성과 및 장래 순익전망 등에 근거하여 협의하에 마련 ○ 수공은 발전, 단지 수익 등을 활용하여 차질없이 부채 상환계획 이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 사업비 절감(1,780억) 및 댐 이수 편익(4,000억), 발전·단지 순이익 등 활용(1,745억)을 통해 7,525억원 상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 발전, 단지 순이익 등을 활용하여 1,745억원 상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채무원금 2.4조원 및 이자비용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 수공의 부채 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 <p>* 결산, 중장기 재무관리, 정부 경영평가 결과 이행여부 등</p>
수자원정책국	65.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심재철 의원, '16.12.19.)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17.1.16.) 후 소위 계류 중('17.1.17., 2.2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노력하겠음
수자원정책국	66.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를 위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녹조·수질개선 등을 위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마련 -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17.3.20)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17.3.20, 국토·환경·농식품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자원정책국	67. 4대강 보 설치 후 녹조 현상이 증가한 것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주요지점에 대하여 남조류세포수, chl-a 등 수질측정 모니터링 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등에 따른 녹조 수질개선효과 지속 모니터링 등
수자원정책국	68.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의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17.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 수자원 11.7억 m³ 중 상시활용 용량은 6.2억 m³, 비상활용 용량은 5.5억 m³ - 상시활용 용량(6.2억 m³)은 시설운영을 통해 연간 9.0억 m³/년 공급 가능 - 과거 가뭄피해지역, 기관별 장래 물 사용 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확보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연간 8.6억 m³/년 - 상시공급 가능량(9.0억 m³/년)은 수요처에 (8.0억 m³/년)을 공급하고, 잔여량(1.0억 m³/년)은 예비수원으로 활용 * 극한 가뭄 등 비상시에는 비상활용 용량(5.5억 m³)을 활용하여 용수공급 우선수위에 따라 비상용수 공급
수자원정책국	69. 4대강에 확보된 수자원을 농촌 용수 공급에 적극 활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17.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량에 농식품부의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19개 지구) 및 중장기 농촌용수 공급계획(34개 지구)을 반영하여 활용계획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수자원정책국	70. 4대강 수변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 친수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공간 네이밍 부여, 강문화관 활성화 등 이용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수변공원관리 추진
수자원정책국	71.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자원분야 법정 계획(수문조사 기본계획 제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계획 변경중 ○ 「수자원계획 체계 개선방안 연구('12.9)」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16.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조사기본계획 보완·변경 규정 등을 반영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17.7)
수자원정책국	72. 댐의 내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 등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용수댐의 17개 취수탑에 대한 내진평가 결과, 6개댐의 8개 취수탑이 내진안전성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천, 안계(2), 사연, 대암, 연초, 운문(2) * 정보부족으로 내진평가 미시행되었던 선암댐 취수탑은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17.2) ○ 내진안전성이 미확보된 취수탑의 신설·보강이 포함된 “댐 안전성 강화 사업”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재부, '16.8),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중(KDI, '16.9~'17.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정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18년 국고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우선 수공 자금(1억원)을 투입하여 6개댐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절차 완료 추진
수자원정책국	73.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장 제안으로 대구·구미시간 민관 협의회를 구성('15.2)하고, 9차례 운영 * '15년(1차 3.13, 2차 4.9, 3차 5.21, 4차 7.22, 5차 9.3), '16년(6차 1.14, 7차 3.29, 8차 6.1, 9차 11.16) - '17. 2월 중앙부처 합동(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구미지역 방문, 대구·구미측 민관협의회 의견 청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구미 민관협의회 운영 지원 등 지자체간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안을 토대로 추진 예정
수자원정책국	74. 남강댐 물 공급, 강변여과수 사업 등 경남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부산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중 - (강변여과수사업) 시험집수정(1공) 설치('14.2~'15.2), 시험정 운영('15.2~'16.5) 및 지하수영향조사 실시('14.4~'16.5) - (남강댐 물 공급) 남강댐 여유량 관련 부산·경남 지역간 합의 유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합의 유도를 통한 사업 시행 - (강변여과수사업) 지하수위 영향저감 및 지역 발전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국토부, 부산시, 창녕군)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해소 및 지자체간 합의 유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강댐 물 공급) 제3의 기관을 통한 남강댐 여유량 검증을 추진하고, 지자체 간 합의 시 사업추진
수자원정책국	75. 물관리 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법안국회 시 「물관리기본법」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16.12.21, 국토부·환경부 국장 참석)하였고, '17년 2월 임시국회 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17.2.14) ○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률 제정을 논의중('16.1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차원의 단일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국회의 법률제정에 적극 참여
수자원정책국	76. 4대강 준설로 인한 재고 골재의 판매 촉진으로 관리비 절감과 판매 수익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4대강 준설토 관리에 철저토록 지시('16.9.23) - 준설토 처리수익금은 「4대강 하천준설토 처리지침('12.4)」에 따라 적법 사용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토록 조치 - 골재 판매단가 인하 등을 통해 골재 매각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독려(여주시)
수자원정책국	77. 세종보 인근 수질 악화와 관련하여 보 효용성 문제를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경관 확대, 환경용수 공급, 수상 레저활동 등 세종보 효과를 감안하여 보 철거는 신중한 검토 필요 - 보수위 저하 시범운영을 통해 주변경관, 환경용수 공급 등의 영향 검토('17.2~3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조 저감 등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하·폐수처리시설 확충, 지천정비,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등을 통한 녹조 등 수질개선 도모
수자원정책국	78. 추진 중인 하천박물관 건립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게 준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박물관(가칭) 건립 타당성 용역」 발주('16.12) ○ 그간 추진경위,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원실 사전설명('17.3.14)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박물관(가칭) 건립 타당성 용역」을 통한 적정성 사전 검토계획(~'17.12) - 타당성 결과에 따라 하천박물관 건립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
교통물류실	79.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16.10월,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과 「광역교통법」 개정안**('16.9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검토 * 국토부장관 소속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 -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17.3월, 경기연구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참석('17.4.14) 및 협의 * 국회의원 정병국 외 3명,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교통본부, 지자체 연구원 등 참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80.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대책 평가 연구용역 착수 - ‘서부지역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토론회 (김성태의원실 주관, ’16.8.3) - 관계기관 회의(종합교통정책관 주재, ’16.12.6) 및 정책과제 점검회의(2차관 주재, ’16.12.27)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대책 개선 방안’ 지자체* 설명회 개최(’17.4.14) <p>*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김포시, 고양시, 수도권교통본부 등 참석</p>
교통물류실	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운수 종사자 연속 휴식시간을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28) - 운수종사자 연속 휴식시간 8시간 이상 보장 의무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연합회와 함께 법령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및 관련자 의견 수렴 등
교통물류실	82. 노선여객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기간제 근로자 현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여객업(시내, 시외, 고속) 근로자 현황 ○ (전체) 총 94,960명(정규직 82,697명, 비정규직 12,263명) <p>* 운전업무 종사자 : 총 79,886명(정규직 69,356명, 비정규직 10,530명)</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총 12,263명 중 정년 미만 근로자 3,938명, 정년 초과 근로자 8,325명 * 운전업무 종사자 : 총 10,530명 (정년 미만 3,526명, 정년 초과 7,004명)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 초과 근로자 8,325명 경우 해당 사업체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긴급한 수송력 증가 시 활용 ○ 정년 미만 근로자 총 3,938명(운전직 3,526명)은 신규 채용 근로자로서 운전 기술 및 위기대처능력 등의 확인 차원에서 일정 기간 기간제로 운영* * 현재 사업체마다 3개월~2년 기간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 이는 개인 운전습성 및 인성 등을 종합 검증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오히려 여객업무 수행의 안전 도모가 가능 < 향후조치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 취지를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
교통물류실	83. 택시호출어플을 이용한 택시기사의 손님선택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 택시 등 App사와 지속 협의 중 - 택시기사 손님선택 등 택시호출 App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 중 - 다만, 택시호출App의 개선이 필요한 바, App사와 지속적인 협의 등 중장기 검토 필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사와 협의를 통해 손님선택 방지 대책 검토 지속 추진
교통물류실	84. 전기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택시 활성화를 위한 택시구분기준 개선 추진 중 - 기존 크기, 배기량 기준 외 ‘국토부장관 고시’ 차종까지 전기택시로 활용 가능토록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중 * 2.3~3.20 입법예고 → 현재 규제심사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17.上) - ‘국토부 고시’ 병행 입법 추진('17.9)
교통물류실	85. 대리운전 프로그램 공급업체 중 대형 업체의 홍보 방지 및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접수된 결과를 관계기관별(경찰청·공정위·지자체 등) 정책 수립에 반영·추진 중 * '16.5~8월 운영을 통해 총 215건 신고접수 → 소관부처별 조사·시정조치 중 ○ 「대리운전 부처협업 방안」을 마련·시행('16.5~)중으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대리운전 문제를 지속 개선
교통물류실	86. 기계식주차장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개정('17.3월) -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관리자에 대한 교육 도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87.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실수요검증 기준을 강화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기준 개선방안 마련중 - 물류시설용지 비율, 평가비중 확대 - 기존도로와의 접근성, 환경훼손 여부, 인근 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
교통물류실	88. 견인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견인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17.4.10) - 난폭운전 「화물자동차법」 상 처벌 신설, 자가용 견인차 단속 강화, 부당요금·무단견인 처벌 강화, 요금기준 현실화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법령」 개정 등 근절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교통물류실	89. 화물차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차고지를 적극적으로 확충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화물차 휴게시설 건설(333억원 국비지원) * 준공 4개, 건설중 17 개 ○ 화물차 휴게시설 필요구간 수요조사 실시('16.8~12) 및 지자체에 사업 검토 요청('16.12) ○ 화물차 휴게소 국비지원율(현30%) 확대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 예정처 설명('17.2). 기재부 설명('17.2, '17.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차 휴게시설 건설을 지속 추진 * '17년 18개(착공 5개 포함) 건설중 9개 준공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90.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사업용 자동차 안전 운행 대책 마련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16.7.27,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 -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 연속운전시간제한 및 최소휴게시간 확보 의무화, 디지털운행기록 활용범위 확대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기준 강화 - 자동차 안전관리 및 도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점검 강화 * (도로환경) 차량 휴게소·공영차고지 확충, 졸음 쉼터 및 졸음 알리미 설치 확대, 사고 위험 지역 안전시설 개선 - 교통안전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 교통안전교육센터 설립, 교통안전 공익 캠페인·홍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등
교통물류실	91. 고속버스 등의 유아용 카시트 설치 및 안전띠 규정관련 대안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유아카시트 도입 T/F 구성('16.10~) 및 운영(T/F회의 3회, 현장조사 2회 등) - 국내여건에 맞는 카시트의 개발, 3점식 좌석안전띠 버스도입 등 검토 ○ 고속·시외버스 3점식 좌석 안전띠 차량 도입 권장('17.3) - 3점식 안전띠 버스도입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카시트 버스 장착 방안 발굴('17말) - 차량 제작사, 유아카시트 업체 협업을 통해 국내여건에 맞는 장착방안 발굴 ※ 국내 고속·시외버스는 2점식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반면 유아카시트는 승용차에 적합한 3점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92. 속도제한장치 해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으로부터 과속 단속 정보를 제공 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의심차량을 시·도로 통보하여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조치 시행('16.11, '17.2, '17.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등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기간 및 재검사기간 단축(안 제63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 ○ 과속 단속 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조치 지속 추진(계속)
교통물류실	93. 자동차 리콜 시정률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시정률 향상을 위해 리콜통지수단으로 기존 우편발송 외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 추가(자동차관리법 개정, '17.1.17)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7. 9)
교통물류실	94. 자동차제조사별 자기인증 부적합률 공개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추진 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16차종)에 대하여 보도자료배포('16. 7.)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추진 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16차종) 보도자료 배포('17. 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95.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 운행 대책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16.7.27,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 -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 연속운전시간제한 및 최소휴게시간 확보 의무화, 디지털운행기록 활용범위 확대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기준 강화 - 자동차 안전관리 및 도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점검 강화 * (도로환경) 차량 휴게소·공영차고지 확충, 졸음 쉼터 및 졸음 알리미 설치 확대, 사고 위험 지역 안전시설 개선 - 교통안전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 교통안전교육센터 설립, 교통안전 공익 캠페인·홍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등
교통물류실	96.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및 디자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부품 인증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인증기관에서 내부검토 진행('17.3) ○ 대체부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부품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17.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부품 인증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인증기관 업무규정 개정('17.9) ○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부품 디자인권 행사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완성차-부품 업계 간 협약 추진('17.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97. 자동차제작사 튜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튜닝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7.4) * 검사시설 조건 일부 완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법제처 심사('17.6), 개정·공포('17.9)
교통물류실	98. 자동차 공제조합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 법 시행 '15.12.23, 시행령('15.11.30)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16.1.22) <p>< 향후 추진 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조합 업계 설득하여 진흥원 설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연합회장 주도로 비용부담 업계 설득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립 반대하나 적극 설득 중 - 공제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진 않을 경우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자동차손해보장법 제39조의12제1항제10호)
교통물류실	99. 민간검사소의 높은 자동차 검사 합격률에 대한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공단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을 대상으로 일제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 강화 * 3년간 총 6,016명, 검사업무매뉴얼 6,200부 무상 배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및 지속적인 검사원 교육 실시 - 검사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및 검사원 교육 지속 추진
항공정책실	100. 핀란드 국적항공사인 핀에어(Finnair) 부산(김해공항) 취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협의 추진 - '16년 ICAO항공운송협상회의(ICAN)에서 양국간 실무 회담 개최('16.12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회담 추진('17.5, 헬싱키)
항공정책실	101.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16.12) - 미확보 대상 57개소 중 1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 * (평가결과) 7개소 내진성능확보, 3개소 미확보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확보시설물 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보강 및 47개소 내진성능평가 실시('17.12)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미확보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사업 실시('18.12)
항공정책실	102.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접근 교통망 확충방안, 활주로 길이, 공항소음 영향범위 및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16.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최소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타조사 완료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
항공정책실	103. 김해 신공항 접근교통망 확충 관련 부산시 제안 내용 등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교통망 확충 방안은 영남권 주민이 편리하게 김해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입 철도 및 도로 계획이 기포함 ○ 지자체에서 추가 건의한 접근교통망 확충사업안은 신공항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키로 지자체와 협의 완료('16.12)
항공정책실	104. 대구 군비행장 이전 관련, 예정지 주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민간 공항 이전 계획을 함께 발표하는 등 국방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의 지역설명회 등에서 민간공항 이전 추진방향 설명(1.9~12) 등 국방부와 적극 협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와 협의하여 민간공항 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
항공정책실	105. 대구 군비행장 이전 관련, 민항시설은 지역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의 이전후보지 검토 등 이전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이전절차 등을 논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민항 시설 규모를 검토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06.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16.10~) - '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 시 기본계획고시, 설계 등 후속조치 적기 추진
항공정책실	107. 대구공항 통합 이전 관련 예타 단계에서부터 김해 신공항과의 역할 분담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검토하여 도출된 결론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공항의 민항시설은 국방부의 이전절차에 맞추어 이전 시설 규모를 검토할 계획
항공정책실	108.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와 병행하여 국내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마련 - 항공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16.2),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연구용역 추진('16.5~),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16.8)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AO 국제기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및 국내 항공학적 검토체계 구축 - ICAO 고도제한(OLS) T/F('17.4 독일) 및 ICAO 비행장 패널(ADOP WG/3) 참여('17.7), 항적자료(DB)수집·분석체계 등 마련('17.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09. 현 김해공항은 최근 항공수요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김해공항 혼잡완화를 위해 국제선 터미널 증축사업을 시행 중('12~) - 또한, 세계적인 공항엔지니어링社(ARUP)에서 시설·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 중('16.1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선 터미널 증축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료('17.6) - ARUP社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터미널 시설·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17.12)
항공정책실	110. 인천국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하고, 공항에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직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과 공항내 불법영업행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17.1.12, 박완수의원등 10인) * 우리부는 벌금을 범칙금으로 완화 의견 제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사설주차대행 단속 지속 실시 ○ 사법경찰직무법 및 공항시설법 개정 지속 추진
항공정책실	111. 인천공항공사의 배당금을 줄여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배당협의체에 배당성향 증가 관련 의견제출('17.2) * 배당성향(%) : ('15)32.01→('16)35.07→('17) 35.9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소싱용역 대가기준 체계 변경('16.11) 및 물가인상 반영을 통해 아웃소싱 용역 업체 직원의 실질적 임금인상(인천공사) - 적용 시중노임단가 단일화(일반직공무원 봉급표), 최하위 직급 기본급을 20% 상향하여 노무비 2.5%(약68억원) 인상 및 최저임금법 충족
항공정책실	112. 음주운항으로 인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사의 음주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종사에 대한 단속비중을 높이고 단속시점을 도착편까지 확대하였으며, 공항별 운항편수에 따른 합리적 단속목표를 수립하여 시행('16.11)
항공정책실	113. 휴대용 전화기 등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기 반입에 따른 항공운송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배터리 운송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16.4)됨에 따라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16.5) 시행중 - 3개분야 11개 추진과제(25개 세부과제) 중 13개 완료, 12개 추진 중 * 추진 중 과제 : '17년 10건, '18년 1건 목표로 추진 중
항공정책실	114. 대한항공에 개선 권고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5개 항목)의 이행실태에 대해 면밀히 확인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에 우리부에서 최초 권고한대로 이행 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 재수립* 요청 - 매월 대한항공으로부터 5개 항목의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점검 실시 * 중앙안전위원회 이사회 직속배치 및 사외 이사 안전전문가 선임에 관한사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부 권고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임 - 이행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활동을 통한 이행실태 확인 등
항공정책실	115. 핵심 MRO 사업자 선정 등 항공MRO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p>< 조치 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의존도가 높은 MRO 산업의 내수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내 항공 산업보호를 위해 단계별 육성방안 마련('15.1)·추진 중 - 국내 MRO 자립기반 확충*,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완료 * LCC 공용정비고 신축('16.12, 인천공항), 제동 장치시험장비 개발완료('15.12) 및 엔진부품 정비기술 개발('15.11~'17.6, 대한항공) 등 ** 외국인 진입규제 폐지(참여가능 지분 49% → 100%, '16.3월 항공사업법 제정) - 핵심MRO 사업자 선정관련, KAI가 MRO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평가가 진행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의 MRO 사업계획 평가결과, 사업성이 있을 경우 MRO 사업자로 선정·지원 예정 ○ 국내수요가 많은 엔진·부품의 수리기술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추진(~'22년)
항공정책실	116. 항공정비 이월 및 부실정비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책 마련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계통·원인별 MEL 적용 현황 자료수집·분석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MEL: 항공기 운항지연·결항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결함의 수정조치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정비이월 감소대책 마련 - 수리자재 미확보, 정비시간 부족 등 정비이월 원인해소 등 개선 조치
항공정책실	117. 제5차 공항개발 중 장기종합계획의 수요 예측이 실제 수요 증가율에 크게 미달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장래 항공수요는 중장기적인 인구추이 등을 감안한 예측치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별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근의 항공여건 등을 반영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보정하고 있음
항공정책실	118. 정비이월 및 최소 휴식 시간 등 항공기 정비 관련 제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이월 및 최소 휴식시간에 관한 국제기준 검토 중 <p>* 정비업무 시작 전 최소 8시간의 휴식시간 보장, 연속되는 7일중 24시간은 업무에서 제외, 정비 업무를 연속 1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 (운항기술기준 9.3.4.2)</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AO 국제기준,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19. 공항 소음대책 사업비 국고지원금 감액 문제점 및 소음대책사업비 자원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부담금 개선방안 마련('17.2) - 항공기 기종별 소음수준에 따른 등급 체계 및 요율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 <p>*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 예정('18.1 시행)</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사업 사업비 적정 편성 - 예산 편성 시 소음대책사업 추진상황(사업량)등을 고려하여 자원별* 사업비를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17.12) <p>* 정부지원금, 소음부담금, 한국공항공사 착륙료 수익의 75%</p>
도로국	120.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도로사업계획의 집행 부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저비용 고효율 투자사업을 발굴(시설 개량 사업 등) 및 반영 추진('16.8)
도로국	121.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 - 국가교통DB('03년 구축)를 매년 갱신·보완하고, 수요예측 기준인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을 지속 개선 중(5차 개정)이며, 부실예측 조사기관 제재 강화* <p>* 과태료, 벌칙 부과 근거 마련(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2~)</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계별 교통수요를 검증하고, 필요시 수요예측 재조사* 시행 *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도로국	122. 예비타당성조사 시 주말 통행량 등 특이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 교통량 등 여가통행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등에 개선 방안 요청('16.11)
도로국	123. 한국도로공사 공익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부처(안)으로 '15년 통행료의 보전 대상 감면액(2,538억)의 약 10%수준인 25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미반영 - '11년부터 매년 예산을 요구중이나, 관련 법령이 임의 규정이고 타 공공부문 확대를 우려하여 예산 당국은 정부(안)에 미반영 * '12, '13, '17년도에는 상임위에서 200~250억원 반영되었으나 최종 예산에는 미반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 추진
도로국	124. 고속도로 공사비 집행 잔액의 도로공사 출자 전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출자금 매칭 및 정산방법 개선방안을 마련('16.11)하여 시행 중 - 집행잔액이 주로 발생하는 기타공사의 발주와 총사업비 변경을 원칙적으로 준공 전년 5월 이전에 완료하여 집행 잔액 등을 예산 편성시 반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연도에 사업비 분담비율(국고 40%, 도공 60%)에 따라 집행잔액 등을 정산하고, 최종 도공 출자액 결정 * 도공으로부터 준공 3개월 전에 정산계획을 제출받아 사전 심사
도로국	125.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 중 * 기간연장+사업자변경(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 연구용역('16.11), 국회설명회('16.12), 지역설명회('17.1), 장관방침결정('17.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17.6) ○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인하('17.12)
도로국	126. 민자와 재정 도로간의 통합, 정부 중심의 도로 투자 등 민자고속도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고속도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민자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16.12) * 주최 : 국토교통부, 주관 : 국회의원 전현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 마련('17.12)
도로국	127.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참여 검토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구리 구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종-안성 구간은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128. 서울-세종 고속도로 국고 보상비에 대한 국회 심의 전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보상비 국회 예산심의 후 착공 하였음 ('16.12)
도로국	129. 경인고속도로와 인천-김포 고속도로 연결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김포 고속도로를 개통하여('17.3월) 경인고속도로와 연결완료 - 인천시가 관리하는 청라지구 진입도로(남청라IC~ 서인천IC)는 간선기능을 충분히 수행 중 ☞ 청라지구 진입도로의 고속도로 지정은 실익이 적음 ※ 인천시는 청라지구 진입도로의 무료 고속도로 지정(인천시→도공 관리)을 요구
도로국	13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명칭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 도로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현 명칭으로 결정('10.12월) * 대통령령(고속국도노선지정령) 개정·고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명 변경 당위성에 대한 관계기관, 도로이용자 등의 공감대 형성 시 검토가능
도로국	131.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25년 동안 사용되어온 명칭을 변경 시 이용자 혼란 및 서울시 등 타 지자체 반발 우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서울외곽순환선 밖의 ‘수도권제2순환선’ 명칭을 ‘수도권순환선’으로 변경하는 대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도로국	132. 위험물 수송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제한 등을 규율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방법 및 제한 등 도로법 개정안 마련 * 고속도로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방안 연구 I (도로교통연구원, 2016) ※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이후 도로법 개정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 로드맵 및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방안 수립 (2017)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 세부 실행방안 수립 (2018)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방안 연구II (도로교통연구원, 2017~2018)
도로국	133. 터널 내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필수 안전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터널 안전관리 대책 수립 (‘16.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시설 보완, 터널조명 개선, 통합 관리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개정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하는 국도 터널에 대해 금년말까지 시설기준 이상으로 보완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134. 기준에 미달하는 국도 터널 조명 교체 등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조명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17.3) - 공용중인 터널을 대상으로 휘도측정과 분석을 통해 터널조명의 성능평가 등 적정성 여부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터널 조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17.8월), '18년까지 조명개선 단계적 추진
도로국	135. 화물차 과적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제한 위반차량 근절방안 기획 연구('15.11.20) - 효율적인 운행제한 위반 단속을 위해 최적단속지점 선정 * (현행) 144개소 → (추가 신설) 42개소 → 총 186개소로 운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단속 지점 42개소 설치 완료 예정
도로국	136. 대중량 건설기계의 도로 통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 불가능한 중차량 등 운행 노선 선정 연구용역 준공('16.12.27) - 건설기계 등 분리 불가능한 차량 및 중량 화물 운반차량에 대해 운행허가 없이 다닐 수 있는 주요노선 마련 * 교량이 없고 대중량 차량 통행이 빈번한 10개 노선 22개소(총연장 175km)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차량 운행 완화노선 선정 구간 관련 도로관리청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 완화노선 고시 예정
도로국	137. 국도26호선 진안-전주 도로 중 소양-진안 구간 고갯길에 대하여 선형개량 과정에서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소양~진안 구간 고갯길(소태정) 터널 계획 반영('16.8)
도로국	138. 추진 중인 도로박물관 건립 사업을 재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도로기술 홍보와 교통안전 체험 등을 목적으로 사전 타당성 여부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0월 국감 등의 지적에 따라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황
철도국	139.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타제도, 투자평가 지침 등 개선 건의
철도국	140. 철도 터널 및 교량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진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활성단층대에 관한 조사 및 관련 구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시설물 내진성능 특별점검」 실시 ('16.10.4~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존 철도 시설물의 경우 1·2종 1,651개소 중 지진이 발생한 영남지역은 전수(430개소)점검하고, 영남 외 지역은 C등급 이하(81개소)를 점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현재 건설중인 1·2종 시설물 129개소를 전수점검 - (결과) 점검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없으며 안전상에 이상 없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설계기준 내진성능 강화기준 마련 - 국민안전처에서 공포하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맞추어 철도설계기준 내진성능 강화기준 마련 <p>* 내진공통기준 공포 후, 1년 6개월 이내에 각 실·국의 설계기준 정비</p>
철도국	<p>14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용량이 이미 포화상태인 청량리~망우 간 중앙선 2복선화 사업 등 수요가 확인된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 :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16~'25) 반영(운영효율화 제고사업) ○ '16.10 : 용산~망우 2복선화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목구간인 용산~망우간 용량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전타당성조사('16.10-'17.5) 후 예타 등 후속조치 시행 ○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이 용산~망우 2복선 기능을 포함·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검토 추진
철도국	<p>142.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 수행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철도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세부 처리 방안 용역」(‘15.7~’17.6, 서울대 산학협력단)</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민자역사 관계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 연내에 세부적인 처리방안 마련
철도국	143. 철도차량 구매가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차량 구매는 공정 경쟁을 위해 국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 중 * 발주 물량이 적고 발주시기 불규칙 등으로 해외제작사의 입찰 참여 저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차량 구매 경쟁입찰을 촉진하기 위해 발주방식 개선 지속 검토
철도국	144. 수요가 충분한 평택~오송 간 철도건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 : 평택~오송 민간투자사업 제안(현대산업개발) ○ ‘16.6 :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16~’25) 반영(운영효율화 제고사업) ○ ‘16.6~ : 평택~오송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중(KDI)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타당성 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45.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관련 신월역사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검증 결과('14.8~'15.5, KOTI)에 따라 김해시 사업비 분담 필요(B/C=1.26, R/C=0.54) - 김해시와 사업비 분담 방안 협의 중(~'17.6월) (총사업비 230억원 : 국가 28억원, 지자체 202억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분담 방안을 조속 확정된 후 신월역사 설치를 적극 추진
철도국	146. SRT 개통에 따른 코레일과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하여 코레일의 적자 운영과 국민 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T 개통('16.12) 6개월이 채 경과되지 않은 상황으로 - SRT와 KTX의 수요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다만, 코레일은 광명-사당 셔틀버스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 등 적자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이 공공성과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균형있게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음
철도국	147.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 허가 및 코레일 KTX 노선 증편 관련 국회 결의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검토 및 처리하여 줄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의 차량·조직 등 운영여건 감안 시 현시점에서 노선추가는 곤란 ○ KTX 전라선 증편은 수서고속철도 개통 시 증편 완료('16.12) - 전라선 운행횟수 8회 증편 (20회→28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48. 세종역 신설 요청에 대하여 관련 자치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월 : 이해찬 의원 세종역 신설 검토 요청(국토위 임시회의) ○ '16.8월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국회의 요구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 ○ 향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임
철도국	149. 세종역 신설 대안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의 개념을 확장하여 대전,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지자체 운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세종, 오송 등 지자체에서 추진 의지 표명하면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
철도국	15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인천 2호선 광명역 연장사업 적극 추진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2호선 도시철도 사업은 지자체 운영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망계획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적극 검토
철도국	151. 인천2호선 연장노선과 신안산선 매화역 연결 검토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화역 신설 여부 등 신안산선 진행 추이를 보며 인천2호선 연장노선의 대안으로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52. 오정역에 환승시스템 구축, 조차장역에 여객 기능 추가, 신탄진역 서측에 승강장 기능 추가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정역 환승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진행 중 ○ 조차장역 추가 시 타당성이 감소하고, 신설되는 오정역과 역간 거리가 짧아 (1.6km) 오정역으로 통합하도록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탄진역 서측 승강장 기능 추가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추진시 검토
철도국	153 인천2호선 차량구매 관련 감사원이 지적한 현대로템의 과소납품 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소납품으로 인해 안전불안을 야기한 데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향후 안전운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 배경 및 과소납품 분쟁 원인 등 관련사항 조사(~'17.04.) ○ 각 시·도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운행안전을 확보토록 요청('17.04.)
철도국	154.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차질 없이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 타당성 미흡, 비용분담 불가 등의 이견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 매몰비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17.0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55. 열차 개조에 대한 승인·허가 등 안전성 확보 절차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17.2.3) - (주요 내용) 개조 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신고토록 하며, 적정개조 능력이 있는 자가 개조를 수행토록 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이 국회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
철도국	156. 인천2호선 차량기지 내 탈선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사고 등에 대한 보고절차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보고대상이 아니나, - 차량기지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고토록 지시 <p>* 공문시행(철도운행안전과-3346, 2016.12.12)</p>
철도국	157. 서울지하철 2, 3호선 노후 전동차교체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재정 여건과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은 신중한 검토 필요
철도국	158. 추진 중인 철도박물관 건립 사업을 재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박물관 관련하여 지자체 경쟁이 과도해짐에 따라 공모절차 중단('16.7월) - 연구용역을 통해 철도박물관 입지 선정 기준 마련('16.12월) <p>*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사전타당성조사 및 최적후보지 선정 용역」('15.11~'16.11)</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박물관 건립 사업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59. 스크린도어에 엄격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고장률을 낮출 수 있도록 국제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도어의 품질과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사례조사 등을 거쳐 한국철도표준규격 등에 반영 * 표준규격 개정안 마련('17.8), 공청회·철도 기술심의위원회·개정안 고시('17.12) ** 현행 기준 : 스크린도어의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SG 0068)에서는 스크린도어의 각 장치는 국제전기표준(IEC)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
철도국	160. 경부선 구포경유 KTX 시종착역을 부산역에서 부전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전역 시·종착 관련 이현승 의원님 보고('16.10.28, '16.12.14) - 부전역은 승강장 길이가 짧아 KTX-산천만 운행이 가능하여 KTX(931석)에서 산천(363석)으로 변경 운행 시 수요대비 공급좌석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 발생 - 경부선 KTX를 부전역 시·종착 시 차량회송(부산→부전)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로 고속선 또는 구포역 경유 KTX 운행감축 불가피
철도국	161.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수요 등 장래 주변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반영여부 검토

공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1. 행복도시 내 단독주택 건립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활성화 방안관련 전문가(행정중심 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자문 추진('17.01.24) * (자문내용) 현재 건축된 단독주택은 일부로서, 추후 공급할 만여 필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동일 안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 조정체계 소위원회 개최('17.3.7) 및 도시 계획위원회 개최('17.3.3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활성화 방안(안) 마련(2분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2. 회덕IC 건설을 위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2 10.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총사업비 721억 규모로 B/C= 1.82, AHP= 0.648가 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비 등을 요구 하여 사업 추진 할 예정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3.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14.3.) - '16.11월에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금지, 재당첨(최대 5년)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을 실수요 위주로 청약제도 개선하여 시행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4. 세종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편의시설 지속 확충 * 사업자등록현황 5,692개('16.12 기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편의시설이 도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 편의시설 확충 예정 * 코스트코('18년), 세종충남대병원('19년), 국립중앙수목원('20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5. 국립세종도서관 외부 석재 부실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및 외부 마감석재에 대한 교체를 결정하고 우선 옥상 마감석재를 교체 완료('16.12) - 당초 마감석재인 라임스톤을 화강암 계열의 '아이보리 화이트' 등으로 교체 ○ 건축자재의 품질과 공법 및 디자인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자재위원회를 구성 운영('16.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마감석재에 대하여도 '17.3~11월 까지 화강석 계열의 석재로 교체할 계획(교체공사 '17. 3. 27 착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6. 기업·대학 등 유치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유치를 위해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근거 법안 마련('16.10. 발의) ○ 기업 등 유치를 위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자격의 확대('16.10.7. 시행,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던 업종제한을 폐지) ○ 대학용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마련('17.3.6) * 토지공급지침에 반영 예정('17.상반기)

새 만 금 개 발 청

공백

□ 새만금개발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새만금개발청	1. 삼성그룹 등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투자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2.22) 및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3.8 경제장관회의 보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6.12.27)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MOU 체결 기업의 지속적 접촉, 간담회 및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
새만금개발청	2.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방식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2.22) 및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3.8 경제장관회의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 중심의 투자유치체계 구축 및 협업체계 강화 - 단순 홍보성행사 축소 및 투자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6.12.27)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발굴, 장기임대용지 확보 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 ○ 위탁사업 수행 평가를 통해 미비점 보완 및 개선할 계획

공백

공 공 기 관

공백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백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1. 장기미착공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 이상 장기 미착공 지구 83,415호는 조기착공 및 사업승인 취소 후 사업계획 재수립('16.12) 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한국토지 주택공사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이자율이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임대주택(국임, 행복)을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8% 이자율로 기금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전용면적 30㎡이하 소형주택은 1.0% 이자율 적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분양 및 공임주택의 기금 융자 이자율 하향조정을 국토부에 건의('16.10) 																
한국토지 주택공사	3. 기존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택지개발용 일시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현행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감면 조항 유지(일몰연장)관련 법률안 통과('16.12.01) <table border="1" data-bbox="778 1395 1463 171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기존 (~'16.12)</th> <th style="width: 25%;">개정 ('17 이후)</th> <th style="width: 25%;">일몰 기한</th> </tr> </thead> <tbody> <tr> <td>일시취득부동산 (취득세)</td> <td>30%</td> <td>20%</td> <td>2019 12.31</td> </tr> <tr> <td>소규모 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td> <td>50%</td> <td>50%</td> <td>2018 12.31</td> </tr> <tr> <td>다가구 매입임대 (취득세·재산세)</td> <td>50%</td> <td>50%</td> <td>2018 12.31</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16.12)	개정 ('17 이후)	일몰 기한	일시취득부동산 (취득세)	30%	20%	2019 12.31	소규모 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50%	50%	2018 12.31	다가구 매입임대 (취득세·재산세)	50%	50%	2018 12.31
구분	기존 (~'16.12)	개정 ('17 이후)	일몰 기한															
일시취득부동산 (취득세)	30%	20%	2019 12.31															
소규모 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50%	50%	2018 12.31															
다가구 매입임대 (취득세·재산세)	50%	50%	2018 12.31															
한국토지 주택공사	4. 장기미매각 토지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매각 판매활성화 방안」시행('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장기미매각 사업지구에 대한 본사TF운영 및 지역본부 리폼전담 TFT 운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목표관리제」를 통한 장기미매각 판매목표 부여('17.3) - 판매목표관리제(내부평가지표)에 본부 별 장기미매각 판매목표 부여
한국토지 주택공사	5. 방치된 학교용지 및 문화시설용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원인 분석, Two-Track 매각전략 추진 ('16.11) - 학교용지 등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전문가 등 활용한 미매각 원인 분석 - 도시관리계획(준공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진행지구) 변경을 통한 매각활성화 추진 ○ 「장기미매각 판매활성화 방안」시행('17.2) - 매수포기한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연계한 용도변경 등 토지 리폼을 수행할 지역본부단위 리폼 전문 조직 구성·운영
한국토지 주택공사	6. 설계변경 또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사전 평가를 철저히 시행 하고 시공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착공 전) 조사설계 시행 시 현장실사 강화 및 설계VE*, 설계심의 등 공사 발주 전 사전검증 강화를 통해 설계변경 요인 최소화 * '16년 VE수행 실적 : 224건, 3,336억원 절감 ○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시 심의·심사 등 관련법보다 강화된 단계별 검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제도 운영*을 통한 설계변경 적정성 검증</p> <p>* 설계변경 검증 절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설계변경 분과위원회 심의 → ② 주관부서 합의 ③ 계약심사 → ④ 사업협의를 → ⑤ 일상감사</p> </div> <p>○ (업무프로세스 개선) 설계PM 지정제 운영, 설계실명제 시행, 설계환류 시스템 강화, 설계도서 리콜제 도입, 선진 입찰제도 도입, 설계변경 최소화 과제 발굴·시행</p> <p>○ 설계 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설계 내실화를 꾀하고, 설계VE 등 사전검증을 더욱 강화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설계변경 요인 분석 결과 상당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p> <p>* 상위계획 변경 또는 기준변경, 인·허가 변경, 매립 폐기물 발생 등 현장여건 변화로 설계변경이 불가피</p>
한국토지주택공사	7. LH 공급용지에 대한 불법전매행위 억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p>○ 공급공고문상 전매관련 유의사항 명시 및 계약체결시 불법전매 벌칙 등 재안내(16.8)</p> <p>- 전매관련 유의사항*을 공급공고문에 구체적 명시</p> <p>* 다운계약서 작성 등 통한 공급가격 초과 전매는 무효로 하고 환매가능.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1.20부터 최초계약 및 전매계약 모두 실거래신고 대상임 등</p> <p>- 계약체결(명의변경 포함) ‘판매상담체크리스트’ 교부시 전매관련 유의사항 재안내</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철저시행 및 변경사항 매수고객 대상 홍보('17.1)</p> <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1.20 시행)에 의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일 경우 국가 등에 단독 신고의무 부과함에 따라 철저 시행 및 해당내용을 매수 고객에게 홍보 실시</p> <p>*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p>
한국토지주택공사	8. 귀농·귀촌주택리츠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p>○ 임대주택(4년 임대 후 분양전환)외에 분양주택을 일정비율 배정하여 현금흐름 및 사업성 개선('16.7)</p> <p>○ 귀농귀촌주택 신축시 농림부 지원자금을 리츠에 건설자금으로 선지원하고 입주자가 대환대출할 수 있도록 시행</p> <p>지침 개정건의('16.12)</p> <p>* 호당 1억원 2% 저리대출로 금융비용 절감 사업성 개선</p> <p>< 향후 추진계획 ></p> <p>○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개정 위해 지속 협의('17년 개정목표)</p>
한국토지주택공사	9. 해외발주사업 수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p>○ 해외발주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스마트시티 해외수출을 추진 중</p> <p>-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를 통한 중동 신도시시장 진출 추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6.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계) 쿠웨이트 측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완료(’17.4.3) (용역비) 433 억원 - 볼리비아 신도시 사업 한국기업 용역수주 지원(’16.03) * (자문단 파견) 볼리비아 신도시 개발사업에 한국기업 진출 및 수주를 지원 (주요실적) 국내기업이 용역 123억원 수주 ○ 향후에도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설계업체의 용역수주 지원, 자재 수출 등 해외발주사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후 하자책임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의 하자보수청구권 강화 추진 -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어 하자보수 소홀 우려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우현의원 대표 발의(’16.12)] 추진 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완료(’17.02.23)
한국토지주택공사	11.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지표와 필요성에 입각하여 사업지역을 지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지역별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업추진 해 왔으며, ○ 신규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광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 부산지역 등 전국을 망라하는 우선 추진 후보지 선정 완료('16.12)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주거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17.1) * 실수선사례 중심으로 제작하여 홍보·교육 활용 ○ 농어촌지역 지자체 담당자 면담 등 현장실태조사 실시('17.2~3) * 전남(해남), 전북(고창), 경남(김해), 경북(의성) * 사각지대 발생요인 및 홍보필요성 조사 ○ 현장실태조사 결과 제도개선 추진 예정 * 국회 방문보고 완료('17.3)
한국토지주택공사	13.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국토부,기재부,국토위,예결위) 방문 설명 및 사업지속 요청 * 국토교통부(5회), 기획재정부(3회), 국토위 및 예결위 의원 방문 설명(21회) ○ '18년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방문·설명 지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14.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집 처리 등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는 국토부 지속협의를 및 지원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공포('17.2.08)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특례법 제정 추진 하였으나, 농어촌지역 빈집 등 주택정비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 -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LH의 역할에 대하여 정부 부처와 지속협의를 하겠으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협조 																																		
한국토지주택공사	15. 도시활력 증진사업과 새뜰마을 사업 등 지자체 매칭사업은 집행력과 실현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지자체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활력 및 새뜰마을 사업은 신규사업 선정시 지자체의 집행력과 실현의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실현성과 지자체의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운영 * 도시활력사업 평가지표 <table border="1" data-bbox="778 1176 1465 1249"> <thead> <tr> <th>지표</th> <th>지역발전 연계성</th> <th>사업추진 전략</th> <th>지역사회 협력체계</th> <th>실현 가능성</th> <th>기대효과</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10</td> <td>20</td> <td>20</td> <td>35</td> <td>1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뜰마을사업 평가지표 <table border="1" data-bbox="778 1321 1465 1422"> <thead> <tr> <th rowspan="2">지표</th> <th colspan="3">정량지표</th> <th colspan="3">정성지표</th> </tr> <tr> <th>생활안전 인프라</th> <th>주택환경 기준</th> <th>사회경제 환경기준</th> <th>계획 적정성</th> <th>지자체 의지</th> <th>주민 참여</th> <th>지역 특수성</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20</td> <td>15</td> <td>15</td> <td>20</td> <td>10</td> <td>10</td> <td>10</td> </tr> </tbody> </table>	지표	지역발전 연계성	사업추진 전략	지역사회 협력체계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배점	10	20	20	35	15	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			생활안전 인프라	주택환경 기준	사회경제 환경기준	계획 적정성	지자체 의지	주민 참여	지역 특수성	배점	20	15	15	20	10	10	10
지표	지역발전 연계성	사업추진 전략	지역사회 협력체계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배점	10	20	20	35	15																															
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																																
	생활안전 인프라	주택환경 기준	사회경제 환경기준	계획 적정성	지자체 의지	주민 참여	지역 특수성																													
배점	20	15	15	20	10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6.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한 후에 사업규모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비쿼터스도시 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조사평가를 시행한 후 결과보고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17. 택지조성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의 수분양자 전가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정기 연구과제 「사업스케줄 고려한 LH표준 토지 공급·회수 개발」('16.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방지 대책 및 표준화된 대금회수모델 개발에 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적 판매시행)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판매전략 지속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판매업무 추진목표 및 전략 기시행('16.12.09) ○ (조성공사 적기이행) 철저한 공사 일정 관리로 준공 지연요인 최소화
한국토지주택공사	18.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 활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나라e음 영상회의시스템 개통 ('16.5.4) : 110여건 회의 시행 ○ LH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계획 수립 ('16.12.5) - 회의실용 영상회의시스템 개통('17.2.13) * (전용회의실) : 본사 및 지역본부 총 28개소 * (회의실적) : 50여건 ○ 영상회의 활성화대책 수립(기조실, '17.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9. LH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전액 일시불 납부방식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개정검토('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대기간 연장 (1년→2년) - 임대료 분납방식 도입(임차운영자 선택)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개정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20. 임대주택의 녹물 발생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조 청소시점에 맞추어 방청 및 시설물 교체작업 진행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상반기내 조치완료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21.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공공임대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복도새시 및 발코니새시 개선사업 적극 추진 * 노후공공임대주택현황 : 166개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새시공사현황 : 60%(101개 단지) - 복도새시공사현황 : 81%(136개 단지) ○ '17년 예산확보를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추진중 * '17년 추진단지 : 10개 단지(발코니새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이후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적극 방문·설명 지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22.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및 역할 강화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 경비 지원 근거마련('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관리 종합평가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단지 가점부여(계속) ○ 미구성단지 구성 지속 독려 ○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강화위한 제도개선('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청소 용역업체 등 재계약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23.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 임대주택의 공용관리비가 적정 수준에서 산정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LH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규약 개정('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수익 사용제한 및 잔여 잡수익의 관리비 차감분 확대(70% → 전액) * 공동전기료 세대별 부담 완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방안을 마련할 것	(임차인에 유리한 방식으로 한전과 계약) ○ 관련 협회비 등 관리비 부과 금지('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24. 분양주택 대비 임대 주택 관리비 연체요율이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검토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현 연체요율은(7%) 서울시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상 연체요율(12%) 보다 낮음 ○ 연체징수금은 공사 수익과는 상관없이 잡수익 처리되어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반영예정
한국토지 주택공사	25.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 주택 중 1년 이상 장기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물량이 8,810호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인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수요 맞춤형 주택 매입 추진('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공실이 우려되는 소규모 주택(30㎡이하)에 대한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매입쿼터제 도입 ○ (건설임대주택) 전수조사 실시로 사유별 공가 원인분석('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 미성숙에 따른 수요부족 45%, 예비자입주관련 절차이행 30% 등 <p>< 향후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요 계층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물량의 30% 범위 안에서 특정계층에 맞춤형 탄력적 공급 * (특정계층) 대학생, 산단 등 저소득 근로자, 다문화 가족 등 - 지자체·NGO와 주거지원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 연계를 강화한 장기미임대지원 * (NGO) 주거복지재단의 72개 운영기관 등과 수요자 연계 공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임대주택 - 장기공가 축소를 위한 대책수립 ('17.4) * (주요내용) 공가관리지침제정, 업무프로세스 및 내부평가지표 개선 등 * 대책 수립 후 공가관리실태 점검추진 ('17.12)
한국토지주택공사	26.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대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약자의 고충을 감안하여 사전 예약가격으로 공급 ○ '16년 3개블록 2,802호 공급 * 구리갈매 S1 1,033호, 시흥은계 B2 835호, 하남감일 B7 934호 공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4개블록 3,300호 공급예정이며, 잔여 5개블록 4,504호는 '18년까지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 ('17년 공급계획) 하남감일 3개블록 2,102호, 시흥은계 1개블록 1,198호 * ('18년 공급예정) 하남감일 3개블록 1,911호, 시흥은계 2개블록 2,593호
한국토지주택공사	27. 임대주택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정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임대조건을 다르게 적용중('93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급여 중복지원, 계층별 임차료 차이에 따른 문제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영구임대외 임대주택 적용에 따른 공사 임대사업 손익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p> <p>* 연도별 임대손익 (단위: 억원)</p> <table border="1" data-bbox="810 450 1465 517"> <thead> <tr> <th>연도</th> <th>'11</th> <th>'12</th> <th>'13</th> <th>'14</th> <th>'15</th> </tr> </thead> <tbody> <tr> <td>당기순이익</td> <td>△6,188</td> <td>△7,265</td> <td>△7,057</td> <td>△8,621</td> <td>△9,713</td> </tr> </tbody> </table>	연도	'11	'12	'13	'14	'15	당기순이익	△6,188	△7,265	△7,057	△8,621	△9,713
연도	'11	'12	'13	'14	'15									
당기순이익	△6,188	△7,265	△7,057	△8,621	△9,713									
한국토지주택공사	28. 영구임대주택 입주기간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 신규 공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도부터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여 '16년도까지 9,085호 공급 ○ 영구임대 재계약 거절 기준 마련('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자산 기준 초과에 따른 재계약 거절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 고소득자, 고액 자산 보유자 퇴거 후 대기 중인 수급자 등이 입주하면 입주 대기기간 축소 예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지속 공급추진('17.12) <p>* '17년 공급계획: 1,884호</p>												
한국토지주택공사	29. 임대주택 불법임대 또는 불법전대 등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불법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수립·시행('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실태조사 전담인력 채용 운영 - 불법전대자 및 알선자 고발처리기준 수립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30.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소득·자산요건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입주를 방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격 검증 후 부적격자는 철저히 제외 추진 ○ 매 2년 경신계약시 입주자격 검증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신계약시 입주자격(주택, 소득, 자산)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는 퇴거조치 중
한국토지 주택공사	31. 행복주택 입주자격 개선, 입주대기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6.12)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 청년창업자,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하도록 자격확대 ○ 입주자 모집시 당첨자와 별도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중
한국토지 주택공사	32. 임대료 장기체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범사업 실시 ('16.12~'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자동이체 도입으로 입주자 납부편의제고 및 체납해소 기여 * 최근 3년간 임대료 체납은 감소 추세임 - '14년 4.7%→'15년 3.9%→'16년 3.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체납 해소방안 수립·시행('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자체 체납해소계획 수립, 적극추진 ○ 카드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전면 확대시행을 통한 체납해소 촉진 유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33. K-타워 프로젝트 참여 기관에서 미르재단을 배제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중지('16.12월) ○ 추후 사업을 재개할 경우,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로운 협업대상자를 선정하겠음
한국토지 주택공사	34. K-타워 프로젝트 협업 대상자로 미르재단이 포함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개입에 따른 것인지 LH의 자체적인 판단인지 명확하게 해명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이란 순방 관련 BH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를 만났으며, K-타워 프로젝트 협업 대상자인 미르재단은 LH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선정하였음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르재단은 국내 16대 대기업의 출자로 이루어졌고, 재단의 역할이 국제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기관으로 인지 - 향후 K-타워 사업진행시 문화컨텐츠에 대한 조언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이란 파트너 물색 및 MOU 체결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 4.21(목) : 대통령 이란 순방 관련BH 회의 (산업비서관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LH) 해외사업처장 (타기관) 산업부, 코트라, 포스코, 코오롱글로벌, 미르재단 등 - 내 용 : MOU 진행현황 보고, 미르재단 관계자(이한선 이사) 만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6. 4.22(금) : LH가 미르에게 MOU에 포함(한류 교류관련) 하고 싶다는 의사 제시(유선: 해외사업처장↔이한선 이사) → 미르재단은 MOU(안)을 보내주면 검토하겠다는 의사 피력 → 4.23(토) MOU(안) 미르 송부</p> <p>‘16. 4.25(월) : 미르로부터 동의 받음(유선) → (영문본) “ 2 1 (b) One of organizations to promote Korean cultural exchange will be MI-R Foundation which was established by Korean big 16 companies.”</p>
한국토지주택공사	35. 내진성능 보강 및 대피시설 안내 등 임대주택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배포(‘15.10) - 「임대주택 재난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발간 및 배포 ○ 내진설계 미적용단지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시행(‘17.1~12) - 건설임대 중 내진설계 미적용된 6개 단지 2,090호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 및 지진 국민행동요령(소책자) 배포 예정 ○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 등 조치방안 수립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임대주택에 지진·화재 등 재해·재난사고 대응 매뉴얼과 대피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대응 계획 수립(‘16.9) - 지진대응 매뉴얼 수립 및 배포, 홍보 플랭카드 설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하고, 매뉴얼과 대피시설에 대하여 입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 및 지진 행동요령(책자) 배포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37.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내진성능을 조사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설계 미적용(추정)된 매입임대주택(다가구)은 '17년 건설임대 평가용역 결과를 토대로 '18년도에 성능평가계획 수립 예정 - 건물유형별, 경과연수별 샘플링 조사하여 성능평가 가능여부 판단 후 대책 수립 																					
한국토지주택공사	38. LH 건설 및 매입주택의 하자 건수를 줄이기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 수립(대책수립 : '16.7.27) - 『호당 하자건수 계량목표』 수립·관리 <table border="1" data-bbox="778 1240 1465 1344"> <thead> <tr> <th>구분</th> <th>16년</th> <th>17년</th> <th>18년</th> <th>19년</th> <th>20년</th> <th>누계</th> </tr> </thead> <tbody> <tr> <td>분양</td> <td>0.25</td> <td>0.22</td> <td>0.20</td> <td>0.18</td> <td>0.16</td> <td>매년 10% 저감</td> </tr> <tr> <td>임대</td> <td>0.15</td> <td>0.14</td> <td>0.13</td> <td>0.12</td> <td>0.11</td> <td>매년 7% 저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단계 총 48개과제 추진 ('16년 23% 추진) * (법·제도) 하자담보책임관련 하자 3 법 일치, 공사기간 탄력적 조정, 품질관리지표 도입 등 * (설계) 설계도서 검증강화(주택품질전문가), 실시설계 BP도면, 설계업체 평가 강화, 승강기 성능향상 시행, 인공지반 배수시스템 개선 등 * (자재) 자재성능확인 TFT운영(철근, 레미콘, 벽지, 실리콘 등 공장점검) * (입찰) 중심제상 부실시공, 하자다발업체 제재 추진 * (시공) 6대 하자빈발공종 성능향상(타일, PL),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수목고사 방지 대책, 구매 등 수처리 성능향상 등 * (준공·입주) 준공검사 3단계 추진(6.2만호)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계	분양	0.25	0.22	0.20	0.18	0.16	매년 10% 저감	임대	0.15	0.14	0.13	0.12	0.11	매년 7% 저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계																	
분양	0.25	0.22	0.20	0.18	0.16	매년 10% 저감																	
임대	0.15	0.14	0.13	0.12	0.11	매년 7% 저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하자관리) 고객평가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하자관리시스템 도입, 품질커트라인제 도입, 입주청소 서비스 개선, VOC청취, 친절교육, 하자신문고제 시행, 하자선처리 시스템 구축, 기획소송 최소화 대책 등</p> <p>* (장기수선) LCC고려 자재·공법 개선, 환류 활성화 등</p> <p>- 대내·외 품질경영 확산 노력</p> <p>* ('16. 9~10월) 임직원 결의대회</p> <p>* ('16. 11월) 건설관계자합동 대국민 고객선언</p> <p>○ 추진성과</p> <p>- (지난 3년간 호당 하자건수 저감 달성)</p> <table border="1" data-bbox="778 929 1465 1032"> <thead> <tr> <th>구분</th> <th>13년</th> <th>14년</th> <th>15년</th> <th>16년</th> <th>누계</th> </tr> </thead> <tbody> <tr> <td>분양</td> <td>0.42</td> <td>0.38</td> <td>0.28</td> <td>0.25</td> <td>3년간 39% 저감</td> </tr> <tr> <td>임대</td> <td>0.17</td> <td>0.14</td> <td>0.16</td> <td>0.15</td> <td>3년간 12% 저감</td> </tr> </tbody> </table> <p>- (하자처리율 92%, 처리기간 80%단축)</p> <p>* 하자처리율 : 74% ➔ 92%</p> <p>* 하자처리기간 : 35일 ➔ 7일</p> <p>○ (매입부문)</p> <p>- 매입주택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필요시 신속히 조치 예정</p>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누계	분양	0.42	0.38	0.28	0.25	3년간 39% 저감	임대	0.17	0.14	0.16	0.15	3년간 12% 저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누계															
분양	0.42	0.38	0.28	0.25	3년간 39% 저감															
임대	0.17	0.14	0.16	0.15	3년간 12% 저감															
한국토지주택공사	39.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인증 신제품 구매를 촉진할 것	<p>< 조치실적 ></p> <p>○ '16년도 인증신제품(NEP) 구매실적은 136억원(구매율 51.2%)으로 '15년(구매율 41.7%) 대비 9.5% 증가하였음</p> <p>< 향후 추진계획 ></p> <p>○ 인증신제품 업체와의 1:1 구매상담회 실시 및 내부 설명회 개최, 상설 전시관 운영 등 인증신제품 판로지원 및 구매 촉진 추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40. LH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 “공정거래상생추진단” 신설·운영」(‘16.7) - 체불업체 제재기준 강화(‘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불업체는 관리하수급업체로 지정(3년간 공사참여 제한) - 체불민원 처리과정 알림서비스 시행(‘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상담원을 배치, 체불민원 처리기간 단축 -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 확인 강화(‘1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대금지급결과 확인 및 이행소홀 시 경고장 발급 등 제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RFID) 활용기준 개선 - 체불 Zero 목표제 도입 및 포상 방안 마련 - 체불 및 불공정 행위 현황 공개(매월)를 통한 체불행위 감소 유도
한국토지 주택공사	41.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감경하지 않고 처벌수위를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담합행위를 억제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심사낙찰제 입찰담합 징후 진단 및 운영 방안’ 수립·시행(‘16.11.11) - 현재까지 담합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종심제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담합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으로 입찰자 경각심 고취 및 담합의지 사전차단
한국토지 주택공사	42. LH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사고방지 교육 및 건설공정 품질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관리 실무자과정 교육(‘1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LH 공사감독원 * (내용)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반 - 건설안전 전문화교육 이수(‘16. 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본사 안전관리 담당자 *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 - 재난안전관리 관리자과정 교육('16.11) * (대상) LH 공사감독원 * (내용)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반 - 안전TV 도입('16. 7) * (내용) 근로자 휴게소, 식당, 사무실 등에 안전 TV 설치하여 지속·반복적인 안전교육 실시 ○ 품질강화를 위한 점검 및 평가제도 개선 -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 지도점검 * (100억원 미만) LH 신규참여 등 시공경험부 족업체의 지도점검강화로 부실시공 방지 - 시공평가 제도 개선('17. 1) * 시공평가 항목 품질관련 배점 상향 조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 분야 전문교육 확대 - 안전관리자 LH 맞춤형 교육 실시 - 건설안전 전문화교육 확대 시행 * 외부 전문기관 전문화교육 이수 확대(본부별 2인 이상) - 재난안전 전문교육 시행 *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안전교육 이수 * 자체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전사적 품질 대토론회」 정례화로 본·지사간 시공개선 사례 등 기술정보 교류확대로 품질향상 유도 - 건설현장 납품자재(KS, 인증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기준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43. 양질의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납품 요건을 강화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직접구매자재를 조건부 간접구매로 우선 시범적용 후 확대토록 협의 추진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간접구매: LH 직접구매와 동일 조건으로 건설사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 ○ LH 우수업체 선정 및 부실업체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협의 추진(중소기업청,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신인도부분)에 우수 및 부실납품에 대한 격려·경고장(가·감점)내용 반영 * (격려장) 우수납품업체에 발급, 1회 발급(가점 1점), 2회이상 발급(2점) * (경고장) 부실납품업체에 발급, 1회 발급(감점 -1점), 2회발급(-2점), 3회이상 입찰제한
한국토지 주택공사	44. LH와 주택관리공단(주)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주택관리공단(주) 간 임대운영업무 위탁 약정 원만히 체결('16.6) ○ LH-주택관리공단(주) 간 상생워크숍 개최('16.2월부터 총 5회 개최)
한국토지 주택공사	45. 임대주택 관리업무 위탁과정에서 (주)주택관리공단과 비교할 때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례가 있다면 시정할 것	<p><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단지 사례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과도한 협조의무 부담사례가 있을 시 적절한 조치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46. LH 소속 직원들의 부패 행위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 달성을 위해 2017년 부패척결단 운영('17.2.7) - RAS*를 활용하여, 부정부패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 * RAS(real-time Audit System) : 사업프로세스에 대한 실시간 감사정보를 제공하는 전산감사시스템 ○ 임직원 내부통제 시스템 활성화 - 내부 통합신고방(청신호)을 개선하고, 외부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 활성화
한국토지 주택공사	47. LH 퇴직자가 소속된 설계·감리 용역회사의 LH 설계·감리 용역 수주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도부터 시행중인 LH클린심사 제도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중으로 퇴직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시스템 구축 - 위원선정과정 공개 - 심사 전과정 실황중계 - 심사위원, 심사결과 온라인 공개 - 신문고 사이트 운영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관련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시스템 지속적 보완·개선 및 심사위원 청렴교육 실시 - 심사위원 대상으로 클린심사 워크숍 개최 및 청렴교육 실시 - LH-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사제도 개선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48. 경력업무직원제도 개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업무직원에게 주거급여소장, AMC 지점장 등 기존직무 외에 판매전문 PM, 지역개발사업 평가위원 등 신규 직무를 발굴하여 부여('17.1)

한국수자원공사

공백

□ 한국수자원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수자원공사	1. 4대강 부채 상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 사업 등 수자원공사의 고유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4대강 부채는 발전·단지사업 순이익 등을 활용하여 상환 * 물공급 등 핵심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댐·수도 용수사업은 원금 상환에서 제외 ○ 사업별로 철저한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수도 등 고유사업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 * ‘15년 대비 ‘16년 수도사업 투자예산 853억원 증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부채 분담 계획에 따라 개선된 재무여건을 기반으로 물관리, 물복지 등 고유사업 역량 강화 추진
한국수자원공사	2.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계획을 수공 자체사업의 추세·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 및 단지사업 비상계획 수립 등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 수립 - 단지분양 촉진, 원가절감 등 사업 수익성 강화 및 자구 노력을 병행하여 외부변수 영향 최소화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부채상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수자원공사	3. 4대강 수질개선 및 녹조 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대강 보의 수문개방 문제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펄스방류 시행('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결과 수체 혼화에 의한 성층완화 및 조류감소 효과확인 ○ 댐-보 연계 시범운영('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 금강 8개보 대상 시범운영 ○ 유역오염원 저감사업 및 녹조저감 설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계기금 활용 유역사업 등 시행(~'16) - 물순환장치, 수류확산장치 등 운영 ○ 보 수위저하 시범운영 및 지하수 영향 조사('17.2~4)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시행('17.4~) 등 지속적인 개선대책 수립·이행 계획
한국수자원공사	4.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현안 관련 수질/녹조 분야 기획연구 추진('16.9~10) ○ 4대강사업 후 지속 제기된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안전성, 수질·생태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t 4대강사업 「하천관리개선 TF」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모니터링 및 종합적 하천관리 개선 방안 마련 ○ 4대강 녹조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거동해석 및 예측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적 녹조대응 연구과제 추진('17~'1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수자원공사	5. 4대강 보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기능보 특별점검」 실시('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기 후 시설물 이상 유무 및 하자만료 공종(바닥보호공, 수문)에 대한 중점 점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하자만료 공종에 대해 정밀 점검 실시
한국수자원공사	6.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14.3, '15.4) ○ (설계비반환청구)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 환수 청구('14.4, '15.5)
한국수자원공사	7.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세종보의 통수 및 철거의 타당성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개선 방안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보 수위 저하 운영 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탄력적 보 수위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1차 : '17. 2.20 ~ 3. 4, 2차 : '17. 3.13 ~ 3.24 ○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검토 후 개선 방안 수립·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조발생 예상시기에 일정기간 동안 지하수위 등을 고려한 탄력적 보 수위 운영 등 생태환경 개선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수자원공사	8.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수립('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관리 우선소권역 선정 및 지류 하천사업 도출 ○ 펄스방류 및 댐-보 연계 시범운영 시행 ('15~'16년) ○ 녹조대응 전담조직 신설('17) 및 녹조 저감설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수질측정기, 탐지기술 및 저감설비 지속 확대 ○ 댐-보 연계운영 통한 확보수량 최적 활용 및 정부 합동점검 등 오염원 저감 조치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도랑 참여,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자체수립 * 수질개선사업 참여 및 정부·지자체 정책반영 등
한국수자원공사	9.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및 염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들(염분 예상 영향 범위내 지자체 등)의 사회적 합의 선행 후 향후 추진방향 등을 도출하여 이행 계획
한국수자원공사	10. 낙동강 하굿둑 생태계 복원 타당성 조사에 관한 3차 용역에 참여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들(염분 예상 영향 범위내 지자체 등)의 사회적 합의 선행 후 향후 추진방향 등을 도출하여 이행 계획
한국수자원공사	11. 상수도 요금상승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이익분을 활용하여 노후관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관 개량을 포함하는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최상위 계획인 ‘2025수도정비기본계획(‘15.8, 국토부)’에 반영하여 실행력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까지 노후관 227km 개량 완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1조 9천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992.3km 개량
한국수자원공사	12. '가뭄 대응 관련 요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요금 할인 및 수요관리방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시 다양한 물절약 촉진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수지원제 효과 분석 및 국내외 수요관리제도 사례 조사 등 ○ 타 공공요금 수요관리제도 등을 참고하여,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 고객자율형 수요관리 협약제도 등 개선방안 지속 검토 추진
한국수자원공사	13. 보령댐 도수로 건설 사업비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KDI 용역실시 및 결과를 근거로 국고 70% 부담 확정 ○ KDI 용역결과에 따라, 미지급한 국고 125억을 '17년 예산으로 편성·수납
한국수자원공사	14.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물 공급 모델(SWC) 개발 ○ SWC 국가 정책반영, 제도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수도종합계획, 물산업육성전략 등 ○ 파주 SWC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 중, 타 지자체로 확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 SWC 직접음용률 1%('14)→36.3%('16) * 세종시 SWC 시범사업 추진('17~'20) * 수탁 지방상수도 SWC 확대계획 : '17년 3개, '18년 4개, '19년 5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수자원공사	15. 댐의 취수탑의 내진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진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용수댐의 17개 취수탑에 대한 내진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댐의 8개 취수탑이 내진안전성 미확보 * 영천, 안계(2), 사연, 대암, 연초, 운문(2) ○ 내진안전성이 미확보된 취수탑의 신설·보강이 포함된 “댐 안전성 강화 사업”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재부, ‘16.8),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중(KDI, ‘16.9~) * 국회, 정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18년 국고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한국수자원공사	16. 댐의 지진감지기 고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지진계 전체 교체 계획 수립 및 시행(‘17.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개 댐 지진계 교체로 계측 안정성확보 - 고장시 신속 조치를 위한 예비품 확보 ○ 정기교육 및 점검 강화 지속(‘17년~)
한국수자원공사	17. 다양한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군남댐 운영 매뉴얼을 보강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무단방류(‘16.5)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MS 추가 발송, Hot-Line 추가 개설, 정보공유 확대, 위기경보 간소화 등 ○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위기감시 및 대응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 도출·시행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수자원공사	18. 영주댐 안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내성천 모래 유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댐 공사 완료 후 시험담수 시행결과, 댐체를 포함한 댐 주요시설의 안정성에 이상 없음을 확인 ○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결과, 영주댐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우수)로 평가(‘17.3) ※ 내성천 모래 유실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관리를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조절지(댐상류 13km), 배사문을 통한 모래 사전포착 및 활용 - 하상보호공(3개소)을 통한 댐하류 모래유실 방지 ○ 주기적 댐하류 하상변화 모니터링 시행 중(‘14년~) ○ 합리적 모래활용 및 댐하류 환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16.6) 및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댐 지역협의체 : 정부(3), 지자체(4), K-water(2), 전문가(4) 13인으로 구성
한국수자원공사	19.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 지역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수소통 및 홍수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법상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으로 사업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계관리기금 :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등 ○ 주요 4개 구간 하상정리 시행(‘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군 부남면 등 - 내용 : 퇴적토 제거 및 하상정리 ○ 추가 사업구간 시행방안 간담회(‘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정리 및 수문여건을 고려한 플러싱 방류 시행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수자원공사	20.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정액제 전환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안정적인 지원 사업비 재원확보 등을 위해 현행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정액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일정해야 하나 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 및 용수매출규모는 매년 변동이 있어 불안정하므로, 출연자의 댐 운영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행방식이 적합 * (발전) 전전년도 발전매출의 6% 이내 출연 * (용수) 전전년도 용수매출의 20% 이내 출연
한국수자원공사	21. 도서지역 등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용수 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확장, 지하수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및 산간지역 물공급 소외지역에 수원다변화를 통한 용수공급방안 검토·추진 중 *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확보사업 추진 * 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지역 직접 공급 등 ○ 물복지 확대 차원에서 정부 협의 및 관련 사업 지속 추진('17~)
한국수자원공사	22. 고도처리 정수에 사용되는 활성탄 품질 검사 및 납품절차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성탄 납품(계약, 품질검사 등)에 대한 검찰수사 완료 및 재판 진행 중 ○ 활성탄 품질개선대책 수립, 전파교육 - 납품구조 개선(도급→직접구매) - 반입절차 표준매뉴얼 수립 - RSSCT폐지 및 물성시험기준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중인 정수장에 납품된 불량 활성탄에 대해 전량 반출 후 신품교체 진행 중('17.12월 완료 예정) - 운영 중인 정수장의 경우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계획
한국수자원공사	<p>23.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소독제 등 유해한 정수약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원수 확보로 정수약품 사용 저감 노력 이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수 수질조사로 수질이 양호한 수심에서 취수(선택 취수) - 전 취수원 조류유입방지막 설치·운영 ○ 원수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성물질 감시장치 등 실시간수질 자동측정장치 운영 * 취수장(8개소) 및 전 정수장(생활용수, 37개소) ○ 최적 약품 주입율 결정, 적정량 주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최적 약품 및 주입율 결정, 최적약품 적정량 투입 ○ 대체 소독제 도입 등 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V(자외선) 등 대체 소독공정 도입 * 시흥, 일산(정) 국내 최초 UV 공정 도입 ('16년) - 취급이 안전한 대체 정수약품 사용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수자원공사	24. 발전사업의 운영관리 업무기준 수립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업무기준 개정('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태평가 및 예비자재 정수기준 개선, 수문설비 등 유지관리 근거마련, 고장이력관리 명문화 등 ○ 태양광, 풍력, 조력 운영기준 제정('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설비 운영관리 강화, 발전설비 점검 및 보수 근거 마련, 설비 시험종류·주기 기준 마련 등 ○ 개선사항 도출, 관련 업무기준 지속 개선 계획
한국수자원공사	25. 김해공항 확장에 따라 고도제한, 소음 등 제반 여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확장 영향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과업착수('16.11) 및 대안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EDC가 先승인 사업임을 감안, 사업영향 최소화요청 (K-water→부산시→국토부 '16.10) ○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16.7 착수) 및 기본계획('17.6 착수예정) 구체화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국토부 및 부산시와 협의하여 대응방안 수립·이행 계획
한국수자원공사	26. 부산에코델타시티 실거주자 우선 분양 등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엔 편입된 이주대책 대상자, 대토보상자 등 실수요자 우선 공급(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보상 추진일정 등에 따라 '17년 중에는 단독주택용지 공급계획 없음 ○ 구체적 공급대상자 및 규모 검토 후 대책 시행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수자원공사	27. 매년 과도한 물류·여객 실적 목표 아닌 현실적인 계획 마련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 해수부에서는 경인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20년 기준 목표물동량을 820천톤으로 변경 고시('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와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수립, 유관기관 정례회의 등 지속 추진 계획 ○ (여객) 한강~아라뱃길 연계 여객유람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과 연계 가능한 여객수요로 현실적인 여객목표 재검토 등
한국수자원공사	28. 경인아라뱃길 하수처리 시설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8개소)에 대해 개선공사 시행('16.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8개소 모두 조치완료('16.12) * 개선 7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1개소 ○ 공사후 전지점 수질기준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수질 : BOD 9.1mg/L, SS 4.3mg/L (기준 : BOD 20mg/L, SS 20mg/L) ○ 전문업체 위탁관리 지속 시행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상시 만족수준 관리
한국수자원공사	29. 경인 아라뱃길 인천 터미널의 위험물 처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야적을 위한 옥외저장소 시설 및 포소화설비 설치 완료('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소방서로부터 완공 필증을 교부받아 옥외위험물 저장소 운영 중('17.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수자원공사	30.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따라 사업 재추진 방안 검토 중 - 사내 전문가 TF 및 경기도·화성시·K-water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한국수자원공사	31. 해외사업 투자 시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 리스크관리기준 수립('15.6) ○ 정기적으로 사업선정위원회(분기), 사업관리위원회(월)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 전 단계의 리스크 관리 중
한국수자원공사	32.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턴키 및 가격경쟁방식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턴키 공사 입찰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담합 예방제도 운영 및 고난도 공사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 승인 하에 제한적 추진 중 *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및 입찰담합 징후 포착시스템 운영 **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턴키방식 집행 여부 결정 ○ 가격경쟁방식 입찰방식 문제점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가격뿐만 아니라 수행능력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운영('16~) -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가격위주 평가방식에서 기술경쟁 위주 평가방식으로 입찰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 중 - 국토부 주관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적극 참여('17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수자원공사	33. 설계변경으로 10% 이상 예산이 증액된 공사들에 대해 기획감사를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실시('16.10) - 기준강화 등 제도개선 지속 이행
한국수자원공사	34. 댐 지진 대응 매뉴얼을 보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지진 대응 매뉴얼 보완('16.9, '17.2) * 비상연락체계 및 업무분장, SMS 통보 대상자 등
한국수자원공사	35. 수력발전설비를 국산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협업으로 국가 R&D과제 수행 - 1MW이하급 프란시스 수차발전시스템 개발, 실증완료(밀양댐, '13.6~'16.11) * 기존 효율 향상(75→85%) 및 발전량 증대 - 50MW급 프란시스 수차 기술개발 및 실증(합천1, '15.6~'19.9) - 중규모 수력플랜트 개발기획 과제수행 ('15.12~'16.7)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력발전설비 R&D과제 참여로 원천 기술(설계·제작) 확보 - 중규모(50MW급) 수력플랜트 개발 신규 국가 R&D 본과제 참여('17.4~'22.4)
한국수자원공사	36. 매년 반복되는 녹조 대책과 녹조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보 상류 오염원 사전점검 시행 - 홍수기전 탁수, 부유물, 축분 등 점검 ○ 녹조저감·제거설비 도입 - 물순환장치, 수류확산장치 등 설치 운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수계기금활용 유역사업 등 시행 ○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대책수립('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관리 우선소권역 선정 및 지류하천사업 도출 ○ 펄스방류 및 댐-보 연계 시범운영 시행 ('15~'1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기술개발 및 적용, 수환경변화 기후특성 등을 반영한 체계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조대응 전담조직인 '녹조기술센터'를 중심으로 R&D 집중 추진 및 현장대응 실시('17~)
한국수자원공사	37. 과도한 사내복지기금의 출연 및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기본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출연 - '14년부터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으로 수혜금액을 대폭 삭감, 1인당 120만원 한도로 집행 ○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

한국도로공사

공백

□ 한국도로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	1. 예측 교통량과 실제 행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확한 교통량을 근거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 - 국가교통DB 구축('03) 및 매년 갱신·보완 - 교통수요 예측기준인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제정('02) 및 개선(현재 5차 개정) - 부실예측 업체 제재방안(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마련('02)
한국도로공사	2. 고속도로 건설 시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율을 개선 하고 세금체납업체의 계약참여 제한을 계약 초기단계에서 확인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 가산점 부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업체 참여비율(25~40%)에 따라 2~8점 가산 * 종합심사낙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최대 0.3점 가산 ○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 적극 반영 ○ 세금체납업체 참여 제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에 따라 대금지급 시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부 시 까지 대금지급 유예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입찰참가제한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제한사유에 해당될 때 제한하며 세금체납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	3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하향 조정하는 소극적 방식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부채 감축 목표 달성계획 중 89.2% 적극적 부채 감축 방안 - 2017년 부채감축목표 10,023억원 중 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수익증대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한 감축액이 8,942억원 - 건설투자 조정은 1,081억원으로 전체의 10.8%에 불과함
한국도로공사	4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 추진을 검토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민자 추진 방식을 지양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1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 재정 변경추진 여부는 정부에서 검토할 사항
한국도로공사	5 장애인·보훈대상자,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배려 및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예정
한국도로공사	6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과 과오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통행료 후불 납부제도 다양화 및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제도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시행 - 과오납 시 고객들에게 즉시 환불 및 미환불 고객을 위하여 해당내용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공고 ○ 당일 미납 실시간 수납시스템 운영 - 미납 수납 앱 성능개선, 무인수납기 확대, 정부포털 민원24 미납조회 서비스 구축 - 납부 수단 확대 등으로 고객편의를 증진 ○ 미납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이마트, 교통문화연수원 등 교유 활동 전개 - 영업소 휴게소 배너 및 현수막 설치, 지역축제 및 법인업체 방문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	7. 하이플러스 카드사의 운영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17.1) - 선불하이패스카드시장 독점구조 해소 및 고객선택권 확보'
한국도로공사	8.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인한 미납차량 증가, 사회적 약자 할인 곤란 및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 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차량 증가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 (가격부담) 심(SIM)카드형 단말기 저가 보급 (화물차량)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개통 - 통행료 미납 최소화 (고객과실) 대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고의미납) 체납차량 형사고소 추진 ○ 사회적 약자 할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행복단말기 3.6만대 조기 보급 ○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정보 및 정보 보유기간 최소화 방안 검토 -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대책 검토 (관리적) 물리적 보관 장소의 출입통제 (기술적) 암호화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차량 증가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 (가격부담) 행복단말기 재출시 (감면차량) 전기·수소차 하이패스 의무화 추진 - 미납통행료 징수율 제고 (후불고지) 고지 전 통행료 결제수단 도입 (고의미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 사회적 약자 할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패스) 감면행복단말기 보급 확대 (영상인식) 단말기 외 승차확인 방법 강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체계 방안 실시체계 반영 ○ 스마트톨링 도입(2020년) 시 까지 조치 예정
한국도로공사	9. 스마트톨링 도입 시 나들목 설치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들목 설치 요청 시,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고려하여 검토
한국도로공사	10. 화물차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좁은 도로 폭에 따른 위험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개선 방안 다각적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에 대해 차로유도선,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노면그루빙 등 안전시설을 강화 ○ 2020년 스마트톨링 도입 시 도로폭에 따른 위험성이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됨
한국도로공사	11. 이격거리 기준을 초과하는 휴게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 설치간격 표준기준은 15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휴게시설 간 설치간격 평균 15.2km ○ 휴게소 설치간격 기준은 표준 50km, 최대 100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휴게소는 기준을 충족 ○ 최대이격거리 초과 구간에는 졸음쉼터 등 설치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편의 및 사고 예방 위해 적극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	12. 부족한 휴게소 화장실을 확충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의 지출 비용이 과다한 문제 개선 및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된 화장실 시설을 휴게소별 여건에 맞게 개선, 2016년 중에 완료 ○ 휴게소 운영업체와의 협의, T/F 회의 등을 통하여 공사금액 분담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적 지출 : 운영업체 부담 - 자본적 지출 : 도공부담 <p>※ 화장실 개선은 매출액, 수익구조, 노후여부 등 휴게소별 여건에 맞게 휴게소 운영업체가 투자규모를 결정하여 추진함</p>
한국도로공사	13.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율 책정에 직접 개입 권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서비스 평가 등 간접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 휴게소 입찰시 한식당 등 주요매장 직영을 의무화(내린천 등) ○ 건전한 상거래 문화와 공정거래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점 및 납품업체 대표자 만족도 조사, 상생협의회 등 정책 방안 활용
한국도로공사	14. 청년창업매장의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완 계획을 수립할 것	<p>< 조치 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매장 수수료는 최소한의 실비(전기료, 냉난방비, 수도료 등)정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일반매장에 비해 저렴 - 임대료 부과 기준을 개선, 초기 6개월은 임대료를 면제 - 2016년 운영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요율(6개월 경과시 1%씩 증가)을 폐지하는 등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매장 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부진 창업매장(14개소)의 경영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 - 운영개선을 위한 매장별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 - 컨설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 대상 선정기준을 개선(일평균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정기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강화하여 우수사항 공유 및 미흡사항 보완('17. 12) ○ 창업자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2017.12)
한국도로공사	15. 고속도로 농산품 판매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품 판매소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의견 조회 및 요구 반영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면적 확대,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2015~2017) - 농산품 직매장 지속적 확대 예정 <p>* 농산품 직매장 40개소 설치 및 운영 중('16.12 기준)</p>
한국도로공사	16.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진·출입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음쉼터 도로교통 안전점검을 통한 졸음쉼터 안전성 강화 추진('16.5) ○ 휴게소에 충격흡수시설, 장애물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안전시설 설치 완료 ○ 졸음쉼터 진출입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음쉼터 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국토부)' 용역의 결과에 따라 연차별 졸음쉼터 진출입로 개선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	17. 가감속차로 연장을 검토하고 신설 고속도로 설계시 졸음쉼터를 반영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의 설계에 졸음쉼터 반영 완료(2016~2017) <li style="padding-left: 20px;">* 함양-울산(2개소), 파주-포천(1개소) ○ 향후 이용교통량 및 인접휴게소간 간격 검토 등을 통해 설계단계 시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반영 ○ 졸음쉼터 진출입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음쉼터 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국토부)' 용역의 결과에 따라 연차별 졸음쉼터 진출입로 개선 추진
한국도로공사	18.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고 오토바이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주행 사고예방을 위하여 착오 진출입 예상구간에 지속적 시설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 Jct 진출부) 차로유도선 설치로 명확한 주행경로 제시 - (휴게소 진출·입부) 역주행 금지 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 (영업소 진입 교차로) 차로유도선, 역주행 금지 표지 등 설치 ○ 위락시설 주변 나들목에 음주 집중단속 요청 및 야간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 노후 안전시설 정비 추진
한국도로공사	19. 고속도로의 졸음쉼터에 화장실 및 CCTV를 설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음쉼터 화장실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음쉼터 화장실 31개소 설치 완료(2016) <li style="padding-left: 20px;">* 전체 212개소 중 134개소 설치완료(전년대비 9%↑) -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 확충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음쉼터 CCTV 관련 - CCTV 17개소 설치 완료(2016) * 모든 졸음쉼터에 CCTV 운영 중 - CCTV 점검 및 교체·보완 완료 예정(2019)
한국도로공사	20. 버스 대열운행 사고 대책 및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대열운행 사고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합동 단속체계 구축(CCTV 활용) - 대열운행 방지 전세버스 운수업체 서한문 발송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 도로 홍보시설 활용 집중 홍보실시 ○ 뒷좌석 안전띠 홍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적 '안전띠 미착용 차량 진입금지 캠페인' 추진 - 감성문구 공모 당선작 VMS 및 현수막 집중 홍보 - 안전띠 체험기(총 10대) 활용 '찾아가는 안전띠 체험교실' 운영 - TV광고, 극장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미디어보드) 광고 - 하이패스차로 요금표시기 홍보 - 뉴미디어 홍보 : 페이스북스타와 함께 하는 안전띠착용 캠페인, 인증샷 공모 이벤트
한국도로공사	21.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 및 과적화물차 단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재불량 신고포상제 운영('16.8~'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건수 : 1,061건 - 포상금액 : 22,800천원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재불량 및 상습 과적운전자 벌점(15점) 부과 중 ○ 과적-적재불량 경찰 합동 기획단속 강화 (분기 1회 → 월 1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	22. 사고다발 고속도로(관할 지사)에 따라 관리 인력을 차등하여 배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노선의 특성에 맞춘 인력관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별 조건 분석 (교통여건) 지사별 관리연장, 교통량·교통사고 등 (환경여건) 강우, 강설량 등 - 조건 분석결과에 따라 안전순찰원·도로관리원 등의 인력 편성 및 운영
한국도로공사	23.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심야할인 제도를 개선하고 졸음쉼터 확충 및 이용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야할인제도 개선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야할인제도 운영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용감소를 통한 물류경쟁력 강화 · 이용시간 비율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을 통한 교통량 분산 -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차 요금할인 주간 확대적용 시 요금역전현상 및 재무부담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한 개선추진 애로사항 발생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음쉼터 11개소 확충 예정(2017) * 졸음쉼터 지속적 확충 실시(전체 223개소, '17.3 기준)
한국도로공사	24. 지진발생 시 고속도로 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경주, 울산에 집중된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의 보강 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통제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발생 시 고속도로 피해범위에 따른 통행제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 ○ 2003년부터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에 대한 보강방안을 수립하여 1,307개소 보강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내진성능 확보 추진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767 344 1481 539"> <thead> <tr> <th rowspan="2">전체</th> <th colspan="2">내진성능 확보</th> <th>내진 미반영</th> </tr> <tr> <th>설계반영</th> <th>보강완료</th> <th>보강예정('17)</th> </tr> </thead> <tbody> <tr> <td>9,040 (100%)</td> <td>7,596</td> <td>1,307</td> <td>137</td> </tr> <tr> <td></td> <td colspan="2">8,903/98.5%</td> <td>1.5%</td> </tr> </tbody> </table> <p>○ 잔여구간(137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완료 예정(2017) - 경주·울산지역 교량(언양-영천간 확장구간에 포함) * 2017년 내진보강계획</p> <table border="1" data-bbox="767 869 1481 994"> <thead> <tr> <th>계</th> <th>확장외 구간</th> <th>확장구간 (언양-영천)</th> </tr> </thead> <tbody> <tr> <td>137</td> <td>117</td> <td>20</td> </tr> </tbody> </table> <p>< 향후 추진계획 > ○ 지진규모별 통행제한 기준 -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 예정(2017)</p>	전체	내진성능 확보		내진 미반영	설계반영	보강완료	보강예정('17)	9,040 (100%)	7,596	1,307	137		8,903/98.5%		1.5%	계	확장외 구간	확장구간 (언양-영천)	137	117	20
전체	내진성능 확보			내진 미반영																			
	설계반영	보강완료	보강예정('17)																				
9,040 (100%)	7,596	1,307	137																				
	8,903/98.5%		1.5%																				
계	확장외 구간	확장구간 (언양-영천)																					
137	117	20																					
한국도로공사	25. 고속도로 유지관리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 유지보수작업원 안전대책 수립 [도로처-4067(2016.11.08)] - 작업장 안전시설 확충,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시행 등</p>																					
한국도로공사	26. 빗길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성 포장 확대하고 포트홀 예방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 ○ 기상관측 불량 24개소 조치 완료('16.1) * 교체(13개소) 및 수동전환(11개소) ○ 배수취약 및 소음민원 구간 배수성 포장 시행 - 영동선 42.7k 구간 등 6개 구간(총 25.16km)</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길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을 대상으로 배수성 포장 지속 확대 추진(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선 35K 등 5개 노선 지속추진 예정 (57km/차로) -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신설구간 설계반영 예정 ○ 포트홀 예방 및 관리대책(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포장 전면개량 지속추진 - 포트홀 발생 다발구간(경부선 등 6개 노선)에 대해 집중보수 시행 - 신속보수가 가능토록 현장운영 체계 강화(신속대응) 																		
한국도로공사	27. 설치기준에 미달한 가드레일 및 교량 난간 방호울타리를 조속히 개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공용도로 가드레일중장기 개량 계획[도로처-752(2016.03.03)]’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미달 가드레일 연차적 개량 예정 * 기준미달 가드레일 중기투자계획 <table border="1" data-bbox="767 1400 1479 1592">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17</th> <th>‘18</th> <th>‘19</th> <th>‘20</th> </tr> </thead> <tbody> <tr> <td>개소</td> <td>587.4</td> <td>42.8</td> <td>223.6</td> <td>216.0</td> <td>105.</td> </tr> <tr> <td>금액 (억원)</td> <td>748.9</td> <td>60.0</td> <td>305.4</td> <td>268.0</td> <td>115.</td> </tr> </tbody> </table>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설치기준 개정 이전에 설치된 교량에 대하여 2009년 ‘난간방호울타리 성능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548개소 개량 완료(2017) ○ 잔여구간(490개소)에 대하여 개량 완료 예정(2019) 	구분	계	‘17	‘18	‘19	‘20	개소	587.4	42.8	223.6	216.0	105.	금액 (억원)	748.9	60.0	305.4	268.0	115.
구분	계	‘17	‘18	‘19	‘20															
개소	587.4	42.8	223.6	216.0	105.															
금액 (억원)	748.9	60.0	305.4	268.0	11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난간 방호울타리 개량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767 349 1479 512"> <thead> <tr> <th rowspan="2">전체</th> <th colspan="2">개량 완료</th> <th rowspan="2">개량예정 (~'19)</th> </tr> <tr> <th>설계반영</th> <th>개량완료</th> </tr> </thead> <tbody> <tr> <td>9,040 (100%)</td> <td>8,002</td> <td>548</td> <td>490</td> </tr> <tr> <td></td> <td colspan="2">8,550/94.6%</td> <td>5.4%</td> </tr> </tbody> </table> <p>* 난간 방호울타리 중기투자계획</p> <table border="1" data-bbox="767 584 1479 781">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17</th> <th>'18</th> <th>'19</th> </tr> </thead> <tbody> <tr> <td>개소</td> <td>490</td> <td>86</td> <td>186</td> <td>218</td> </tr> <tr> <td>금액 (억원)</td> <td>302</td> <td>99</td> <td>103</td> <td>100</td> </tr> </tbody> </table>	전체	개량 완료		개량예정 (~'19)	설계반영	개량완료	9,040 (100%)	8,002	548	490		8,550/94.6%		5.4%	구분	계	'17	'18	'19	개소	490	86	186	218	금액 (억원)	302	99	103	100							
전체	개량 완료			개량예정 (~'19)																																		
	설계반영	개량완료																																				
9,040 (100%)	8,002	548	490																																			
	8,550/94.6%		5.4%																																			
구분	계	'17	'18	'19																																		
개소	490	86	186	218																																		
금액 (억원)	302	99	103	100																																		
한국도로공사	28.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방재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화재대비 방재능력 개선 계획 수립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관련기준 개정 이전에 설치된 터널에 대하여 단계적 보완 <p>* 터널 방재시설별 보완계획</p> <table border="1" data-bbox="767 1288 1479 1803">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16 까지</th> <th>'17</th> <th>'18</th> <th>'19</th> </tr> </thead> <tbody> <tr> <td>피난연락갱 (제연설비로 대체)</td> <td>38</td> <td>22</td> <td>5</td> <td>5</td> <td>3</td> </tr> <tr> <td>진입차단설비</td> <td>18</td> <td>16</td> <td>2</td> <td>-</td> <td>-</td> </tr> <tr> <td>자동화재탐지설비</td> <td>14</td> <td>8</td> <td>4</td> <td>2</td> <td>-</td> </tr> <tr> <td>VMS, LCS</td> <td>13</td> <td>10</td> <td>2</td> <td>1</td> <td>-</td> </tr> <tr> <td>비상방송설비</td> <td>36</td> <td>10</td> <td>-</td> <td>12</td> <td>14</td> </tr> </tbody> </table>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 안전시설 단계적 조치 완료 예정(2020) 	구분	대상	'16 까지	'17	'18	'19	피난연락갱 (제연설비로 대체)	38	22	5	5	3	진입차단설비	18	16	2	-	-	자동화재탐지설비	14	8	4	2	-	VMS, LCS	13	10	2	1	-	비상방송설비	36	10	-	12	14
구분	대상	'16 까지	'17	'18	'19																																	
피난연락갱 (제연설비로 대체)	38	22	5	5	3																																	
진입차단설비	18	16	2	-	-																																	
자동화재탐지설비	14	8	4	2	-																																	
VMS, LCS	13	10	2	1	-																																	
비상방송설비	36	10	-	12	1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	29.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터널 사고 시 즉각적인 대처와 함께 소방대 출동시간을 최소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대 출동시간 최소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당국 운영 중인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고속도로 시설물 공간정보 제공 - 일선소방서와의 현장합동점검을 통한 긴급진출입시설 활용성 향상 ○ 긴급진출입시설 추가설치 예정 ○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구부(161m)구간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완계획 수립 완료 <p>* 터널 조명 보완계획</p> <table border="1" data-bbox="821 913 1436 1137">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보완계획</th> </tr> <tr> <th>계</th> <th>~'16까지</th> <th>'17~20년</th> </tr> </thead> <tbody> <tr> <td>대상터널(개소)</td> <td>250</td> <td>23</td> <td>227</td> </tr> </tbody> </table>	구분	보완계획			계	~'16까지	'17~20년	대상터널(개소)	250	23	227
구분	보완계획												
	계	~'16까지	'17~20년										
대상터널(개소)	250	23	227										
한국도로공사	30. 기준에 미달하는 고속도로 터널 조명 교체 등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구부(161m)구간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완계획 수립 완료 <p>* 터널 조명 보완계획</p> <table border="1" data-bbox="821 1473 1436 1697">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보완계획</th> </tr> <tr> <th>계</th> <th>~'16까지</th> <th>'17~20년</th> </tr> </thead> <tbody> <tr> <td>대상터널(개소)</td> <td>250</td> <td>23</td> <td>227</td> </tr> </tbody> </table>	구분	보완계획			계	~'16까지	'17~20년	대상터널(개소)	250	23	227
구분	보완계획												
	계	~'16까지	'17~20년										
대상터널(개소)	250	23	227										
한국도로공사	31. 생태통로 기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대책을 강구하고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생태통로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통로 모니터링 관리·감독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통로 모니터링 정기적 실시(분기별) -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반복되는 문제점 단계적 개선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한 생태통로 개선대책 - 부적절한 생태통로 위치변경 및 기능개선 - 필요시 생태통로 지정해제 추진 - 생태통로 신규 설치 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의견 반영
한국도로공사	32. 위험물 수송차량 진입 제한 등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방법 및 제한 등 도로법 개정안 마련 * 고속도로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방안 연구 I (도로교통연구원, 2016) ※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한 물류정보 기본법개정('17.3 본회의 통과)와 연계한 도로법 개정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 로드맵 및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방안 수립(2017)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 세부 실행방안 수립(2018)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방안 연구II (도로교통연구원, 2017~2018)

한국철도공사

공백

□ 한국철도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공사	1. 직원들의 비위·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비위·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의식강화 노력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행동강령 개정('1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가액 상한 5만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 반영 - '17년 연간 복무감사 계획 수립('1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 사전예방활동 연간 12회 시행 - 징계감경 제한을 담은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1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감경 원천적 금지 - 직원 의식강화를 위한 '징계처분사례집' 작성 및 배부('17.1월)
한국철도공사	2. 노후 도시철도 차량에 대한 엄밀한 안전도 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교체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부터 20년 도래차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시행 중('16년 80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대상차량 : 198량 ○ 20년 이상 도래차량은 정밀안전진단 시행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15.12.30.) > 철도차량 구입 후 20년 도래 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는 즉시 폐차, 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5년간 연장운행 가능</p> </div>
한국철도공사	3. 반환수수료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부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선의의 여행변경 고객 등을 모두 감안하여 적정수수료 기준 검토('17.3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6년 : (반환수수료) 34백만매, 205억원, (예약부도로 인한 수익감소) 804억원</p> <p>< 검토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1시간 전까지 인터넷 수수료(400원)→무료 · 출발 후 수수료 일부 완화, 출발 인접시간 수수료 강화
한국철도공사	4. 열차 지연도착률을 최소화하고, 지연보상금 지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열차지연 대책 수립·시행('16.5월)으로 정시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 '15년 95.9% → '16년 96.6% (+0.7%p) * (일반열차) '15년 96.1% → '16년 96.5% (+0.4%p) ○ 열차지연 방지대책 수립('17.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지연열차 상세 원인분석을 통한 해소방안 마련 등 ○ 지연보상금 지급률 향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보상금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시행('17.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지연할인증 → 현금, 지연할인증, 마일리지 - 코레일톡⁺ 푸쉬알림 서비스 시행('17.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금 보상 대상자 알림, 기간만료 도래 알림
한국철도공사	5. 할인제도 조정시 이용객 혜택이 줄지 않도록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용객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인제도 개선('16.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일리지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5%, 더블적립열차 10%, 레일⁺카드 1% 추가 - 인터넷특가, 힘내라청춘 할인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특가) 5~15%→10~30% * (힘내라청춘) 10~30%→10~40% ※ (할인액) '15년도 480억원 → '16년도 575억원 (+95억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공사	6. 입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석승차권은 국토부의 철도차량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이며, 좌석 매진 후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판매하고 있어 현행 유지 ○ 향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 서비스 등에 개선 필요시 별도 방안 마련 																									
한국철도공사	7. KTX 기장 이직시 매물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의무근무기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기장 이직방지 대책 수립 ('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기장 의무복무 기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의무복무기간 이내 퇴직시 교육비 환수 																									
한국철도공사	8. 유지보수 최소 작업시간인 3시간 30분 확보에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운행계획 조정(2회)으로 기본 선로 작업시간 확보율 개선(66.8% →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열차 3대('16.12월) - 화물열차 18대('17.2월) <table border="1" data-bbox="791 1435 1453 173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5.8월(a)</th> <th>'16.12월</th> <th>'17.2월(b)</th> <th>증감(b-a)</th> </tr> </thead> <tbody> <tr> <td>전체 구간</td> <td>680</td> <td>940</td> <td>940</td> <td></td> </tr> <tr> <td>3:30 확보</td> <td>454</td> <td>754</td> <td>874</td> <td></td> </tr> <tr> <td>3:30 미확보</td> <td>226</td> <td>186</td> <td>66</td> <td></td> </tr> <tr> <td>확보율</td> <td>66.8%</td> <td>80.2%</td> <td>93.0%</td> <td>+26.2%p</td> </tr> </tbody> </table>	구분	'15.8월(a)	'16.12월	'17.2월(b)	증감(b-a)	전체 구간	680	940	940		3:30 확보	454	754	874		3:30 미확보	226	186	66		확보율	66.8%	80.2%	93.0%	+26.2%p
구분	'15.8월(a)	'16.12월	'17.2월(b)	증감(b-a)																							
전체 구간	680	940	940																								
3:30 확보	454	754	874																								
3:30 미확보	226	186	66																								
확보율	66.8%	80.2%	93.0%	+26.2%p																							
한국철도공사	9. 화물열차의 불산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과적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3단계(포장, 적입, 수납검사증) 관리감독 시행 및 위험물운송 업무매뉴얼에 '불산' 정보 추가('16.12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산취급역*에 개인보호장구** 배포('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신항, 부산진, 부강화물, 소정리 ** 공기호흡기, 개인보호장비 패키지 등 ○ 과적방지대책 수립('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차계중기 추가설치 : 묵호항역('17.6월) - 화물운송약관에 따라 초과적재된 화물에 대해서는 부가금 적극 징수 - 화차 적재제한선 표시강화 																
한국철도공사	10. 산본, 부천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내 입점하고 있는 사행산업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역사내 사행시설 입점현황 <table border="1" data-bbox="770 891 1465 121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민자역사</th> <th style="width: 25%;">임차인</th> <th style="width: 25%;">운영현황</th> <th style="width: 25%;">최근 임차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부천역사(주)</td> <td>국민체육</td> <td>경륜장</td> <td>'15.11~ '18.11</td> </tr> <tr> <td>산본역사(주)</td> <td>진흥공단 (문체부)</td> <td>경륜장</td> <td>'16.07~ '20.07</td> </tr> <tr> <td>동인천역사(주)</td> <td>산하기관</td> <td>경륜장 경정장</td> <td>'16.06~ '21.0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역사에 사행시설을 폐점하고 대체시설을 운영토록 요구('16.10월, '1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역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이므로 사행시설 폐점후 민자역사 건립취지에 맞는 대체시설로 변경 요구 ○ 내부법률 자문 결과, 임대기간 종료 전에 대체시설 도입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임대종료시 대체시설 도입 	민자역사	임차인	운영현황	최근 임차기간	부천역사(주)	국민체육	경륜장	'15.11~ '18.11	산본역사(주)	진흥공단 (문체부)	경륜장	'16.07~ '20.07	동인천역사(주)	산하기관	경륜장 경정장	'16.06~ '21.06
민자역사	임차인	운영현황	최근 임차기간															
부천역사(주)	국민체육	경륜장	'15.11~ '18.11															
산본역사(주)	진흥공단 (문체부)	경륜장	'16.07~ '20.07															
동인천역사(주)	산하기관	경륜장 경정장	'16.06~ '21.06															
한국철도공사	11. 철도역사 유지관리를 위한 미등기·무허가 역사 양성화를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재대상 332역 중 313역 등재완료 ○ 미등재역사 19개 역에 대한 양성화 추진계획 수립('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에 여객취급 10개역 중 9개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허가 설계용역을 통한 등재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여객취급역 안강역은 '18년도 동해선 복선 전철 건설 완료 시 신축이전으로 해소 예정</p> <p>- 잔여 9개역은 '18년도 이후 등재 추진</p>
한국철도공사	<p>12.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와 이에 따른 종사자 안전문제 심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외주직원의 안전 강화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직원 안전 강화방안 추진('1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원에게 LED 야광 안전조끼 지급('16.10월, 1,460개) - 열차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궤도점유 트롤리 바퀴교체('16.12월, 188대) - 유지보수 장비에 반사체 및 LED 경광등 부착('16.12월, 273대) - 휴대용단말기와 작업원 개별휴대폰으로 열차접근을 경보하는 시스템 구축('17.6월) - 고속검측차(KTX-36호)에 차상진동 측정기능 추가('17.10월) ○ 외주직원 처우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선로유지보수 외주인력의 평균보수는 월 235만원으로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월 241만원과 유사한 수준 - 지속적으로 임금수준 등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 조치
한국철도공사	<p>13. 물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물류본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인사) 자체정원내에서 조직개편 자율성 보장과 현업까지 전보 위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전결규정 개정('17.3월) ○ (인력) 물류사업 관련, 승무 / 차량정비 업무에 대한 정원조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제규정시행세칙 개정('17.3월) ○ (평가)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CEO와 책임경영계약 체결('17.4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공사	14. 고속철도 가짜 불량 윤활유 사용 관련 재발 방지, 관련자 문책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철도 불량 윤활유 사용 재발방지 대책 마련('1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대상 유지류로 지정관리 - 검사부서 변경(중정비센터→품질안전처)으로 원제작사 서류심사 및 성적서 검사 강화 - 차량제작사, 도유기 원제작사와 합동으로 규격에 적합한 윤활유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매뉴얼 및 구매규격서 개정 - 관련자 문책('17.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도용 3개 업체 부정당업체로 제재 · 관련부서 기관경고/개선 등 행정조치 · 관련자 징계처분(3명)
한국철도공사	15. 선로 무단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울타리 추설풀치 필요대상 1,817km 중 1,675km설치 완료(92.2%, '17.3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예산 수탁 사업으로 시행 * '17년사업 : 51km / 63억원 ○ 잔여구간(142km)에 대하여 '19년 완료 목표로 관계기관(국토부,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지속 추진 ○ '17년 무단횡단개소 경고표지판 추가설치 (509개소 / 83백만원) ○ 공중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접객역 및 건널목 대국민 홍보활동 시행(분기1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공사	16. 역사건물의 내진설계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152동 중 102동 내진성능 기 확보 (내진비율 67.1%) ○ 내진성능 미확보 50동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17.1월)하여 시행 중이며, '17년말까지 완료(예산 146억원) (단위 : 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내진설계 대상</th> <th rowspan="2" style="width: 15%;">내진성능 확보</th> <th colspan="3" style="width: 50%;">내진성능 미확보</th> <th rowspan="2" style="width: 10%;">비고</th> </tr> <tr> <th style="width: 10%;">계</th> <th style="width: 20%;">내진성능 미확보</th> <th style="width: 20%;">내진성능 평가필요</th> </tr> </thead> <tbody> <tr> <td>152</td> <td>102</td> <td>50</td> <td>4</td> <td>46</td> <td>67.1%</td> </tr> </tbody> </table>	내진설계 대상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비고	계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성능 평가필요	152	102	50	4	46	67.1%
내진설계 대상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비고												
		계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성능 평가필요													
152	102	50	4	46	67.1%												
한국철도공사	17.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인해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불편을 끼쳤던 점에 대해 사측과 노측이 협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과도한 노조 징계로 인한 노사화합 저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업 종료 후 징계절차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 사전 예방 및 파업 재발방지를 위해 본조합 및 각 분야별 현안사항 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합 10회, 각 분야별 24회 ○ 경영진과 노동조합 집행부 현안간담회 개최(6회) ○ 징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변호사) 참석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공동법인 사회공헌 희망철도재단 운영 활성화 및 새로운 노사협의체 구성 등 상시 대화채널 구축 예정 															

공백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백

□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1. 아웃소싱 인력 고용안정 및 공항 안전을 위해 직고용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직영 전환인력 확보('16.12) - (대상) 공항 및 여객안전 직결업무 - (시기) '17년중 채용 및 직영전환 추진
인천국제 공항공사	2. T1-T2 우회 연결도로 관련하여 승객 불편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축 노선 시행여부 검토 - (기본운영) 현 노선 우선 운영('17.4) - (검토방향) 교통량 추이 및 교통여건 반영한 “인천공항 터미널 재배치에 따른 중장기 개발전략 재정비용역”을 통해 4단계 건설사업에 포함 시행 예정
인천국제 공항공사	3. 높은 배당성향을 낮추고 성과공유금을 늘려 아웃소싱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소싱용역 대가기준 체계 변경('16.11) - (규모) 노무비 2.5%(약 68억원) 인상 - (내용) 단일 시중노임단가 적용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 (효과) 최저임금법 등 충족 최하위 직급 기본급 20% 상향 ○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 발생 - (내용)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물가인상 반영
인천국제 공항공사	4. 수익구조상 비항공수익의 비중이 과다하므로 항공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네트워크 경쟁력 강화('16 연중) - 신규사용료 및 전략 인센티브 시행 ○ 주변지역 개발 사업 적극 추진 - LCC 정비격납고 준공 등 항공수요 창출 <p>< 향후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관광 연계 개발 및 활성화 ○ IBC-1 2단계 복합위락시설 운영('17.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5. 공항의 수익이 지역사회 및 국민에게 환원되는 방안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및 대국민 사회공헌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1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지역사회 취약계층 * (내용) 생계(난방비 등) 및 시설개선 지원 - 인천공항 봄빛 행복나눔 사업(1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지역 취약계층 및 지역학교 * (내용) 소외계층 아동 학습비, 노인 보행보조기, 도서/구도심지역 학교시설 개선 지원 등 - '17년 사회공헌예산 140억원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지역사회 취약계층 생활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 전년대비 47억원 증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인천국제 공항공사	6. 정부 배당성향 지속 증가에 관하여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시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협의 및 주무부서 지원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 국토부 현안설명 및 지원요청(1.24) 기재부 출자관리과 배당협의(1.24) 기재부 배당간담회 의견개진(2.3) 기재부 정부출자기관간담회 참석 (부사장) 의견 개진(2.20) - (내용) 배당유예 또는 배당률 인하 요청 - (근거) 정부 지원(출자)없이 3, 4단계 사업 독자적 수행에 따른 재정여건 등 - (실적) 공사 배당성향 상승 0.92% (공공기관 평균 배당성향 3%상승)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7. 조류 충돌 증가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각적인 조류퇴치기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원(30명) 투입 및 24시간 통제 - 습지, 웅덩이 제거 등 서식지 관리 - 선제적 조류충돌 예방활동 실시 * 조류종, 개체수, 주서식지, 이동경로 등 월2회 조류서식지 조사 실시 - 취약시기 집중 조류통제활동 실시 * 철새 도래시기, 항공기 운항 극성수기 등
인천국제 공항공사	8. 무자격 셔틀트레인 관제 및 지상조업에 대한 안전점검대책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미달직원 추가교육 완료('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자 교육 및 관리 철저 수행 ○ 급유조업사 안전교육대상자 교육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111명중 111명('16.12.28) (AAP 47명, KAS 54명, SHP 10명)
인천국제 공항공사	9. 안전 및 보안과 직결 되는 보안·방재인력 아웃 소싱 체계 개선방안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직영 전환인력 확보('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공항 및 여객안전 직결업무 - (시기) '17년 채용 및 직영전환 추진
인천국제 공항공사	10. 중소·중견기업 대상 으로 임대료를 인하 하는 방안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중소·중견면세점 임대료는 브랜드 가치 및 여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사 업자 제시금액으로 인하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일반기업 60% 수준 설정(예정가격) - (영업요율) 국산·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아임쇼핑)영업요율 인하 * 당초 매출액 대비 약23%→10% ○ T2 면세점 사업권 구성 시 입점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동수(3) 구성 - (임대료) 일반기업 40% 수준 책정(예정가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11. 경비구역 무선교신 시스템을 통일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기 보안경비구역업체 선정시 건물·구역별로 과업범위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무선교신 시스템 구축 완료 - 제5기 보안경비구역 계약체결('17.4) ※ 제5기(3단계 관련) 보안경비구역 과업범위 <table border="1" data-bbox="788 636 1458 846"> <thead> <tr> <th>구분</th> <th>과업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보안경비구역A</td> <td>T1 + 교통센터</td> </tr> <tr> <td>보안경비구역B</td> <td>외곽지역 및 부대건물</td> </tr> <tr> <td>보안경비구역C</td> <td>T2 + 교통센터</td> </tr> <tr> <td>보안경비구역D</td> <td>탑승동 + IAT</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경비구역 D는 4. 14 계약체결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기 보안경비구역이 시작 되는 '17.7.1부터 건물/구역별로 일원화된 무선 교신망 구축 	구분	과업 지역	보안경비구역A	T1 + 교통센터	보안경비구역B	외곽지역 및 부대건물	보안경비구역C	T2 + 교통센터	보안경비구역D	탑승동 + IAT
구분	과업 지역											
보안경비구역A	T1 + 교통센터											
보안경비구역B	외곽지역 및 부대건물											
보안경비구역C	T2 + 교통센터											
보안경비구역D	탑승동 + IAT											
인천국제 공항공사	12. 협력업체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기준에 교통보조비(21만원) 반영 ○ 협력사 교통편의 개선 설문조사 시행('17.1) - (내용) 교통편의 지원(출퇴근버스 or 현금 지원) 선호방식 등 조사 ○ 조사결과 - 설문조사 결과 교통비 21만원 지원방식 선호에 따라 현행 유지 										
인천국제 공항공사	13. 아웃소싱 계약 갱신 시 근무경력 반영하도록 설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 반영한 직무등급체계 마련('16.11) - (내용) 아웃소싱용역 대가기준 체계를 변경하여 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는 등급체계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발주되는 아웃소싱용역은 기술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여 등급 체계 설계 - 낙찰된 협력사는 공사가 설계한 등급별 인원을 준수하여 인원 투입토록 관리
인천국제 공항공사	14. 아웃소싱 계약 시 최저 임금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소싱용역 대가기준 체계 변경 - (내용) 최하위 직급의 기본급 20% 상향 - 낙찰률(87.9%) 적용해도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수준 충족 ○ 용역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 -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준수 명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수준평가(SLA) 등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
인천국제 공항공사	15.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보완 및 훈련 진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 ('16.12) - 국민안전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 및 국토교통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반영 ○ 비정상상황 대비 도상훈련 실시 ('16.10) - 공항공사, 소방대, 항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인천국제 공항공사	16. 인천공항 내 범죄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경찰대와 긴밀히 협조 - 공항내 각종 범죄예방 및 검거율 향상 목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경비원 24시간 내·외곽 순찰업무 * 대테러상황실 집중감시체계 운영 및 인력 보강('16.2) * 특수경비원 행동탐지교육(BDO)교육 (1,2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교육을 통해 거동수상자 적발, 절도범 검거, 방치물품 발견 등의 효과 ('16.09)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CCTV 전면 교체 고화질 디지털 IP CCTV로 전면 교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15.12~'17.4(723대) • 2차 : '17.5~'18.3(2,533대) ○ 공항경찰대 범인 수사·검거에 적극 협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CCTV 영상자료 지원 : 636건
인천국제 공항공사	17. 주차장 장기 방치된 차량의 세부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방치차량 중구청 강제처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 47대 중 35대 강제처리의뢰('16.12) 12대 2차 내용증명 발송완료('17.2) ○ 추가발생 방치차량 7대 이동조치('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터미널(남) 주차장으로 이동조치 <p>< 향후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청 35대 강제처리 진행중('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강제처리 의뢰 차량 중 공시송달 기간 지난 차량 ○ 나머지 차량(12대) 강제처리 요청('17.4월중) ○ 추가방치차량 7대에 대한 소유주 조회 요청예정('17.4월중) ○ 지속적인 방치차량 추적관찰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18. 개인사유로 인한 출국 심사 취소 급증에 따른 혼란 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사전 여객 계도 등 노력 - (현황) 출국심사 후 출국취소 사례 발생 - (사유) 스케줄 변경, A/S내 여권분실, 연예인 추종 등 당일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 없는 점 악용 - (문제점) 법무부도 정상 절차를 거쳐 출국 취소한 여객에 대해 법적 제재 근거가 없고, 항공사도 비슷한 상황
인천국제 공항공사	19. 제2터미널 연결철도 관련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주로하부 통과시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진시 배출 토사 지반조사(입도분석) 실시 - 설계굴착량보다 배토량이 많은 경우 분석조사 시행 - 지반침하 원인 및 방지대책은 전문기관 연구용역(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을 수행, 장기침하량과 활주로 포장면 기울기가 허용치 이내로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15.12.09~'16.02.29) - 3활주로 지하굴착 후 1년여 경과한 후에 전문가 자문 및 지하공동여부조사(GPR Test)결과 지하공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 ○ 활주로하부 통과 후 안전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주로 및 유도로에 설치된 자동계측기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계 등) 지속 관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20. 공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액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천골프클럽 파산종결 및 법인등기 폐쇄, 대손처리 완료('16.7.21, 53억원) ○ ARP는 파산절차 진행중으로 건물 매각 및 경매를 통한 회수 추진(채권 약 363억원) ○ 그랜드스카이(유) 항공기 경매 완료('16.10.5), 배당 절차 진행 중(채권 약73억원) ○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 개정을 통한 미납 관리 강화('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 시 제반 인센티브 지급 제한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P, 그랜드스카이(유) 등 주요 악성 채권에 대한 법적절차 완료에 따른 채권 회수 추진 ○ 부정기 항공사 대상 계약체결 방안 검토 추진
인천국제 공항공사	21. 정부의 시설비 및 인건비 공사 전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2 자동출입국심사대 신규설치 필요 대수 중 일부(32대)는 법무부 자체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중 ○ 자동출입국심사대 68대(T1 신설 28대, T1 교체 20대, T2 신설 20대)는 공사에서 설치하되, 사용료 징수(1.75억원/년, 9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법무부 협의 완료 및 이사회 의결(4.2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및 사용료 징수 개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22. 식음료 사업에 중소·영세·청년 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영세·청년기업 입점을 위한 팝업 매장을 추가함으로써 인천공항 입점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제1터미널 2개소+제2터미널 4개소 추가 * 제2터미널 4개소는 '18년 오픈 후 운영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권 입찰 시 중소·영세·청년 기업을 위한 추가사업 발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V사업(실버카페) 및 중소기업 협력사업 등
인천국제 공항공사	23. 허브공항 제고를 위한 실적 중심 환승률 증대보다 동북아 항공운송 환경 변화에 맞는 근본적인 허브화 대책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화지표”(중심성×접근성)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 ‘15년 허브화추진방향 진단용역 - (내용) 환승률을 대체하는 지표 수립 - (효과) 다각화된 허브 성과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성과평가 시 허브 측정의 계량지표로 환승객→허브화지표로 대체 * 항공산업통계 응용지표(KOTI)로 선정, 성과 집계중 ○ 新허브화지표 기반 허브화대책 수립/운영 (정부협력)

공백

한국항공공사

공백

□ 한국공항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공항공사	1. 제주공항 슬롯 포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롯 증대를 위하여 Airside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15. 7 ~ '17. 12 - 사업내용 : 고속탈출유도로 및 주기장 증설 등 ※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 용역('16.11~'17.7)”을 시행중이며, 동 용역을 통하여 시설, 운영, 관제 등 분야별 개선 																	
한국공항공사	2. 레이더송신소 등 지진에 취약한 공항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내진 관리기준 마련 및 보강계획 수립 ('16.10.26) (자체기준) 2층이상 또는 연면적500㎡ 이상 및 500㎡미만 건축물중 주요시설 ※ 법적기준 : 2층이상 또는 연면적500㎡ 이상 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실시(10동) : '16.10.10~12.27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45동) : '17.3~'17.11 ○ 내진보강 실시 : '17.3 ~'18.12 ※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실시 																	
한국공항공사	3.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 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GBAC 터미널 운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 및 사용실적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국제 비즈니스항공</th> </tr> <tr> <th>출발</th> <th>도착</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6/5/23 ~12/31</td> <td>운항</td> <td>363</td> <td>361</td> <td>724</td> </tr> <tr> <td>사용</td> <td>157</td> <td>157</td> <td>314</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평균 3.2편 운항中 1.4편 사용 (평균사용률 43.4%) *사용률 지속 상승중 (5월 17% → 6~7월 26% → 8~9월 37% → 10월 41% → 11~12월 64%) 	구 분		국제 비즈니스항공			출발	도착	계	'16/5/23 ~12/31	운항	363	361	724	사용	157	157	314
구 분		국제 비즈니스항공																	
		출발	도착	계															
'16/5/23 ~12/31	운항	363	361	724															
	사용	157	157	31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편의 개선('16.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미널 이용신청기한 단축 - 면세품 인도장 설치 - 택스리펀드 창구 설치 ○ 2016-2017 홍보마케팅 추진계획 수립·시행('1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항공 관련 컨퍼런스 참가, 잡지광고, 해외언론 홍보 등 -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MOU 체결('16.6월) - UAE 경제인교류협회와 MOU 체결('16.8월) -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와 MOU 체결('16.12월) - 잡지광고, 해외 언론 홍보 등 지속 추진 ○ CIQ 상주인력 확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인력 일부 확보(8명)배치(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채용 및 OJT절차 진행중 ○ 보안검색 간소화 추진(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부서 및 보안기관 협의중 ○ 해외 비즈니스항공 컨퍼런스 참가('17.4월, 상해)
한국공항공사	4. 제주신공항 완공前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손실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수요급증을 대비한 단기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15. 7 ~ '18. 11 - 사업내용 : Airside 확충, 터미널 증축 및 주차장 확장 등 ※ 제주 제2공항 개항 전까지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대비하여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16.11 ~ '17.7)”에 따라 시설개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공항공사	5. 김포 커퓨타임으로 인한 회항과 그에 따른 이용객 불편 최소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야시간대 제주공항 항공기 출발시간 조정('16.8월)으로 김포공항 커퓨시간 전 도착 ○ 대체항공기 투입 ○ 해당노선 항공기 이륙우선권 부여 ○ 김포공항 주차장 심야운영시간 연장 <p>※ 조치이후 항공기 회항감소 : 40건/월('16.1~7월) → 7건/월('16.8~17.3월)</p>
한국공항공사	6. 김포공항에 까오송 등 추가 국제노선 개설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오송노선 운수권 배분 요청 (공사→국토부, '16.2월~)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한 노선 선정 및 개설 요구 (공사→국토부, '17.1월) ○ 김포공항 국제선 추가개설을 위한 한·중 항공회담 등 개최요구 (공사→국토부, '17.1월) ○ 국제선추가개설 대비 소음피해지역 민원완화 사업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혁신센터 설립·운영 ('16.8월~) - 소음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협약 추진 - 기타 사회 공헌 사업확대 등 (장학금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공항 국제선 운수권 확보를 위한 항공회담 참석 및 대응 ('17년 중)
한국공항공사	7. 훈련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공사 합동 안전강화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 훈련기 35대 무안, 양양 이전완료('14~'16) - 대형공항 훈련비행 전면 금지('16.12~) - 훈련업체 안전 관리감독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비행장 마련 등 비행인프라 확보 용역(국토부, '16.11~'17.11) 결과에 따라 조치 ○ 훈련업체 표준훈련 절차 및 프로그램 구축 (국토부, '17.6~'18.6)
한국공항공사	8. 향후 협력업체 용역 설계시 정부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임금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분야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2017년 신규계약 건부터 적용 * 신규 계약건 : 16건(보안방재 15건, 운영 1건) ○ 기존 용역은 계약 종료 후 신규입찰시부터 적용
한국공항공사	9. 공사 직원 퇴직 후 협력 업체 재취업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경력 삭제, 경력제한 조정(10년→5년) * 현행기준 :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단, 공사출신 임직원은 퇴직일로 부터 2년간 선임 배제)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로 원천 차단은 불가
한국공항공사	10. 용역업체 계약시 불미스런 문제로 인해 기관에 손 해를 미치는 경우 계약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등 확인시 관련자 즉시 퇴출, 해당업체 계약연장 불허, 인센티브 미지 급 등 불이익 조치 - '17. 1월부터 전 위탁용역에 적용 중 * 표준 과업내용서 개정 완료('16. 11월) * SLA 평가기준 개정 완료('17. 1월)
한국공항공사	11. 외화 밀반출, 뇌물수수 등 직원 비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 밀반출 관련 직원 파면 조치('16.12.8) ○ 대테러 장비 구입비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행위자 4명은 행위 확인즉시 직위해제(5.12. 1명, 5.17. 2명, 7.4. 1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관련자로부터 직접 돈을 되돌려 받은 직원 3명 파면조치('17.3.25) ※ 그 외 관련자 2명은 재판결과 확인 후 업중 처벌예정 ○ 물품 검사절차 등 내부통제 강화 ('16.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 검사자 지정, 외부전문가 포함된 규격 및 검사위원회 구성 - 계약담당자의 낙찰자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 본사 및 지사 전직원 대상 교육실시 ('16.6월 ~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감사위원 청렴 순회교육('16.6.28.~7.29.) - 감사실장 찾아가는 청렴Talk 순회교육('16.8.9.~8.29.) ○ 청렴감찰팀 인원 증원 직제 조정 ('16.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내용 : 5명 ⇒ 6명 (1명 증원)
한국공항공사	12. 안전, 보안업무 등 핵심 업무 직고용이나 자회사 설립 등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고용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핵심업무인 대테러대응업무를 직영으로 전환 ('16.12월) * 항공보안팀을 테러대응팀 및 보안계획팀으로 분화하여 대응 능력 향상 ○ 직영인력 채용 : '17.4월중(채용인력 20명) 채용공고 * 공항별 배치 : 김포 5명, 김해 4명, 제주 5명, 대구 3명, 청주 3명
한국공항공사	13. 착륙료 감면 축소 등을 통해 공항소음피해대책 사업비 확대 방안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사업비 시행관련 사례조사('16.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비 부담 주체 - 소음대책비 산정 근거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유발자의 부담률 강화를 통한 소음 피해 대책 사업비 확대 방안 검토 -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제도 등 정비
한국공항공사	14.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공항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 수립('17.2.10) ○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저소음 항공기 도입 권고(B-787, A-350 등) ○ 항공기 소음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용역 시행('18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소음자동측정망 통합 추진계획 수립('17.12) (김포·김해·제주 소음감시센터 통합관리) - 항공기 소음분석기능 고도화('18.6) (항로감시 등 입체적인 분석기능 구현) - 소음 발생원인 항공기에 대한 감시 강화 추진('18.12) : 정부 및 항공사 분석결과 공유 및 홍보 실시
한국공항공사	15. 조류 출동 증가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생태환경조사 연구용역('14~'15)을 활용한 체계적 대책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주변 조류 유인요소 제거 및 관리 (삭초, 방제작업, 서식지 및 웅덩이 제거, 배수로장비, 그물망 설치, 조류기피제 살포 등) - 신장비 도입운영('16.7, 열화상카메라, 넷건, GPS장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별 조류생태환경에 맞는 조류총돌 위험성 평가모델 개발('16.10) - 조류퇴치 담당자간 연구동아리운영으로 노하우 공유
한국공항공사	16. 직원비리 관련 내부방지 대책 정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및 지사 전직원 대상 교육실시 ('16.6월 ~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감사위원 청렴 순회교육('16.6.28.~7.29.) - 감사실장 찾아가는 청렴Talk 순회교육 ('16.8.9.~8.29.) ○ 청렴감찰팀 인원 증원 직제 조정 ('16.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내용 : 5명 ⇒ 6명 (1명 증원) - 부패 예방·감시·점검 및 적발, 부패 조사 및 사후 통제 활동 강화 ○ 금품·향응 수수 세부양정기준 강화 ('16.7.28.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0만원 이상 수수 시 감봉·정직·해임·파면 ⇒ 정직·해임·파면으로 강화 (인사규정시행세칙) ○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구축('16.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기관에 서버를 두고 내부신고 활성화
한국공항공사	17. 대형항공사가 체크인 카운터를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공항에 공용여객처리시스템 도입으로 독점문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수송분담비율에 따라 체크인 카운터 배정 ○ '16년 조치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청주공항 시스템 설치·운영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table border="1" data-bbox="799 309 1445 465">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대구공항(30개소)</th> </tr> <tr> <th>대형항공사</th> <th>LCC</th> </tr> </thead> <tbody> <tr> <td>수송분담율</td> <td>35%</td> <td>65%</td> </tr> <tr> <td>카운터점유율</td> <td>40% (12개소)</td> <td>60% (18개소)</td> </tr> </tbody> </table> <p data-bbox="799 488 1469 566">※ 청주공항도 수송분담비율(대형 30%, LCC 70%)에 따라 운영 중</p> <p data-bbox="775 577 1469 618">○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공항 확대 구축('17~'18)</p>	구분	대구공항(30개소)		대형항공사	LCC	수송분담율	35%	65%	카운터점유율	40% (12개소)	60% (18개소)
구분	대구공항(30개소)												
	대형항공사	LCC											
수송분담율	35%	65%											
카운터점유율	40% (12개소)	60% (18개소)											
한국공항공사	18. 제주공항 주차시설 포화 문제를 개선할 것	<p data-bbox="767 689 1007 725">< 조치실적 ></p> <p data-bbox="775 741 1469 837">○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공항외부 이전('16.9.1)</p> <p data-bbox="783 853 1453 949">- 개선전 대비 주차차량 약 60%감소로 주차장 및 구내도로 이용 원활(혼잡해소)</p> <p data-bbox="775 965 1246 1001">○ 주차빌딩 신축('17.6월)</p> <p data-bbox="783 1016 1078 1052">- 3층 4단, 850면</p>											
한국공항공사	19. 자체개발장비 판매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data-bbox="767 1120 1007 1155">< 조치실적 ></p> <p data-bbox="775 1171 1469 1267">○ 조직 축소 및 통폐합을 통한 내실화('16.06)</p> <p data-bbox="783 1283 1414 1379">- 2개팀 → 1개 TF팀</p> <p data-bbox="783 1395 1414 1491">- 개발장비 17종 중 경쟁력 있는 장비(5종) 위주 사업추진</p> <p data-bbox="775 1507 1469 1603">○ 기술용역사업 및 예비품 공급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실적</p> <p data-bbox="823 1619 1469 1715">* 터키 키프러스 공항 항행장비(GP) 전파환경분석 기술용역('16.11), 울릉공항 환경분석 기술용역('16.12)</p> <p data-bbox="823 1731 1469 1789">* 터키 항행장비(ILS/DME) 예비품공급 사업 1건</p> <p data-bbox="775 1805 1469 1901">○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로열티를 받는 IP사업으로의 전환 방안 검토('16.12)</p> <p data-bbox="767 1917 1110 1953">< 향후 추진계획 ></p> <p data-bbox="775 1968 1469 2065">○ 기술용역사업 및 예비품 공급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계획</p> <p data-bbox="783 2080 1453 2177">- 국토부 항공교통센터 전파환경분석 기술용역 계약 예정('17.04)</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키프러스 공항 항행장비(GP) 이설 사업 기술용역 계약 진행 中('17.05) ○ IP사업의 점진적 추진계획 수립
한국공항공사	20. 청주공항 수요 증가에 대비 국제선 노선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닝보 정기노선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타항공, 주3회 ('16.3월~) - 동방항공, 주3회 ('16.8월~) ○ 부정기노선 개설을 통한 항공수요창출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삿포르, 어월뒤쓰 등 28개노선 1,104편 운항 ○ 청주공항 러시아 노선개설을 위한 항공사 (야쿠티아) 마케팅 실시 ('17.2월) ○ 아시아개발회의 참석('17.3월) ○ 청주-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운항개시 ('17.4월~) ○ 청주-러시아노선 홍보실시('17.4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공항 노선다변화를 위한 항공사 마케팅 확대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노선개발회의 참석('17.9월) - 공사-LCC사장단 및 실무자 간담회 (반기별1회씩) - 공사-지자체 합동 항공사 마케팅 실시 (연중) ○ 청주공항 일본노선개설을 위한 일본공항 면담('17.4월)

공백

한 국 감 정 원

공백

□ 한국감정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감정원	1. 국민의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률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반영도 제고 등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거래정보 확대 및 개선('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관계법령 개정 지원 *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정보 신고대상으로 추가 * 불법행위(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공시가격 특성 정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특성 자동인식 시스템 개발 및 적용('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기반의 객관적 조사기준 적용을 통한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 - 표준지 공시지가 특성검수 절차 신설 및 시행('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자료, 현장사진, 특성자동인식 정보를 활용한 특성정밀검증 절차 수행 ○ 실거래가 반영률 균형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공시가격 차등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표준지 4.94%(서울5.46%, 제주18.66%)('17.2) * '17 표준주택 4.75%(서울5.53%, 제주18.03%)('16.12) ○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표준주택 3만호 증설('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혼합주택(주상용 주택) 등 3만호 증설을 통한 주택용도별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 '16년도 19만호 → '17년도 22만호 ○ 주택가격수준별 실거래가 반영률 균형 제고를 위해 고가표준주택 364호 확대 및 공시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표준주택 '16년도 913호 → '17년도 1,277호 *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격 6.39% 상승, 30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격 11.02% 상승 ○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 워크숍 및 교육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래분석을 통한 권역별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방안 워크숍 실시('16.10) - 실거래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총8회, 18일, '16.6~12) ○ 공동주택 실거래가 기반 예측가격 제공 및 조사자 교육 실시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조사자 교육 강화(고가공동주택 및 가격균형성 중점교육)('16.10~11) - 실거래가 기반 자동산정시스템 활용 공시 가격 적정성 제고('16.12)
한국감정원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전자계약 540건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2건 → 하반기 540건으로 증가 ○ 서울시 각 지자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및 안내자료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별교육(16회), 구청(25개구), 산하 주민센터(424곳) 자료 배포 등 ○ 공공부문 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대상 전자계약 선제적 도입하여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전세임대('16.11.29), 행복주택('16.12.16) 대상으로 전자계약 실시 ○ '17년 전자계약 전국 순차적 확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 및 경기도, 세종시(4월), 전국(7~8월) ○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지원, 사전 교육 및 안내자료 배포, 홍보활동 지속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감정원	3.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및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표본조사 대상사업 확대 제도개선 건의(기재부 '16.10, KDI '16.12) - 토지보상비 추정업무 제도화 개선 건의(기재부, '16.10~'17.2) ○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의무화를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 건의(국토부, '16.10, '16.11) -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대상사업 보상평가서 검토의무화 제도개선 건의(기재부, '16.11~'17.2)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제도설명 및 협조공문 발송('16.10) ○ 업무협약(MOU)기관 활성화 방안 협의(지방행정연구원, '17.2) ○ 사전표본·보상검토 등 적정성관리업무 담당자 상반기 교육실시('17.3.13~14) <p>< 향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성과분석 보고서 발간('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제도 개선 추진 ○ 토지보상제도 개선 및 보상평가서 검토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17.8)
한국감정원	4. 부실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의 공신력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 연계형 타당성조사 도입('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작위추출된 감정평가서 중 부실평가 의심건에 대한 타당성조사 가능 ○ 타당성조사 자문위원 확대('16.1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외위원 6명 추가(총원 11명⇨17명) ○ 타당성조사 윤리규정 제정('16.11) ○ 타당성조사사례집 확대 발간·배포('16.11) - 내용·구성·분량 등 실무 활용성 개선 - 전년 대비 18%p 확대 배포 <p>< 향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 연계형 타당성조사 본격실시('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 물량확대) '16년 1,281건 ⇨ '17년 1,500건 - 부실감정평가 발생우려가 큰 섹터 중심으로 정밀조사 ⇨ 타당성조사 연계 ○ 타당성조사 관리분석시스템 구축('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정보, 조사결과, 절차, 관련법령 등 -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 도출시 시스템 활용 ○ 타당성조사 5개년 자료집 발간·배포('1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 간 축적된 타당성조사 사례 178건 분석 후 쟁점사항별 수록 - 환류효과 강화를 위해 배부처 대폭 확대 <p>* 금융기관 여신심사팀, 보상수탁 기관, 지자체 보상업무 부서, 국세청 등</p>
한국감정원	5.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구축으로 지자체 정밀조사 대상 선정 지원 강화('17.3~) - 지나친 저가(고가) 등 허위신고 의심거래건에 대한 참고가격 등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담당 공무원의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조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
한국감정원	6. 실거래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TMS 거래신고 화면 개선 사전준비 - 화면설계 및 정보시스템 연계회의(~'16.5) <p>* 토지·건축물대장 등 자동연계 추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개편 실무자 의견수렴회의('16.6) * 물적·인적정보 분리 등 입력화면 구성 시연 - 신고시스템 개발사항 확정 및 화면개발(~'16.12) ○ RTMS 거래신고 화면 개선을 통한 거래 신고오류 최소화('17.1~) - 거래당사자 신고화면구성 간소화, 작성 순서 개선 및 입력 요약정보 제공 등 입력오류 방지 - 소재지 선택시 토지 및 건축물대장 자동 연계를 통한 입력 오류 최소화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신고자의 신고불명확 건을 최대한 공개 하여 누락률 제고를 통한 실거래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정비 실시 - 거래신고자들이 임의 입력*하여 전산 공부와 매칭되지 않는 누락된 건에 대하여 건별 대조작업을 통해 정비('16.12) * 지번, 동명, 호명 등 코드입력을 하여야 전산 공부와 매칭되어 실거래 정보가 누락되지 않으나, 임의입력 하는 경우 많음 * (정비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16.1~3월 누락률이 약 26%에서 '16.10월 이후 7%까지 개선
한국감정원	7.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정보시스템상의 실거래 총량 차이에 대한 원인을 비교·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molit.g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정보시스템(www.r-one.co.kr)은 근본적으로 ① 활용 목적, ② 집계기준, ③ 관리범위 등이 다르므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table border="1" data-bbox="778 304 1469 696"> <thead> <tr> <th data-bbox="778 304 895 376">구분</th> <th data-bbox="895 304 1177 376">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R-One)</th> <th data-bbox="1177 304 1469 376">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78 376 895 450">활용목적</td> <td data-bbox="895 376 1177 450">부동산 거래량 공표 (거래동향 파악)</td> <td data-bbox="1177 376 1469 450">실거래 가격정보 등 제공 (개별부동산의 정보제공)</td> </tr> <tr> <td data-bbox="778 450 895 524">집계기준</td> <td data-bbox="895 450 1177 524">신고일 기준 (계약일과 최대 60일 차이)</td> <td data-bbox="1177 450 1469 524">계약일 기준</td> </tr> <tr> <td data-bbox="778 524 895 620">관리범위</td> <td data-bbox="895 524 1177 620">매매거래 외, 판결, 등 교환, 증여, 분양권 등 거래 전체</td> <td data-bbox="1177 524 1469 620">매매거래</td> </tr> <tr> <td data-bbox="778 620 895 696">공개시기</td> <td data-bbox="895 620 1177 696">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td> <td data-bbox="1177 620 1469 696">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td> </tr> </tbody> </table> <p data-bbox="778 757 1469 1070">○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molit.go.kr) 공개안내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팝업화면에 공개정보와 통계정보가 차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공지하여 사용자 활용시 유의하도록 조치('17.3)</p> <p data-bbox="778 1093 1469 1182">*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 공개/통계차이 공지</p> <p data-bbox="778 1205 1469 126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목적,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상이하나 활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778 1279 1469 1496"> <thead> <tr> <th data-bbox="778 1279 946 1317">구분</th> <th data-bbox="946 1279 1078 1317">활용목적</th> <th data-bbox="1078 1279 1203 1317">집계기준</th> <th data-bbox="1203 1279 1337 1317">관리범위</th> <th data-bbox="1337 1279 1469 1317">공개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78 1317 946 1391">실거래가 공개(RTMS)</td> <td data-bbox="946 1317 1078 1391">실거래 참고자료 제공</td> <td data-bbox="1078 1317 1203 1391">계약일 기준</td> <td data-bbox="1203 1317 1337 1391">매매거래</td> <td data-bbox="1337 1317 1469 1391">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td> </tr> <tr> <td data-bbox="778 1391 946 1496">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td> <td data-bbox="946 1391 1078 1496">부동산 거래량 공표</td> <td data-bbox="1078 1391 1203 1496">신고일 기준 (계약일과 최대 60일차이)</td> <td data-bbox="1203 1391 1337 1496">매매 이외 판결, 교환, 증여 등 전체거래</td> <td data-bbox="1337 1391 1469 1496">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td> </tr> </tbody> </table>	구분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R-One)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	활용목적	부동산 거래량 공표 (거래동향 파악)	실거래 가격정보 등 제공 (개별부동산의 정보제공)	집계기준	신고일 기준 (계약일과 최대 60일 차이)	계약일 기준	관리범위	매매거래 외, 판결, 등 교환, 증여, 분양권 등 거래 전체	매매거래	공개시기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구분	활용목적	집계기준	관리범위	공개기준	실거래가 공개(RTMS)	실거래 참고자료 제공	계약일 기준	매매거래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	부동산 거래량 공표	신고일 기준 (계약일과 최대 60일차이)	매매 이외 판결, 교환, 증여 등 전체거래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
구분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R-One)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																														
활용목적	부동산 거래량 공표 (거래동향 파악)	실거래 가격정보 등 제공 (개별부동산의 정보제공)																														
집계기준	신고일 기준 (계약일과 최대 60일 차이)	계약일 기준																														
관리범위	매매거래 외, 판결, 등 교환, 증여, 분양권 등 거래 전체	매매거래																														
공개시기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구분	활용목적	집계기준	관리범위	공개기준																												
실거래가 공개(RTMS)	실거래 참고자료 제공	계약일 기준	매매거래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	부동산 거래량 공표	신고일 기준 (계약일과 최대 60일차이)	매매 이외 판결, 교환, 증여 등 전체거래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백

□ 주택도시보증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도시 보증공사	1. 최근 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공사 보증한도 소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보증 규모 및 한도 운영에 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부보증 기준 확대('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보증 사업장 공공택지를 담보부 보증의 담보에 포함(대지비의 100%)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 양도받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60%) 담보부보증에 포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한도 확보를 위한 자본확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유 유가증권 현물출자 추진
주택도시 보증공사	2. 최근 월세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자금 보증 실적이 저조하므로 서민주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료율 인하('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료율을 연 0.13%로 인하 * 기존 보증료율 : 0.17%~0.20% ○ 보증대상 확대('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팀목전세대출(건설 중인 임대주택용)에 대한 보증취급 개시
주택도시 보증공사	3.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심사 강화 및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강화 * 계약금 납부요건 5%→10% 이상으로 상향,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투자수수료 감소 유도
주택도시 보증공사	4.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 중복 발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강화 * 계약금 납부요건 5%→10% 이상으로 상향,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투자수수료 감소 유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보증 이용정보 교류로 2건 초과 중복보증 차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도시 보증공사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증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인하('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연 0.15% → 아파트 연 0.128%, 기타 연 0.154% 법인 연 0.227% → 아파트 연 0.205%, 기타 연 0.222% ○ 보증한도 확대('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의 90% 이내 → 100% - 수도권 4억 지방 3억 → 각 5억, 4억 ○ 담보인정제도 개선('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아파트 유형도 담보인정비율 상향(100%) * (종전) 75~80% → (개선) 100%
주택도시 보증공사	6. 주택 관련 보증상품 운용에 필요한 시세 및 가격정보 활용에 있어 민간은행 자료 보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아파트) 산정시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를 KB시세와 함께 1순위로 적용('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 대출보증/임차료 지급보증
주택도시 보증공사	7. 개인에 대한 금융성대출 보증 업무에 있어 주택 금융공사와의 업무영역 중복 및 개인보증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 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증 보증요건 강화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신청인별 보증건수 강화(주금공과 합산 2건 이내) 및 보증비율 축소(100%전부보증 → 90%부분보증) *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 : 82,291억원('16.1분기) → 68,012억원('17.1분기) ○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납부요건 5%→10% 이상으로 상향,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투자수요 감소 유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보증 이용정보 교류로 2건 초과 중복보증 차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도시 보증공사	8. 8.25 부동산대책에 따른 PF대출 보증심사 강화 이후 알박기 등에 따른 사업 무산 등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보증 심사강화(8.25가계부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신청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변경 -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 및 매도가 확정(재결, 판결 등)된 이후로 보증 신청시기 변경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5 대책 효과 분석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5대책을 통한 공급규제 정책이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예정
주택도시 보증공사	9.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증요건 개선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인정제도 개선('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아파트 유형도 담보인정비율 상향(100%) * 비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거용오피스텔)(종전) 75~80% → (개선) 100%
주택도시 보증공사	10. 리모델링자금보증 등 실적이 저조한 보증상품 및 손실이 과다한 보증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자금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수직증축 허용, 지자체 융자금 지원 등)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 증가시 보증수요 발생 예상 - 보증수요 발생에 따른 고객 Needs 수렴을 통한 보증상품 개선
주택도시 보증공사	11. 미분양 증가에 따른 보증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가 운영 중인 미분양급증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확대 운용 * 미분양주택수,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을 고려하여 매월 관리지역 선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강화('17.1) * 3개월 연속속 미분양세대수가 1천호 이상이며 미분양감소율이 10% 미만인 사업장 신규 지정 ○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 실시('16.10) - 사업부지 매입 前 예비심사 의무화 * 사업부지 매입전 예비심사 미흡, 보증신청시 재평가를 실시하여 미흡등급인 경우 보증거절 ○ 분양보증 본사심사 강화('16.10) - 관리지역에서 500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시 본사심사 의무화 * 본사심사요건 강화 : 기존 1천세대→500호 * 승인조건 부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강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보증 취급요건 강화 - 미분양리스크가 높은 사업장의 보증 취급 요건 강화방안 검토
주택도시 보증공사	12. 보증료 환불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료 환불 관련 업무지시 - 보증료 환불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하도록 업무지시('16.12)
주택도시 보증공사	13. 소형임대주택 특화 리츠의 적극적 활용, 유한책임대출 공급 확대, 장수명주택 공급 촉진 등을 위한 공사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 및 국민행복주택리츠 신규 도입 및 기금출자 실행('16.12) - 219억원 기금출자를 통해 총 2,790세대 소형 임대주택 공급 * 청년희망리츠 50세대, 행복리츠 2,740세대 ○ 디딤돌대출 유동화 방식에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 협의(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 '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반영 * 디딤돌대출 운용재원 : 기금 직접예산 및 유동화 재원(mbs 발행) * 현재 유한책임대출은 기금 직접예산으로만 취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상반기 중으로 디딤돌대출 유동화 방식에 유한책임대출제도 도입 예정 ○ 장수명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료율을 결정하는 '초기 예상분양률 평가'에 장수명주택 상위등급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 검토 ○ 청년희망리츠, 행복리츠 등 지속적 기금출자로 총 5,000세대 소형 임대주택 추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희망리츠 2,000세대, 행복리츠 3,000세대
주택도시보증공사	14. 부영 등 민간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자금의 관리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지원된 임대주택의 관리책임 강화('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자 등이 하자보수, 임대료 책정 위반 등 시정명령 미이행시 기금 회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기금의 공공성 확충
주택도시보증공사	15. 분양보증사고시 분양계약자 및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도입('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대물변제 등을 방지하여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 선의의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이행심사요령 및 체크리스트 마련('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계약자 이행심사업무 체계화 및 효율화 도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도시 보증공사	16. 하자보수보증 이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하자판정 기준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mm 미만 균열하자 판정기준 변경('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mm 미만 균열에 대하여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하고,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여 비용 산정 ○ 고소작업 위험할증률 적용('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외부벽체의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에 대한 기초금액 산정 시 고소작업 위험할증률 적용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판정 및 기초금액산정 기준 합리적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하자판정기준 및 현실성 있는 보수방법 적용 기준 마련
주택도시 보증공사	17. 구상채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부실채권 매각시 자산관리공사 매각을 적극 활용하여 서민 피해를 방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각('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채권금액 2,503억원 * 2016.09.29일 자산양수도계약체결 완료 ○ 자산관리공사와 채권매각 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09.28일 1차 체결 - 2017.02.14일 2차 확대체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각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09월 중 자산양수도계약체결 예정 ○ 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 협력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결된 MOU 내용에 따라 매년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협력 예정
주택도시 보증공사	18. 공사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배당상품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체계 개선('17.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및 자금운용규정 개정 * 실적배당상품을 위탁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탁운용관리규정 제정 * 실적배당상품 외부전문기관 위탁운용기준 마련
주택도시 보증공사	19. 과도한 행사비 및 홍보비 지출 등 방만 경영 사례를 시정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및 수시 예산집행 점검('17.3) - 홍보비, 행사비 등 경비 전체에 대한 적정 사용여부 분기 및 수시 점검 관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절감계획 수립 -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최소화 ○ 예산집행 적극 관리 - 집행 과정에서 방만 요소가 없도록 예산집행을 적극 모니터링
주택도시 보증공사	20.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 사업 예산 편성시 반영 - 공사의 대표 주거복지 사회공헌 프로 그램인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과 관련 하여 농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사회공헌 실시 -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농촌지역 실시 -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 지원 지속 실시 등

공백

교통안전공단

공백

□ 교통안전공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안전공단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관련 기준 제도화 및 안전 기준의 선제적 연구 등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기술 연구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내용 :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평가 기술개발(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 경고장치 등) - 수행기간 : '09.12~'17.6월 - 참여기관 : 서울대, 현대모비스 등 11개 기관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 기술 연구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내용 : 자율주행차 평가기준 및 테스트 베드 개발 - 수행기간 : '16.6~'18.12월 - 참여기관 : 서울대, 현대모비스 등 15개 기관 ○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세부 절차(규칙) 및 안전운행요건(고시) 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안전운행 요건 확인절차 수행 - ('16년) 현대차, 서울대 및 한양대 등 11대 임시운행 허가 - ('17.3월) KAIST, 네이버 및 현대차 등 6대 임시운행 허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UNECE/ WP.29 (자동차기준 국제화포럼)에 적극 참여, 연구성과 발표 및 국제기준 조화 등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명령조향기능(ACSF) 허용을 위한 WP.29 회의를 한국 개최 예정('17.5.15~5.18) <p>* 자동명령조향기능(ACSF) : 자동주차, 차로유지, 차로변경 등을 실시하는 첨단조향장치기능</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안전공단	2.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 해제 자동차단속 강화 및 위반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16.4.28) 이후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수립·추진('16.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속도제한장치 관련 단속시행 협조(~'16.8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과속 단속 정보 제공 (경찰청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정보 등 근거자료 제공 (국토부·교통안전공단 → 지자체) * 임시검사 명령(지자체 → 차주) * 임시검사 시행(교통안전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9~12월까지 1,880대 임시검사 명령요청 (화물차 100km/h, 승합차 120km/h 초과차량)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기록을 활용한 현장단속기 개발 ('16.12~'17.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기록 분석결과 업종별 제한속도 초과운행 시 최고속도 진단기로 단속 ○ 운행기록 현장단속 관련 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법 제55조('17.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17.2.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17.1.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과속단속 정보활용 및 임시검사 명령 지속 추진을 통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금지 분위기 조성 ○ 공단 지역본부·지사(14개)별 최고속도제한장치 진단기를 통한 지자체 합동 노상점검 강화 ○ 최소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운행기록 현장단속 사전홍보('17.4~6월) ○ 운행기록 현장단속 시행('17.7.18)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안전공단	3. 버스 고령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제도를 택시로 확대 시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7.2.3~3.20) -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대상 : 65세이상 사업용 택시 운전자 * 검사내용 : 적·부판정 도입 등 * 검사주기 : 65세부터 매3년, 70세 이후 매1년 * 검사시행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자격제도 수용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택시 자격유지검사 현장체험 실시('17.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 제2차관, 종합교통정책관 등 - 개인택시조합 : 서울·인천·전북조합 임원 등 - 지자체 : 전국 17개 지자체 공무원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위해 10개 지자체 공무원 대상 현장체험 실시('17.4월~6월) ○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검사인력, 시설·장비 등 추가 인프라 구축관련 국토부 협의('17.4월~11월)
교통안전공단	4.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육수요에 비해 수용 능력이 부족하므로, 호남권 지역에 교통 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 및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외 신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신규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완료('16.11월~'17.2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용역결과 주요내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는 OECD 주요국 중 여전히 높은 사고율을 보임.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추가 등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이 필요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연간 총 교육수요 추정결과 : 111,940명 * 신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비용 추정결과 : 약 200억원 이상 * 사업비 조달방안 : 정부예산·책임보험 분담금 활용, 5대 공제조합 출연금 공동분담, 민간자본 유치, 공단지금 활용 방안 등 * 신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평가 지표 개발 </div> <p>○ 체험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및 교육수요 창출을 위한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17.3월)</p> <p>- 야간 및 고령자운전자 교육과정</p> <p>< 향후 추진계획 ></p> <p>○ 신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당위성 확보를 위한 노력</p> <p>- 신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확보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등 관련부처 협의('17.5월) <p>-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 필요성 홍보</p> <p>○ 기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로 교육수요 창출(계속)</p> <p>- 선진국 체험교육 과정 이수를 통한 교수 인력의 전문성 강화('17.5월)</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안전공단	5.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유형·사례 및 예방대책 등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변화, 행동특성, 안전운전요령 등 * '16년 고령자 7,035명 교육 시행 ○ 농촌지역 농기계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주차 및 교통사고 위험성 등 농촌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시행 ('16년 25개 시·군, 30개 마을 대상) - 농기계용 후부반사판(600개), 반사띠(30롤), 자전거 야광스티커(300개), 야광지팡이(600개) 지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박스 영상 등 활용 및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지속 시행 ○ 국토부·농촌진흥청 협업 및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지속 추진
교통안전공단	6. 항공장애표시등 표시 안전점검 수행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물량 선정 및 현장 검사인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항공장애표시등 검사대상이 5,500개소로 전년대비 정규직 인력 15명을 총원하여 총 26명이 안전점검 수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전국 전체 검사물량 7,571개소에 대한 안정적인 검사수행을 위해 기재부 인력증원 요청으로 검사인력 확보 노력 지속('17.6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장애표시등 원격감시 시스템 및 운영방안 개발 연구용역 발주('17.4월) - 항공기 주요 순항지역 및 관리 취약 지역의 장애등 작동여부(섬광주기 등)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검사 신뢰성 확보 및 부족한 현장검사인력 대체
교통안전공단	7. 기계식주차장 정기 검사 시행을 보다 내실화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고도화를 위한 용역추진 - 전문기관(KAIST) 연구용역 시행('17.2. 21) ○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주기 4년)에 대한 정밀안전 검사제도 도입 추진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16. 8. 12, 윤관석의원) - 주차장법 개정('17. 3. 2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고도화 연구용역 실시('17.2~8월) - 검사방법, 검사기준 등 정기검사체계 개선 ○ 연구결과를 반영한 법령개정 추진('17.9월) - 연구결과를 반영한 정기검사 방법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 ○ 검사제도의 보완점 발굴을 위한 사고 조사제도 도입 추진('17.5월) - 사고 조사결과 분석 및 검사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교통안전공단	8. 드론조종사 자격증명 및 교육시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교관 안전교육 법제화('16.10월)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4 개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교관은 항공법, 사고사례, 비행교수법 등으로 구성된 조종교육 교관과정 및 실기평가과정 이수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교관대상 안전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종교육 교관과정 32명('16.12월) - 실기평가과정 12명 수료('17. 2월) ○ 드론 자격제도 강화('17.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개정 <p>* 기존 무인회전익을 무인멀티콥터와 무인헬리콥터로 구분하여 조종특성을 고려한 자격 세분화로 안전수준 함양</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교관안전교육 정기 운영(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교육과정 분기별(연 4회 이상) 운영 ○ 드론 자격 및 교육체계 개선 정책연구 용역 수행(17.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종자격 세분화, 교육기준 개선 등 																							
교통안전공단	9.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지수 조사결과 활용 인센티브 및 컨설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 포상금 수여('16.12월) - 매년 문화지수 하위 20% 지자체 대상 특별실태조사 및 교통안전 개선 권고 <p>* '16년 교통문화지수 6~40% 증가</p> <table border="1" data-bbox="821 1697 1422 1937"> <thead> <tr> <th rowspan="2">'13년 하위 20% 지자체</th> <th colspan="3">교통문화지수</th> </tr> <tr> <th>'13년</th> <th>'16년</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경기 시흥시</td> <td>75.83</td> <td>80.43</td> <td>▲ 6.07%</td> </tr> <tr> <td>경기 화성시</td> <td>75.54</td> <td>83.04</td> <td>▲ 9.93%</td> </tr> <tr> <td>대전 동구</td> <td>74.13</td> <td>88.62</td> <td>▲19.55%</td> </tr> <tr> <td>전북 완주군</td> <td>50.76</td> <td>71.09</td> <td>▲40.05%</td> </tr> </tbody> </table> <p>* '13년 결과 하위 20% 지자체 선정('14.2월), 개선권고('14.11월), 지자체 개선권고 시행('15년)</p>	'13년 하위 20% 지자체	교통문화지수			'13년	'16년	증감률	경기 시흥시	75.83	80.43	▲ 6.07%	경기 화성시	75.54	83.04	▲ 9.93%	대전 동구	74.13	88.62	▲19.55%	전북 완주군	50.76	71.09	▲40.05%
'13년 하위 20% 지자체	교통문화지수																								
	'13년	'16년	증감률																						
경기 시흥시	75.83	80.43	▲ 6.07%																						
경기 화성시	75.54	83.04	▲ 9.93%																						
대전 동구	74.13	88.62	▲19.55%																						
전북 완주군	50.76	71.09	▲40.0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지수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및 컨설팅 지자체 선정기준 개선(연중) - 교통문화 우수도시 포상금 증액 및 지자체 담당자 포상 신설로 지자체 및 담당자의 적극적 노력 유도 <table border="1" data-bbox="799 645 1439 922">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포상금 (‘16년→‘17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전체 1위</td> <td>지자체</td> <td>300 → 500만원</td> <td rowspan="3">증액</td> </tr> <tr> <td>그룹별 1위</td> <td>지자체</td> <td>200 → 300만원</td> </tr> <tr> <td>그룹별 2위</td> <td>지자체</td> <td>100 → 200만원</td> </tr> <tr> <td>그룹별 3위</td> <td>지자체</td> <td>50 → 100만원</td> <td></td> </tr> <tr> <td>그룹별 1위</td> <td>담당자</td> <td>100만원</td> <td>신설</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문화지수 조사결과 변동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자체 선정기준 개선 * 기존 : 최근 1년 하위 20% 4개 지자체 * 개선 : 최근 3년 하위 20% 4개 지자체 * 선정(‘17.2월), 특별실태조사(‘17.3월), 개선 권고(‘17.11월) 	구분	대상	포상금 (‘16년→‘17년)	비고	전체 1위	지자체	300 → 500만원	증액	그룹별 1위	지자체	200 → 300만원	그룹별 2위	지자체	100 → 200만원	그룹별 3위	지자체	50 → 100만원		그룹별 1위	담당자	100만원	신설
구분	대상	포상금 (‘16년→‘17년)	비고																					
전체 1위	지자체	300 → 500만원	증액																					
그룹별 1위	지자체	200 → 300만원																						
그룹별 2위	지자체	100 → 200만원																						
그룹별 3위	지자체	50 → 100만원																						
그룹별 1위	담당자	100만원	신설																					
교통안전공단	10. 자동차리콜센터 홍보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촉구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리콜 알리미서비스 안내 및 서비스 신청접수 등 가입채널 확대 시행(‘16.11.8) - 리콜알리미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 * ‘15년 1,917명에서 ‘16년 203,106명으로 약 100배 증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리콜센터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17.4) - 자동차 홍보영상물 제작 시 자동차 리콜센터 소개 포함 - 홍보영상 전국 검사소 등 배포 ○ 자동차리콜센터 홍보물 제작 및 배포(‘17.1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안전공단	11. 리콜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안 촉구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통보를 우편발송과 휴대전화문자 메시지 전송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완료('17.7.18 시행)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리콜알리미서비스 안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등 가입채널 확대 시행('16.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알리미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1,917명에서 '16년 203,106명으로 약 100배 증가 - 해당 법 시행 전 발생하는 리콜의 경우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리콜 안내

공백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백

□ 한국철도시설공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 시설공단	1.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부채감축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부채감축 추진으로 '16년말 기준 전년대비 2,666억원 부채감축 ○ 선로이용량과 운행횟수 등 변동요인과 연계한 단위선로사용료 체계 도입방안 철도산업위원회 보고('17.2.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로이용량과 운행횟수 등 변동요인과 연계한 사용료 기준 확정('17.7월~8월)
한국철도 시설공단	2. 철도건설사업 예산의 실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이사장님 주재로 격상, 점검단 內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 ('17.1.9~) ○ 예산집행 특별관리 대책수립('17.1.25) * 민원해결전담반, 용지매수전담반, 내·외부 전문가 합동특별점검반 구성 및 운영 등 ○ 경영진의 매주 1개 현장 실사점검 및 시공사 사장단 간담회 시행('17.2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 지속 운영 및 주간 단위 모니터링 시행('17.1월~) ○ 공구·공정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주기적인 경영진 현장실사점검 및 간담회를 통한 재정집행 강화('17.2월~) ○ 공단 자체 건설기술자 평가 시 사업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현장에 시스템적으로 예산집행을 독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 시설공단	3. 오래된 철도시설물 개량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7년 개량사업예산 616억원 증액 확보 * '16년 4,733억원 → '17년 5,349억원 (전년대비13%↑) ○ 노후 및 안전시설물 개량사업 중기 (‘18~’22) 투자계획 수립(‘16.12.20) ○ 안전관리전반에 대한 재진단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17.1월) * KR 안전관리시스템 제고방안 토론회 시행(‘17.1.18)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18년도 개량사업 예산증액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협의
한국철도 시설공단	4. 교량 등 고속철도 일부 구조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철저히 시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철도 구조물 내진보강 조기완료를 위하여 '17년 예산을 전년대비 130% 증액(‘16.12) * '16년 224억원→'17년 510억원(286억원 증액) ○ 총 대상 253개소, '16년까지 201개소(79.4%) 내진성능확보 및 잔여 52개소는 '18년완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7월~'17.12월 : 영남구간 23개 보강중 - '17.5월 : 1단계(수도권·충청권) 18개 착공 - '17.7월 : 2단계(영남권) 11개 착공
한국철도 시설공단	5. 철도터널내 재난방송 수신 설비는 철도환경에 적합한 합리적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설비(FM/DMB) 설치기준을 철도설계 기준(국토부고시)에 반영요청('16.10.27, 공단→국가건설기준센터) * 철도설계기준 건설기준위원회 참석 (‘17.2.9, 국가건설기준센터 주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개정 등 일정에 따라 원주~강릉 사업에 적용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4월 : 중앙건설심의위원회(국토부) - '17. 5월 : 국토부 고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개정 - '17. 6월 : 원주~강릉 발주 - '17.12월 : 원주~강릉 서비스 개시
한국철도 시설공단	6. 철도 건설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설계변경 방지대책 수립을 통한 실정보고 활성화('16.6월) ○ 설계조정부를 신설하여 설계변경관련 제도개선, 계획수립 및 심의주관 등 종합관리 시행('17.1월)
한국철도 시설공단	7.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지침 개선 등 현실 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투자평가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시행('16.11월) ○ 철도 투자평가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16.12월) ○ KDI 예타 지침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17.2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타 지침 개선 관련 KDI 업무협의 및 기재부,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 추진
한국철도 시설공단	8. 세종시 접근성 개선을 위한 KTX 세종역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1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기간 : '16.8월~'17.4월 * 시행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서영엔지니어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 시설공단	9. 수도권 고속철도 장대 터널내에서 비상 상황 발생시 탈출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내 비상상황 발생시 탈출용 엘리베이터 17대 설치('15.9월~'16.12월)
한국철도 시설공단	10.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조기건설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16.6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개발계획(1단계 '20년, 2단계 30년) 등 지역 개발계획 시행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한국철도 시설공단	11. 수서고속철도 터널 균열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고속철도터널 점검 실시·안전성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정거장 점검 시행('16.3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03.20 : 균열발생(MTX구간 80m) ·'16.03.31~07.08 : 보강작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Arch 전 구간 243m 중앙부 벽체 내측단면 400mm이상 확대(600mm → 1,000~1,300mm) ·'16.06.10~07.19 : 보강구간 정밀안전 점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 판정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시행] ·'16.07.21~07.26 : 검증단 안전성 확인·검증 - 터널 전체 점검 시행('16.3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03.31~04.05 : 안전점검(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평택 전체 터널(한국시설안전공단 시행) ·'16.06.01~07.12 : 정밀조사(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층대 및 연약대, 구조물 단면 변화구간 등 22개소(한국시설안전공단 시행) ·'16.08.08~10.24 : 시설물 검증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 및 시설물 검증시험결과 안전성확인 ·'16.12.09 : 수서고속철도 개통 ○ 터널 정밀조사 및 시설물 검증시험 등 안전성 확인 후 개통('16.12.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철도 시설공단	12.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대한 무상귀속 등 처리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대기업 특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세부 처리방안 수립(용역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기간 : '15.7월~'17.6월 * 시행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결과에 따른 처리방안을 공정하고 조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업무지원

공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백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제주도내 관광 관련 중소기업 및 지역주민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업체 및 도민 등에 대한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도는 지역협력 예산을 증액 편성 ('16년 : 82억원 → '17년 : 95억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도 관광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개발과 환경의 공존이 필요하므로 건축·개발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요소가 반영 되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기본설계 착수('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 에너지 및 바이오탑 조성 등 설계 시 적극 도입하여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실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한 개발을 위한 JDC미래발전 정책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도내·외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 실시 ○ 사업 추진 시 도민의견 수렴, 개발이익 환원, 난개발 지양, 환경파괴 최소화에 기반을 둔 '성숙한 개발' 실현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첨단, 공공주택 사업 등 추진사업 기본설계 시 친환경 건설자재 의무사용 반영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완료('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지 세부시설 기준마련을 위한 道조례 개정 완료('17.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소송 진행경과에 따른 대응 방안 수립 및 시행('17.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단지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민간투자자 개발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관리 ○ 유원지내 숙박시설 범위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개발 및 투기발생 억제('17.3 조례개정, 숙박시설 30%이내)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 투자개발사업 및 지역상생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협력 강화 및 동반성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마을공동체사업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지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제주도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단지에 행복주택 유치결정('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단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805호*, '16.7.) *행복주택403호 및 10년임대주택 402호 - 첨단단지 공공임대주택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16.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단지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7.5.) 및 공사 착공('17.10.) ○ 특별법에 따른 주택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6. 해울, 영어국제 학교의 지속적인 적자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영어국제 학교의 낮은 총원율을 고려하여 영어국제 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LCS Jeju 및 BHA 졸업생의 해외대학 진학성과를 적극 홍보한 결과 학생총원율 전년대비 대폭 증가 * 61.8%(‘15/16년)→71.8%(‘16/17년) ○ BLT 금리 인하 통해 639억원 절감 * NLCS : 6.6%→4.6(‘14.12) * BHA : 1차 5.7%→5%(‘14.1), 2차 5%→3.9%(‘15.12)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국제 학교 홍보 강화를 통한 학생총원율 개선 및 수익 증대 추진 * ‘18~20년 정원의 80% 수준 학생총원 확보로 흑자 전환 및 부채 감축 예상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7. 항공우주박물관 재정 부담 완화 및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운영 활성화 추진방안 수립 (‘17.3)및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활성화, 전시콘텐츠, 고객맞춤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사회공헌 등 5개 분야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항공우주영역 인기 체험 Zone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체험교실 및 인기 캐릭터 활용 디지털 테마 사업 유치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형 콘텐츠 도입*,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통해 운영개선 추진 *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터, 우주월면걸기체험, 기념품 및 캐릭터 상품개발 등

공백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백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국토 정보공사	1.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IoT,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신기술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 관련 연구·개발 수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술 개발('16.~'1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경계점 표지에 LPWA(Low-Power Wide Area/저전력 장거리 통신)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경계점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 수행('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운행에 필요한 표준화된 데이터와 정밀 전자지도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 - 드론 기술개발 연구 참여('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드론개발 연구에 참여, 공간정보 분야에 필요한 탑재 카메라, 센서 등의 사양 분석 수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연구 추진
한국국토 정보공사	2. “토지알림e 앱” 대피지도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버전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X 토지알림e 앱” 버전 업데이트 완료('17.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전 2.2.1('16.3.16.) → 4.0.1('17.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기능 개선) 응급상황에 119, 가족 등에 위치전송 기능 추가, 간편한 메뉴 구성 등 디자인 개선 * (최신 DB 적용) 토지정보, 대피소 안내 등에 사용되는 영상을 최신화 * (앱 관리 통합) 안드로이드, IOS 운영 체제별 각각 관리에서 통합 관리로 개선 → 신속한 업데이트와 빠른 장애 조치 가능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언론, 각종 박람회·전시회 등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지속 추진

공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백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별 균형있는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균형적 예산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화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지방 6개 권역*에 '17년 81.63억원 지원중('17.1~) * 6개 권역 : 강원, 동남, 충청, 대경, 제주, 호남 ○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 일몰시점 연장을 미래부에 요청('16.9)하여, 당초 '18년 종료에서 '19년 종료로 연장 승인('16.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이후에도 지역 R&D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예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부당집행된 연구개발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환수하도록 하고, 부당집행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부당집행액 환수강화를 위한 일부 제도적 미비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국세체납의 예에 따른 환수절차* 수립('16.10) * 국토교통R&D 연구비정산 업무매뉴얼 개정('16.10) - 미납기관 압류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자압류서비스” 도입('16.10), 신용조사·채권추심을 담당할 전문기관 선정 완료('17.3)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매각절차 간소화 추진('16.10) ○ 연구비 부당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 강화('17.1~계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관리 전문컨설턴트 확대(3명→5명),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신용정보 조기경보)으로 위험과제 지정 및 직접 정산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 발견시 정산·사업담당자, 회계사,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현장실태점검 실시(*16.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3. 연구과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여 연구과제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계, 선정 및 중간단계별로 연구과제 중단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책 기 시행 중임 - 기획과정부터 적절한 연구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기획과정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등에 관한 지침(*15.4 전부개정) - 연구 중단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태에 따라 신청과제를 반려할 수 있는 지원제외조건이 마련*되어 있음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 개정) 별표1의2 ○ 우리원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과부실로 중단된 과제의 연구기관에는 엄격하게 참여제한 등을 적용하여 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조 및 제27조의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 지진 대응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지진 대응 관련 기준 강화 완료('17.2)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개정 완료('17.2.22) * (기존) 3층/500㎡이상 → (변경) 2층/500㎡이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도로 시설물의 지진재난시 사전 예방·대비 체계 구축을 위한 '18년 신규 과제* 추진 예정('17.12) * (과제명) 노후 도로시설(교량, 터널, 사면, 옹벽)의 내진성능 관리 의사결정 기술 개발(4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노후교량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장수명화 기술 확보에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교량 성능개선·보수보강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위한 연구개발 기획*완료('16.12) * (기획과제명) 노후(철거)교량의 성능평가를 통한 공용중 교량의 장수명화 연구기반 구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건설기술연구사업으로 노후교량에 특화한 신규과제* 착수 예정('17.4) * (과제명) 중소노후교량 장수명화 요소기술 실증 및 최적화 연구(5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국토교통 신산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분야 신산업 전담조직 신설 완료('17.1) - 신산업 R&D 중점 기획·관리를 위하여 본부급 '신산업추진단' 신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전문인력 확보중('17.3) - IT(공간정보)분야 PD 1명 채용 완료 - 스마트시티 분야 PD 채용 예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기장 해수담수화플랜트 운영비용의 합리적 분담 방안 검토 및 성공적 해외 진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와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후속연구*와 관련된 전기료 등 운영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 (과제명)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 공정고도화 기술개발('14.12~'19.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UAE에서 검증하고자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추진 중 * (과제명)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16.6~'20.6) - 국제워크숍 등을 통해 연구성과 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 등 계속 지원 예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8. 기업에게 적정수준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대한 기술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수 - 기술료 징수기준은 관련규정을 통해 미래부에서 전부처 통일되게 관리중 * 정부출연금 기준 대기업 4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10% ○ 기술료 징수 확대 노력 -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요청('16.11, '17.3, 2회) - 연구자 대상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제도 교육 실시('17.2, 3, 4, 3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대한 적정수준 기술료 징수를 위해 국토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예정(계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 도심 지하터널 환풍구 및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및 포집 기술 확보에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촉매를 활용한 건설재료·자재를 사용하여 터널 내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연구개발 기획* 완료('16.10) * (기획과제명) 슬러지에서 제조한 광촉매를 활용한 건설재료, 자재 개발 및 적용기술 개발 기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건설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로 추진 예정('17.12) * (과제명) 저비용 고성능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건설기술 개발(5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 국토교통 분야 실증 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분야 실증연구지원을 위한 종합 실증단지 구축 관련 기획연구* 착수('16.7) * (기획과제명) 첨단융합형 국토교통기술 종합 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획('16.7~'17.8) ○ 신규과제 기획시 Test-bed를 제공하는 실증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추진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실증단지 구축 관련 신규과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예정('17.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1. 미활용 특허 조사·분석, 유망 아이템 마케팅지원 등 국토교통연구개발 특허의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R&D 미활용 특허 활용률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16.12) - 미활용 특허 실태조사, 기술이전 지원 등 관리 강화방안 마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활용 특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시범이전 추진 - 실태조사 :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여부 조사, 우수성 및 활용가능성 종합분석 등 추진 예정('17.4~9) - 시범이전 : 우수 또는 활용가능성이 높은 미활용 특허·기술에 대한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이전 시범 실시 예정('17.10~12)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백

□ 한국시설안전공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시설물 명칭, 점검 내역, 조치내역의 공개를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의 안전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명칭, 점검내역, 안전등급 등 안전점검 내용 FMS에 공개중 ○ 안전정보 공개범위 확대 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시설물의 안전등급 등 안전정보 공개범위 확대 국토부 협의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정보 공개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특법 전면개정에 따른 하위법령(령,규칙)에 대한 전면개정을 국토부에서 추진중이며, 그 후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전면개정 시 국토부에 민간시설물 정보공개 개정요청(11월)
한국시설 안전공단	2. 건설공사 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대한 부실방지 대책(현장 실사 등)을 마련하고, 통보 시스템을 체계화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발주청에 대상확인 요청 및 평가 실시 안내 공문 조치 ('16년:7회, '17년: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대상확인 및 실시 독려 ○ 부실평가가 우려되는 발주청 대상 평가 대행('16년:85건, '17년:37건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를 위한 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발주청이 공단에 평가를 의뢰하게 하여 공단이 업무대행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평가 방지를 위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기술력이 부족한 발주청의 업무 대행 - 공단의 상시 점검팀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통보시스템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청에 대상 및 평가실시 확인 조치 (공문, 필요시 유선 등) -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연계 모듈 기능개선
한국시설 안전공단	3. 안전등급이 낮은 아파트 등 집단주거 시설의 등급 공개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의 안전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명칭, 점검내역, 안전등급 등 안전점검 내용 FMS에 공개중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정보 공개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특법 전면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령,규칙)에 대한 전면개정을 국토부에서 추진중이며, 그 후 운영규정 (국토부 고시) 전면개정 시 국토부에 민간시설물 정보공개 개정요청(11월)
한국시설 안전공단	4. 민간이 실시한 안전 점검 및 진단의 부실률 감소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업무 보고시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제도 강화(규정개정 '15.0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5,885건 → '16년 8,400건 → '17년 12,000건(예상) - 부실업체 관리감독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로 평가받은 업체에서 수행한 점검·진단결과를 1년간 평가 실시 - 평가위원수 확대(200인 → 300인) ○ 성실 점검 및 진단 유도(지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사례 지방순회교육(9~10월) - 부실업체 1:1맞춤교육(5개 업체 교육) - 점검·진단 기술자 교육(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회 1,758명 양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조치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업체(업체명, 평가결과 등)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 타당성 검토 완료, '17년에 부실업체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 부실에 따른 벌칙 강화(법개정 '1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에 따른 과태료 증액 과태료 300만원 → 1,000만원 이하 · 부실점검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제재 방안 마련(책임기술자에 대한 교육강화) ○ 성실 점검 및 진단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사례집 발간·배포(12월) - 평가제도개선 등 토론회(12월)
한국시설 안전공단	5.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안전공단 경영선진화 추진방안” 수립(국토부,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구축 등 공단의 공적기능 강화 추진 - 민간기관의 감독, 심판 기능 부여 - 공단 內 “국가시설관리본부” 신설 추진(성능관리, 내진센터) ○ 기획재정부 기능조정 및 심층평가 방침을 준수하여 공단의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 기능 신설 등 공단의 안전관련 기능 강화 추진
한국시설 안전공단	6. 경로당,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률을 제고하고 점검 이후의 안전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및 순회교육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점검대상을 '16년 대비 17.5% 확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4,000개소→4,700개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관리 대책을 마련 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자체 담당자 및 시설 관리주체의 자율점검능력 습득을 위한 교육 대상 전년 대비 13.3% 확대 실시 (15,000명→17,000명) ○ 확인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권외('14.7. 이전) 미흡, 불량시설 (1,711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계획수립(3개년) - ('17)600개소→('18)600개소→('19)511개소 ○ Push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통보 후 30일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 독려를 위한 문자 발송
<p>한국시설 안전공단</p>	<p>7. 소규모 취약시설물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조치 이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관련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 사항 후속조치 결과 통보 - 후속조치 자동안내 및 후속조치 입력 시스템 구축 완료(1월) ○ 확인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권외('14.7. 이전) 미흡, 불량시설 (1,711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계획수립(3개년) - ('17)600개소→('18)600개소→('19)511개소 ○ Push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통보 후 30일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을 독려를 위한 문자 발송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8. 병원, 학교 등 중요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 시설물에 대한 하자 기준마련 등 내진안전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내 국가내진센터 설립을 위해 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 실시('17.1.25.) ○ 국가차원의 시설물 내진성능 관리체계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49조 제3호의 수정보완 건의 ('17.3) <p>* 시특법 시행령 제49조</p> <p>3.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지원 및 연구</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센터 설립 시 현재 타 부처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병원과 학교 등에 대한 내진안전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제도 개정 및 보완 등에 대한 검토 작업 추진 예정 - '18년 예정 업무로 민간 건축물 대상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업무 추진 예정
한국시설 안전공단	9. 서울시의 내진성능 자가 점검 시스템과 같이 내진 성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진안전진단에 대 하여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내 국가내진센터 설립을 위해 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 실시('17.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내진설계 실태조사 체계 구축 관련 연구과제 추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내진설계 실태조사 방안 마련 -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 대상 파악 ○ 정기적인 센서스를 통한 실태조사 관련 연구과제 추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MS 내진설계 관리체계 마련 - 내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시설물 내진설계 통계연보 발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10. 내진성능평가 의무화를 1종 시설물 뿐 아니라 2종 시설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센터를 포함하는 ‘(가칭)국가 시설 관리본부’ 조직 신설방안을 ‘공단 경영 선진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장관보고시행(‘16.9) ○ 공단 내 국가내진센터 설립을 위해 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 실시(‘17.1) ○ 시특법 전면개정안에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내진설계대상시설물 중 내진 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내진성능 평가 의무시행 조항 포함하여 본회의 의결(‘16.12.29) ○ 시특법 전면개정안 공포(‘17.1.17) ○ 시특법 전면개정안 시행 예정(‘18.1.)
한국시설 안전공단	11. 시설물정보관리종합 시스템 및 시설물재난 관리시스템에 안전등급 뿐 아니라 내진설계 여부 등의 항목을 추가 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 여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서 관리주체가 입력한 1·2종 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 여부 정보관리 중
한국시설 안전공단	12. 경영평가 최하등급 (E등급)에 대한 경영평가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체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임무 수행부서 통합·간소화(‘16.7. 완료) * 전사적 매트릭스 조직(다직무수행체계 구축) 정착 ○ 성과관리체계 강화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전담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16.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점검카드를 통한 연중 지속적 실적관리('16.7~) * 이사장, 상임이사 주재 실적 점검 회의(매월 3회) ○ 평가지표 개선 노력 - '16년도 편람 지표 개선 완료 * 기존 '노동생산성' 지표를 '사업수행 효율성' 지표로 변경 완료 - '17년도 편람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 ○ 외부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16.8.23. 완료) - '16년 경영평가 지표별 우수기관 사례분석 세미나 참석('16.10.21. 완료) - 경영평가 성과지표개선 노사공동 TF팀 워크숍 실시('16.8.28. 완료) ○ 우수기관 벤치마킹 - 경영평가 등급 우수기관 방문조사 결과를 공단에 도입 * 체계적인 성과관리, 보고서작성 전담반 운영,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한국시설 안전공단	13. 지진이 발생한 경주 내진설계 시설물의 내진 성능 현황과 경주지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지역 시설물 중 시특법 관리대상 1,2종 시설물의 점검결과 지진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 경주지진대응 SOC점검 TF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팀은 국토부 긴급 요구를 대비 사전 구성한 팀으로 국토부 요청으로 지원 * 구성 : 9팀 22명 ○ 지진 발생 이후 현장점검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및 도로사면 22개소 점검(14인) - 특수교 21개소 점검(22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안전처 지원(1인) - 청소년 수련시설 등 20개소 점검(7인) - 광역상수도 10개소 점검(3인) - 공동·연립주택 및 경주지방법원점검 64개소 점검(23인) - 댐 7개소 점검(4인) - 국민안전처 특별점검 39개소 점검지원(3인) ○ 183개소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필요시설 총 118개소 - 보수불필요시설 총 53개소 - 교육부 별도관리 학교시설 10개소 - 점검 중 점검제외시설* 2개소 * 국민안전처에서 관리주체에 연락한 결과 사용 중지된 시설로 점검제외 ○ 공단의 지원의무 관련 법규 및 규정은 없으며 국토부 및 국민안전처, 지자체 요청에 의하여 점검 및 지원함.
한국시설 안전공단	14. 국가 주요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등급 조치계획 및 진행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2회/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점검 실시('17.1.18.~3.6) - 진행상황 확인 공문 발송('16.10.6., '17.01.03.) - 매월 유선 확인 및 독려 ○ D·E등급 다수인 관리주체는 직접 방문,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협의 및 지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어촌공사(2회), 광주국토관리사무소(3회) ○ 국토교통부와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점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 지자체(제출기관) 확인·점검 ('17.3.15.~3.28.)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15. 내진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중 미실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관리주체에 미실시 사유 및 조치계획을 파악하여 국토부에 반기별로 보고하고 있으며, 국토부에는 해당 관리주체에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문서시행 ○ 점검·진단 기술자 교육 및 지방순회 교육 등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홍보 실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내진설계대상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법개정 '17.01)
한국시설 안전공단	16.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과 금품수수 등 비리로 인한 공직자 해임·파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이후 전면 금지하였고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 5에 제시된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에 한하여 공고, 견적서 제출 등 정당한 계약상의 절차를 통해 위탁계약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시설 안전공단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표침하 육안 조사를 연 1회 이상, 지표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지하 안전점검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지하안전점검 지침 및 세부지침, 매뉴얼 등의 개발을 통해 지하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예정

(주)주택관리공단

공백

□ (주)주택관리공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주택관리 공단	1. 임대주택단지 장소 임대 등으로 얻은 잡수입의 사용 및 적립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2.31 기준의 회계결산일과 관비의 차감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결산서 상 부득이하게 수탁관리잉여금 항목으로 기재 됨 ○ 2014년 말 108억에서 2016년 말 55억원으로 3억원을 차감하였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단지회보 K-apt에 공개
(주)주택관리 공단	2.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대표 구성목표를 부여하여 관리함에 따라 2015년 60개 단지에서 2016년말 72개 단지로 12개 단지 증가 ○ 공공임대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동별대표자 선출을 적극 지원
(주)주택관리 공단	3. 지진, 화재,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시 입주자 대피 등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적정 대피시설 등의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으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대책 강화 시행('16.0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적극 홍보 ○ 지진 발생지역 산하관리소 특별점검 ('16.09.22) ○ 분기별 상시 재난안전대응훈련 실시 (매분기, 30,140명, 1,83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별 매뉴얼 적용, 실전같은 훈련 * 옹벽, 정전, 화재발생, 승강기 갑힘 등 ○ 피난안내도 및 대피요령 등 게시 홍보 ('16.12.30) ○ 전국 지진 대피소 지정 안내 홍보 ('17.03.0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주택관리 공단	4. 고령자, 장애인 등 임대 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 단지에 주거복지사 598명을 의무배치하여 주거복지의 전문성 강화 ○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경진대회 개최('16.1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공유 및 수범사례 확대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유형별 주거복지서비스 특화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 돌봄서비스 중점추진예정 ○ 주거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지도 점검 강화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점검을 통한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주) 한국건설관리공사

공백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1.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통해 경영부진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선임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적임자 선임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16.11) * 총 9명 : 비상임이사 5명, 외부전문가 4명 - 사장공모 : 홈페이지 게재('17.1)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추천('17.2) - 주주총회 개최 사장선임('17.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에 의한 감사선임 예정('17.상반기)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2. 임원의 연고지 지역 신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언론에 광고를 계속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연고지 지역신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언론에 대해 지면광고 자제 * '17년도 지면광고 실적 없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건설전문지 위주로 광고할 예정이며 지역신문의 경우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3. 시장점유율이 저조 하고 6번 매각이 무산 되었 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시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주증대 노력 - 지자체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유력 지방업체와 공동 입찰 참여 - 참여기술자의 면접교육 지속적 시행 - R&D 사업 적극 지원 - 부실벌점 Zero화를 위한 현장기술 지원 확대로 현장관리 강화 - 수주네트워크 활성화(수주정보 수집) * 국토교통위원회 서면답변서 제출('16.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4. 재택근무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자 최소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Q 적정활용 인원은 약80명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영효율화를 감안하여 PQ가용인원을 현재 최소인력 56명으로 유지하고 있음 - 연구원(재택근무자)을 줄이기 위해 신규 수주 노력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위원회 서면답변서 제출('16.10) - 공익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MOU)를 통해 요청시 기술지원업무에 기술인력을 투입하는등 연구원(재택근무)의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4 현재 43개 지자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700여건의 기술지원 수행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5.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국회 및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이 적시에 게재 되도록 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및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즉시 시정조치('16.9) -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위원회 서면답변서 제출('16.10)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6.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신기술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 기관과 설계사에 홍보하여 다음*과 활용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현장활용 4건(건설신기술 737호)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및 신기술이 건설사업관리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주)윌터웨이플러스

공백

□ (주)위터웨이플러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위터웨이플러스	1. 서해5도 수산물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5도 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사업 추진방안 수립('16.3) - 서해5도 어획량 부족 및 금어기를 감안한 복합문화센터 내 수산물 공급방안 - 경매, 기획상품 개발, 언론홍보 등 복합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 일반시민이 직접 경매에 참여토록 기회 제공 등 - 수산물 육상운반 지원방안 * 운반차량 구매·리스 등 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판매장 영업개시('17.4월)
(주)위터웨이플러스	2. 수상안전교육 및 수상레포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 확대운영 및 수상안전교육 확대방안 마련('17.3월) - 생존수영, 안전교육, 응급처치 등 포함한 해양사고 대처 교육 프로그램 마련·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포츠 체험프로그램 확대방안은 고객니즈 반영한 수상레저 체험프로그램개발 및 신규 레저기구 도입 검토('17.5)
(주)위터웨이플러스	3. 4대강에서의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 일원 수상레저 체험장 설치 및 운영개시('16.5) - 칠곡보(경북 칠곡군) 수상레저체험장 개설을 위한 하천점용허가('17.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곡보 수상레저체험장 추가설치 및 운영 개시('17.7) ○ 한강(강천보), 금강(백제보), 영산강(승촌보) 등 수상레저체험장 확대 가능성 검토

코레일유통(주)

공백

□ 코레일유통(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코레일유통(주)	1. 본사 사옥 신축 후 낮은 임대율 문제와 부채 증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사옥 임대 추진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사옥 임대율 : 53%(‘17.3) * ‘16년 대비 11%p 향상, 신축 대형오피스빌딩 공실해소 및 안정화(80% 이상) 기간 최소 2년 소요 ○ 부채 감축 추진 내역(‘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활성화 및 비업무용 자산 매각으로 금융 부채를 상환하여 부채비율 전년대비 13.3%p 감축 <table border="1" data-bbox="786 801 1453 882"> <tr> <td>2015년</td> <td>2016년</td> <td>증감</td> </tr> <tr> <td>104.4%</td> <td>91.1%</td> <td>13.3%p ↓</td> </tr> </table>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본사 사옥 임대율 목표 : 85% - 임대마케팅 전속사에서 공개 전환 및 임대대행 수수료 현실화(0.68%→1%) - 임대활성화를 위한 공격적 프로모션 시행 (렌트프리 추가 제공 등) 	2015년	2016년	증감	104.4%	91.1%	13.3%p ↓
2015년	2016년	증감						
104.4%	91.1%	13.3%p ↓						
코레일유통(주)	2. 철도 역사 또는 역광장 내 지역 특산품인 농산품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상융합형 제품 판매 전문매장 「찬들마루」 운영 확대(‘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점(용산역) 매장 재배치 및 대형화로 입점 상품 확대, 매출 증대(‘16.11) * 매장 재배치 후 62.6% 매출 증대 - 2호점(모란역) 오픈(‘16.12) ○ 역광장, 공용통로 등 활용한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고향뜨락)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대전, 동대구역 등 운영 * 매장수 30개소 확대(‘15년 63개→’16년 93개) * ‘16년 매출액 16,708백만원(5,281백만원 ↑) ○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업하여 관내 12개역 지역특산품 매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운영실적 : 18개매장, 223백만원 						

공백

코레일관광개발(주)

공백

□ 코레일관광개발(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코레일관광 개발(주)	1. 여행상품 판매대행 시 영세 여행업체들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업체들의 여행상품 판매대행을 2017년 1월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여행업체 상품 판매대행 시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하여 운영하겠음

공백

항공안전기술원

공백

□ 항공안전기술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안전 기술원	1.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인력 부족 문제를 국토부와 함께 협의하여 해결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17년 1월 정부출연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예산당국에 제출하였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심의, 인력증원심의에 적절히 대응하여 예산·인력 확보 추진 예정 * 신규출연 사전 적격성 평가 심사('17.4) * '18년 예산심의('17.5~9.) * '18년 증원심의('17.6~8.)

공백

지방자치단체

공백

서울특별시

공백

□ 서울특별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1. 지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지진가속도계측기 추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17.3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 지진대책 개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현행화 - 서울시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 서울안전앱 개발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 시스템 연구용역 실시('17년~'18년)
서울특별시	2. 지진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소 : 고척스카이돔, 119안전센터 (청량리, 휘경, 봉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대책 개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현행화 - 서울안전앱 개발 - 서울시 공공건축물 39개소 내진 성능 평가 실시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 시스템 연구용역 실시('17년~'18년)
서울특별시	3. 부품표준화, 연동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스크린 도어의 오작동을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개선(표준화) 전담 T/F 구성('16.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시, 양공사, 외부전문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 총 6회 운영 - 결과 : 장애물검지센서 등에 대한 부품 및 운영방식 표준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른 9개역 승강장 안전문 전면 재시공 (우장산역 국제인증 시범추진)
서울특별시	4. 직영화한 안전업무 담당의 무기계약직 직원과 서울메트로 직원 간의 차별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33백만원 수준(교대근무 5호봉 기준) · 위탁사 대비 35.9% 인상 - 일반직과 동일한 복지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포인트, 학자금지원, 휴가 등 복리후생은 일반직과 동일 적용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복리후생비 기본급화, 통상 임금 항목 확대, 수당 등 조정, 호봉급 간격 조정 등
서울특별시	5. 청년수당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개선을 위한 간담회 2회 개최('16.12.19., '17.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 예방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방안 논의 ○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7.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청년제도를 분석하여 청년수당 발전방향 방안 모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도 지원계획 수립 시, 부정수급 방지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자 선정 예방을 위한 소득제한기준 추가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기준, 방법 등 반영
서울특별시	6. 청년청을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형 무중력지대 조성(청년청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지원 ○ 지자체(은평구) 지역행사와 청년청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간부회의('16.9월) -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입주단체(4개 단체) 참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형 무중력지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운동, 인문학 강좌 등) ○ 청년허브 '청년청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과 연계성 강화
서울특별시	7.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책정을 위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시세보다 낮게 임대료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 : 주변시세의 68~80% * 민간임대 : 주변시세의 90% -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보증금 비율을 높여 월임대료가 낮아지도록 관리 - 강남 등 임대료가 높은 지역은 소형평형 건설 유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31㎡ 이하로 건설토록 하여 청년층이 부담 가능토록 함 -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 저소득 청년층(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공유주택(shared housing) 및 도서관,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청년커뮤니티 시설 도입 ○ 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청년주택 최초 임대료 책정
서울특별시	8.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원조성계획 공개 및 대국민 의견수렴 기간 확대 ('17.4월~10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와 지속적 협의 예정 중이며,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 아젠다로서 추진토록 대정부 제안 및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정 과제화 추진
서울특별시	9. 용역조사 등을 통해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도부터 민간용역 시행으로 도로함몰 발생 전에 동공을 사전 안전조치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함몰 예방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음
서울특별시	10. 서울역 고가공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 직영체제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팀 11명 운영 중 - 운영단(3~4급) 구성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 구성 : '17.7.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11.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 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시의회, 시민위원회, 장애인단체, 언론사, 어린이기자단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추진 : '17.4.13.~5.15. 																				
서울특별시	12. 서울지하철 1~4호선의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 시설 개선, 내진 보강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도 분야별 사업 확보 (단위 : 억원) <table border="1" data-bbox="775 813 1449 1010"> <thead> <tr> <th>구분</th> <th>~'15년</th> <th>'16년</th> <th>'17년</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8,681</td> <td>1,141</td> <td>2,491</td> </tr> <tr> <td>노후전동차 교체</td> <td>169</td> <td>232</td> <td>1,063</td> </tr> <tr> <td>노후시설 개량</td> <td>7,096</td> <td>600</td> <td>930</td> </tr> <tr> <td>내진보강</td> <td>1,416</td> <td>309</td> <td>49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이후 국비지원 요청 지속 - '15년부터 내진보강 사업 국비지원 ('15년 327억원, '16년 124억원, '17년 220억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 국비확보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노후시설 및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비 국비 40% 지원 요청 ○ 무임수송 정부지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 	구분	~'15년	'16년	'17년	계	8,681	1,141	2,491	노후전동차 교체	169	232	1,063	노후시설 개량	7,096	600	930	내진보강	1,416	309	498
구분	~'15년	'16년	'17년																			
계	8,681	1,141	2,491																			
노후전동차 교체	169	232	1,063																			
노후시설 개량	7,096	600	930																			
내진보강	1,416	309	498																			
서울특별시	13. 지하철 터널 내 연결 송수관, 소화전 설비 미설치 역사에 대해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대상 : 201.7km(복선터널) - '16년까지 연결송수관 117.6km 기설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메트로 : 22.2km * 도시철도공사 : 95.4km - '17년도 15km 설치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이후 잔여구간 69.1km 설치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14. 승강장 간격이 넓은 역사에 대하여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대책 수립('15.12월 /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다발역 안전발판 우선 설치 ○ '16년 공동발주 구매를 위한 양공사 종합 계약 협정서 체결('16.2월 / 양공사) ○ 도시철도공사 구간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 설치(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역 : 김포공항역, 신길역, 고속터미널역 - 설치물량 : 3개역 100개소 - 계약기간 : '16. 3월 ~ '17. 5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3개역 설치 후 안전성 검증하여 추진여부 결정 																																		
서울특별시	15. 범죄 방지를 위해 지하철 객차 내 CCTV를 설치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서울메트로</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차내 CCTV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호선 신형전동차(356량) 712대 설치 - 설치년도 : '12. 6월 ○ 설치현황('17. 4월 현재) <table border="1" data-bbox="770 1503 1433 181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호선별</th> <th colspan="2">전동차</th> <th colspan="2">CCTV</th> </tr> <tr> <th>편성</th> <th>객실(량)</th> <th>설치 (카메라/객실)</th> <th>미설치 (객실)</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200</td> <td>1,954</td> <td>712/356</td> <td>1,598</td> </tr> <tr> <td>1호선</td> <td>16</td> <td>160</td> <td>-</td> <td>160</td> </tr> <tr> <td>2호선</td> <td>88</td> <td>834</td> <td>712/356</td> <td>478</td> </tr> <tr> <td>3호선</td> <td>49</td> <td>490</td> <td>-</td> <td>490</td> </tr> <tr> <td>4호선</td> <td>47</td> <td>470</td> <td>-</td> <td>470</td> </tr> </tbody> </table>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차 신규도입시 CCTV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도입 차량 : 620량 - 도입계획 : '17년~'22년 	호선별	전동차		CCTV		편성	객실(량)	설치 (카메라/객실)	미설치 (객실)	총계	200	1,954	712/356	1,598	1호선	16	160	-	160	2호선	88	834	712/356	478	3호선	49	490	-	490	4호선	47	470	-	470
호선별	전동차			CCTV																																
	편성	객실(량)	설치 (카메라/객실)	미설치 (객실)																																
총계	200	1,954	712/356	1,598																																
1호선	16	160	-	160																																
2호선	88	834	712/356	478																																
3호선	49	490	-	490																																
4호선	47	470	-	47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CCTV 미설치 잔여 전동차 - 대상차량 : 978량 - '18년 투자심사 제출, 예산확보 추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 5px 0;">도시철도공사</div> <p>< 조치실적 ></p> <p>○ 설치현황('17. 3월 현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0%;">운영편성 (량)</th> <th style="width: 20%;">설치편성 (량)</th> <th style="width: 45%;">수량(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207 (1,616)</td> <td>73 (582)</td> <td>1,164</td> </tr> <tr> <td>5호선</td> <td>76 (608)</td> <td>1 (8)</td> <td>16</td> </tr> <tr> <td>6호선</td> <td>41 (328)</td> <td>1 (8)</td> <td>16</td> </tr> <tr> <td>7호선</td> <td>70 (560)</td> <td>70 (560)</td> <td>1,120</td> </tr> <tr> <td>8호선</td> <td>20 (120)</td> <td>1 (6)</td> <td>12</td> </tr> </tbody> </table> <p>< 향후 추진계획 ></p> <p>○ 신규 전동차 도입시 CCTV가 설치된 차량 구매 예정 - 신규 전동차 도입 계획(대상 : 총 834량, 기간 : 2017.~2024년, 순차 도입) · 7,8호선 1차분 226량(7호선 136량, 8호선 90량) · 5호선 전동차 608량 - 예산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구분	운영편성 (량)	설치편성 (량)	수량(대)	계	207 (1,616)	73 (582)	1,164	5호선	76 (608)	1 (8)	16	6호선	41 (328)	1 (8)	16	7호선	70 (560)	70 (560)	1,120	8호선	20 (120)	1 (6)	12
구분	운영편성 (량)	설치편성 (량)	수량(대)																							
계	207 (1,616)	73 (582)	1,164																							
5호선	76 (608)	1 (8)	16																							
6호선	41 (328)	1 (8)	16																							
7호선	70 (560)	70 (560)	1,120																							
8호선	20 (120)	1 (6)	12																							
서울특별시	16. 지하철 화재사고 대비 스프링클러 및 안전 구호 장비를 비치할 것	<p>< 조치실적 ></p> <p>○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 설치대상 : 지하역사 254역 - 설치완료 : 지하역사 193역 * 승강장 : 99역 완료</p> <p>○ 역사내 구호장비 비치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30%;">단위</th> <th style="width: 40%;">수량</th> </tr> </thead> <tbody> <tr> <td>화재용방독면</td> <td>개</td> <td>51,180</td> </tr> <tr> <td>공기호흡기</td> <td>개</td> <td>1,404</td> </tr> <tr> <td>휴대용 비상조명등</td> <td>개</td> <td>19,301</td> </tr> </tbody> </table>	구분	단위	수량	화재용방독면	개	51,180	공기호흡기	개	1,404	휴대용 비상조명등	개	19,301												
구분	단위	수량																								
화재용방독면	개	51,180																								
공기호흡기	개	1,404																								
휴대용 비상조명등	개	19,30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클러 승강장 미설치 1역(삼성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대로 지하복합공간 개발’과 연계하여 설치 예정 ○ 5~8호선 스프링클러 설치계획 <table border="1" data-bbox="775 584 1426 707">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대상</th> <th rowspan="2">설치 완료</th> <th colspan="2">설치예정</th> </tr> <tr> <th>'17년</th> <th>'18년</th> </tr> </thead> <tbody> <tr> <td>역사</td> <td>154역</td> <td>94역</td> <td>20역</td> <td>40역</td> </tr> </tbody> </table> <p>※ 2017년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중화역 등 20개역 시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구호장비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하반기 승객구호장비함 내 가제손수건, 생수 추가비치 - 환승역, 승하차 상위역 등 역별 특성 반영하여 수량산출 후 구매 비치 추진 	구분	대상	설치 완료	설치예정		'17년	'18년	역사	154역	94역	20역	40역
구분	대상	설치 완료				설치예정								
			'17년	'18년										
역사	154역	94역	20역	40역										
서울특별시	17. 경전철 건설계획 시 저비용, 고효율의 노면전차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시행 시, 노면전차 도입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2. 3. : 계약 및 착수 - '17. 2.22. : 착수보고회 개최 * 동북선의 경우 현재 협상중으로 금년말 실시 협약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8. : 중간보고회 개최 - '17.12. : 최종보고, '18. 2. : 용역완료 												
서울특별시	18.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 차량 제작을 조속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0. : 직결관련 협의(시,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결차량 성격(광역, 일반), 비용 대비 실효성 및 직결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협의 필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 PIMAC 사전 타당성조사 후 9호선 증차계획 협의(시↔국토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19. 청량리역 역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량리역 시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자체조달 어려움 * 총사업비 780억원('16년 단가기준) ※ 청량리역사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포함 요청 등 다각적 방안 검토 - 별도 시행 시 청량리역사 접합에 따른 이중투자 우려
서울특별시	20. 도시철도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경전철(동북선, 면목선) 노선을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시행 시 노면전차 도입방안 검토 - '17. 2. 3. : 계약 및 착수 - '17. 2.22. : 착수보고회 개최 * 동북선의 경우 현재 협상중으로 금년 말 실시협약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수행 - '17. 8 : 중간보고회 개최 - '17.12 : 최종보고, '18. 2 : 용역완료
서울특별시	21. 전동차-플랫폼의 틈새 간격이 초과하는 승강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대책 수립 ('15.12/국토부) - 사고 다발역 안전발판 우선 설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공동발주 구매를 위한 양공사 종합계약 협정서 체결('16.2. / 양공사) ○ 도시철도공사 구간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 설치(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역 : 김포공항역, 신길역, 고속터미널역 - 설치물량 : 3개역 100개소 - 계약기간 : '16.3월 ~ '17.5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3개역 설치 후 안전성 검증하여 추진여부 결정
서울특별시	22.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을 정비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과속방지턱 33,06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 비 : 32,627개소 - 미정비 : 439개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팀장 및 담당자 회의('16.12월) 등을 통해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정비를 독려 하고 있으며 '17년 상반기 중 정비완료 예정
서울특별시	23. 올림픽대로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대로 정체구간 확장사업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2월 반포~청담대교 구간 확장 (4.63km, 폭 4→5~6차로) 개통 - '14.1월 행주~방화대교 구간 확장 (2.8km, 폭 3→4차로) 개통 ○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교량(잠실대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의 램프 개선사업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연결램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중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공사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램프 개선 공사 중(공정률 15%) ○ 강변북로의 기능 제고를 위해 한강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한남대교 북단) 추진 - 한남대교 북단 연결로 개선 실시설계 완료('16.5월)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연결램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7.10월)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준공('18.11월) ○ 한남대교 북단 연결로 개선 공사 시행('18년) ○ 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램프 개선 공사 준공('19.12월)
서울특별시	24. 도심과 외곽을 잇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성 방안을 확보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등 정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신설 36.8km 포장정비 61.1km, 안전시설정비 등 ○ 도심연계 자전거 간선망 확충을 통한 생활권역간 연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확충('15.2월~'16.10월) ○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으로 전환 시행 ('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39개노선 52.9km ○ 생활 속 안전한 자전거이용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생·운수종사자 등 교육실시(총 62,279명) - 자전거 웹진 및 홍보영상제작('16.12.) - 자전거 퍼레이드('16.6월), 서울 자전거 축제('16.9월) 개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정비예산 확보 지속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분야 시설정비 등 시행 ○ 통행위반 CCTV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3대, 매년 2대씩 확보 ○ 자전거 사고다발구역 교통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75개소 중 '18년까지 87개소 ○ 올바른 자전거이용 문화·조성,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이용문화 조성 등
서울특별시	25. 세곡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지하철 유치 등 교통대책 수립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결정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례~과천 광역철도 반영 ○ '16.7.~'17.3. : 위례과천선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보완 용역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주관),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공동시행 ○ '17.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건의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지자체 합의 노선(안) 건의 ※ '17.3.:지역주민 요구노선(안) 예비타당성 조사 건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국가 시행 광역철도 사업추진 협의(시↔국토부)
서울특별시	26.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추진할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구성 협의 등 지역별 주민과 소통 및 의견 수렴 추진(총 12회) <p>[구로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8.26~27. : 주민설명회 개최(3회) - '16.10.21~28. : 주민협의체 구성회의(2회) - '16.12.26. : 주민대표 간담회 - '17. 1.20. : 주민설명회 개최 - '17. 2. 7. : 주민협의체 구성 간담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영등포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1. 2. : 주민설명회 개최 - '17. 1.15. : 주민토론회 개최 - '17. 2. 2. : 주민협의체 구성 회의 - '17. 4. 3. : 주민협의체 구성 간담회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와 병행, 주민협의체를 통해 환기방식 검증 등을 주민과 협의 지속 추진
서울특별시	27.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관련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구 율현동 일원을 대상으로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 중('16.12.15.~ '17.5.14.)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추진
서울특별시	28. 교통사고다발 주변 지역의 교통구조 분석 등을 통해 사고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시행 완료 - '16년 25개 지점 개선 완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사업 지속 추진 예정 - '17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21개 지점 추진예정 ○ 다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14년 이후 관련예산이 축소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있음 ('14년 1,228백만원→'17년 370백만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29. 장애인 콜택시 공급을 확대하여 이용자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운행 및 운행 누수시간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48대) 대폐실시('16.6월) ○ 차량증차(13대)로 법정대수 초과확보('16.6월) - 424대 → 437대(법정기준 431대) ○ 대기시간 감소위한 운영 효율화('17.2월) - 집중관리지역 확대 : 4개 → 7개 - 대기시간 60분 초과시 우선배차 적용 ○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운전원 채용시 인성검사 실시, 불친절 민원 이력관리 및 근무성적 감점제 시행,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교육 실시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운행 및 운행 누수시간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50대) 대폐실시 ○ 시간제운전원 공급 확대 : 110명 → 150명 ○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 방안 추진 -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 등 캠페인
서울특별시	30. 개인택시조합의 비리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단말기 교체사업 사업추진 중단('16년) - 현 이사진 개입 신형단말기 교체 사업은 과도한 통신비 발생, 기술력 부족 등으로 여신금융협회 인증 받지 못해 중단 ○ 개인택시조합 LPG충전소 운영 분리('17.3월) - 높은 임대료 등 운영상 문제 제기가 된 LPG충전소는 별도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주주총회 등을 통한 운영상 투명성, 전문성 등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지부장(18개) 수시 현장의견 청취('17.3~4월) - 택시정책 건의사항, 조합 운영상 문제점 토론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DTG(Digital Tacho Graph) 교체 사업 뇌물수수건은 현재 개인택시 조합원의 경찰고발 ('16.10월)로, 중앙지검과 경찰수사 (관악경찰서)가 진행 중임 - 수사결과에 따라 임원개선 명령 등 검토 ○ 개인택시조합 수시 지도·감독 실시 등
서울특별시	31. 경기도~서울간 출퇴근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확충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버스 확충 등 수시협의 - 우리시와 경기도간에는 여객운송 사업 계획변경에 대해 연간 약 100건~150건 협의를 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경기도 버스 156대에 확충 동의(신설, 증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수시 협의에 대해 우리시 교통여건과 노선경합 등을 고려하여 검토 예정
서울특별시	32.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정비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1차 '15.7월, 2차 '16.8월) - 1차 : 1,393km를 조사 한 결과, 내부 결함 424,349개소를 발견하여 이중 도로함몰 관련 하수관로 111km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 284km를 조사 한 결과 내부결함 118,523개소를 발견하여 이중 도로함몰 관련 하수관로 12km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중임 - 3차 : 527km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4월 중 용역 착수 계획 - 4차 : 516km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18년 1월 중 용역 착수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2월 : 노후관로 2,720km 조사 완료 ○ '19.12월 : 조사결과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완료
서울특별시	33. 자치구별 노후관로 비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노후관로 조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물량에 따라 각 25개 구청별로 예산(국비, 시비)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완료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노후관로 조사결과에 따라 노후도가 심한 구청 순으로 차등 지원
서울특별시	34. 주거사각지대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균형 매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중구·성동 등 매입실적 저조 자치구는 전략적 매입 추진 * 매입단가를 호당 최대 3억원에서 3.5억원 상향 적용 ○ 매입사업 활성화 위해 서울지역 국고 지원 단가 현실화 관계부처 지속 협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평균매입가(240백만원) 대비 국고지원 (101백만원) 비율 상향(42%→75%) * '16년 경기도 국고지원비율 75%</p> <p>< 향후 추진계획 > ○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국토부 및 기재부 수시 건의</p>																																								
서울특별시	35.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전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전환율 제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증가를 수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p> <p>-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자 증가로 인해 시중이자율과 전환이자율 차이로 인한 이자손실 매년 400억원 이상 발생</p> <p>- 임대보증금 증가로 SH공사 부채 증가</p> <p>- 임대사업의 적자 확대</p> <p>※ 임대주택 관련 부채증가 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 단위 : 억원 ></p> <table border="1" data-bbox="774 1361 1449 1534"> <thead> <tr> <th>구분</th> <th>'07</th> <th>'08</th> <th>'09</th> <th>'10</th> <th>'11</th> <th>'12</th> <th>'13</th> <th>'14</th> <th>'15</th> </tr> </thead> <tbody> <tr> <td>임대보증금</td> <td>6,463</td> <td>8,495</td> <td>13,727</td> <td>23,149</td> <td>35,206</td> <td>39,526</td> <td>47,640</td> <td>60,316</td> <td>65,136</td> </tr> <tr> <td>주택도시보증금</td> <td>10,444</td> <td>12,174</td> <td>14,173</td> <td>17,074</td> <td>21,858</td> <td>23,903</td> <td>26,292</td> <td>30,160</td> <td>33,300</td> </tr> <tr> <td>부채 합계</td> <td>16,907</td> <td>20,669</td> <td>27,900</td> <td>40,223</td> <td>57,064</td> <td>63,429</td> <td>73,932</td> <td>90,476</td> <td>98,436</td> </tr> </tbody> </table>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임대보증금	6,463	8,495	13,727	23,149	35,206	39,526	47,640	60,316	65,136	주택도시보증금	10,444	12,174	14,173	17,074	21,858	23,903	26,292	30,160	33,300	부채 합계	16,907	20,669	27,900	40,223	57,064	63,429	73,932	90,476	98,436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임대보증금	6,463	8,495	13,727	23,149	35,206	39,526	47,640	60,316	65,136																																	
주택도시보증금	10,444	12,174	14,173	17,074	21,858	23,903	26,292	30,160	33,300																																	
부채 합계	16,907	20,669	27,900	40,223	57,064	63,429	73,932	90,476	98,436																																	
서울특별시	36.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16.7.12. 국토교통부)</p> <p>-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8년 이상으로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건의(조례위임)</p> <p>○ 서울시 민간 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공고('16.12.8. 서울시보)</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용적률 적용에 대한 운영기준 지자체 조례위임 근거 마련 - 민간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및 양도 금지 사항 건축물대장 등에 기재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37. 임대주택 임대료 월세에 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임대료 산정 및 인상은 ‘주택 임대차보호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의로 적정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의 60%까지는 전환 이자율 6.7%를 적용,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목돈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음
서울특별시	38.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1월~12월 우리시 재생협력과 및 국토부 합동으로 총 8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결과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행정 등과 관련하여 124건의 위반사항 시정조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점검 결과 조치 및 조합 점검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실시 및 조합실태점검기동반 등의 관리 방안 마련하여 지속적인 점검 실시 ○ 기존 제도 적극활용 및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실시하고 있는 공공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39.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동체주택 플랫폼 내에 빈집 프로젝트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중 ('17.8월 완료 예정) - 빈집 소유주 신청 체계화, 활용가능 빈집 현황관리, 입주자 모집, 홍보 등 종합관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TF팀 구성(주거환경 개선과 주관) -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검토 - 제도개선 등 건의, 대응방안 등 마련
서울특별시	40.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가현실화를 위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개최('16.11.21.~28.) ○ 시·도 가격균형협의회 참석 지가현실화 반영 요청('16.12.6.) ○ '17년도 표준지가 가격균형 협의결과 국토부 통지 및 지가현실화 반영 요청 ('16.12.7.) ○ '17년도 표준지가 가격균형 협의 결과 자치구 통지 및 시세 대비 지가 분석 및 반영 요청('17.12.7.)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래가를 활용한 지역별 가격편차 분석 ○ 대규모 개발예정지, 업무용빌딩, 고급 단독주택부지 등 지가수준 조사 ○ 지가현실화를 위한 '18년도 표준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추진 ○ 국토부와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 시 지가현실화 반영 의견 적극 요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41. 월세신고제 정착을 위해 조사대상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작성내용 최소화를 위한 신고용 스티커 제작·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작성(4개 항목) :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임대면적, 방수 - 공무원 입력(기타 항목) : 전입신고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 ○ 자치구, 주민센터 담당자 지정 및 장(보)고 체계 구축 ○ 월세조사 분석결과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물 제작·배부 등 대시민 홍보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계약신고제 의무화 추진 정부 건의 ○ 월세계약신고제 의무화관련 입법동향 지속 모니터링, 법안발의 시 적극 지원
서울특별시	42.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장기수선 총당금의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개정건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장기수선 총당금의 적립액 하한선을 강제하는 내용 등 장총금 적립금액 현실화 관련 법개정 건의 * '16.8.12. 공포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최소적립금액 기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현재 국토부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시를 준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적립금액 관련 구체적 내용이 적정 기준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 비의무대상 공동주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 총당금을 과소 적립하여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공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와 합동으로 교육 및 지도감독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43. 신림1구역(양산지역) 정비구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해제 절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3.24 조례 공포·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 '16. 5. 1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해제를 위한 세부절차 등 규정 - '16. 7.14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결과 : 보류 - '16. 7.1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제기(1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외16, 피고 : 관악구청장 * 소송결과 : 원고패 - '17. 1.10 : 원고 항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해제 관련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16. 3.24 공포) 및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추진계획」에 따라 절차진행 중이며, ○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권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양산지역 부분해제 등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위와 관악구에서 촉진계획(변경)에 대한 별도 요구사항이 없으나,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관련사항 검토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의 절차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결정되게 될 예정임
서울특별시	44.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 기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선 설치 등 화재안전 사고 대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월 1회이상) ○ 불시(야간)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실시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설치(229개소) ○ 태양광 조명블럭 설치(201개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주차구획선 정비(34개소) ○ 입주자대표(관리소장) 간담회 개최(연2회) ○ 소방특별조사 : 34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 307, 불량 29, 미실시 7, 과태료 2, 시정명령 27 ○ 논스톱(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2단지 시스템 구축 완료 ○ 화재안전매뉴얼 제작,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안전매뉴얼 등 86,223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종합대책 지속 추진
서울특별시	45.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에 대해 성과연봉제 적용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성과연봉제 집단교섭 노사정 합의('16.1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진행 ②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개혁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계개편 관련 노사정 TF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17명 (시 3, 노 7, 사 5, 모델협 2) - 운영 : 4회 (대표 1회 , 간사 3회) ○ 경영평가제도 개선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12명 (전문가 6, 노사대표 등 6) - 운영 : 3회 <p><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계 개편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 : '17.4월~10월(6개월) ○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17.12월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포럼개최('17.4월~6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17.7월~12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46. 세곡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곡역 신설 등 교통개선 대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결정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례~과천 광역철도 반영 ○ '16.7.~'17.3. : 위례과천선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보완 용역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주관),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공동시행 ○ '17.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건의 (시→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지자체 합의 노선(안)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3. : 지역주민 요구노선(안) 예비타당성조사 건의 ○ '17.2. :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호선 지선(세곡동) 신설 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 추진 협의 (시↔국토부)
서울특별시	47. 구룡마을 개발 방식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토지구·거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17.5월~) ○ 거주민 선이주 추진('17.6월~) ○ 보상계획 수립('17.10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48.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향상 및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 제도 혁신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 등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및 확대 시행('16.2월) - 박원순법 19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산·완료('16.8월) - 금품 등 수수 시, 징계기준 강화 ('16.6월) ○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적 감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일상감사 확대 실시(상시) - 부패취약분야 업무처리 모니터링 ('15.7월~'16.3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및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상시) ○ 외부전문가 참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정책 관련 시민의견 수렴 및 청렴 페이스북 개설('16.7월~) - 자치구/투출기관 감사협의회 지속 운영 및 내실화('16.9월~) - 투출기관 및 자치구 감사부서장 회의(총8회)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운영(총3회) ○ 반부패 청렴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청렴 문화 확산 등 내실화를 위하여 청렴업무 전담조직인 「청렴정책 TF팀」 구성·운영 ('1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팀 운영을 통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 도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 향후 추진계획 > ○ 시 직원의 청렴시책 관심제고 및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주간 활용 내부구성원 인식개선(수시) - 내부직원 청렴서포터즈 구성·운영으로 자발적 청렴활동 강화('17.3월~)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민) 청렴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 SNS 채널 활용(연중) - (전문가) 반부패 동향 발표 등 청렴 컨퍼런스 개최('17.6월) - (타기관) 자치구/투출기관 청렴감사 협의회로 확대 운영(격월) ○ 권익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청렴대책관리 시스템 운영(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평가 설문 및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 - 청렴도 평가 하위분야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 추진 ○ 전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청렴분위기 조성 및 노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시책 공유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청렴대책회의 개최(분기) - 전 부서 참여도 제고를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연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49.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 기구 설립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3월 : 수도권 교통국장 간담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국토부 및 3개 시·도의 의견 교환 - 광역교통청 설립보다 광역 교통수요 처리 방식에 대한 3개 시도 입장의 합리적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도권교통 본부를 보완·활성화 한다면 광역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입장 표명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4월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서울특별시	50. SOC 및 안전 관련 예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SOC 및 도시안전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안전 : ('11년) 9,406억 → ('16년) 1조 6,416억 → ('17년) 1조 9,182억 - SOC : ('11년) 1조 2,695억 → ('16년) 1조 7,152억 → ('17년) 2조 447억 ○ 또한, 기반시설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산체적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 구성·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노후화 TF 운영결과를 토대로 노후 기반시설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예산편성시에도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51.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소방용수 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 마련('16.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기본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 사용(원칙) - 타기관의 소방용수시설 사용요청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승인하며, 필요 시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사용량, 사용시간 등)을 부가
서울특별시	52. 한강예술섬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를 관광 명소화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예술섬 중단('12.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사업비(교통비 포함 약 1조원) 및 대규모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사회적 공감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 또한, 예술센터 건립기금조례폐지('09.12월), 예술섬 설립·운영 조례폐지('10.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앙 투자심사 부결 등 관련절차 상으로도 사업추진 불가능한 상황 ○ 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은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13년부터 노들섬 포럼을 구성·운영하였고,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이러한 과정과 토대하에 마련된 기본 원칙에 따라 노들꿈섬 공모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따라 설계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공감대 형성('13년~'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시민아디이어공모, 전문가스캐치 등 * 노들꿈섬 공모('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운영구상, 2차 운영계획, 3차 설계공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및 실시설계(~'17.7월) ○ 시설 조성공사('17.10월~'18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53. 공개공지가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 것	<p><조치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 완료('16.4~11월) ○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규정 신설, 법령개정 건의('15년-1회, '16년-2회) ○ 공개공지 이용 세부기준 고시('17년 3월) ○ 자치구 공개공지 담당자 교육('17년 3월)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매월 1회 정기점검 ○ 공개공지 전산관리('17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54. 서해 아라뱃길의 여객 유람선을 운항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정부와 통합선착장 건립 등 22개 한강협력 사업 공동 발표('15.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 ○ 국무조정실 중재에 의거 서울시와 인천시가 참여하는 한강민관협의체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1.30. 제1차 한강 민관협의체 회의 (국무조정실) - '16.12.21. 제2차 한강 민관협의체 회의 (서울시), 공동용역 추진방향 모색 - '17.1.13. 제3차 주제별(한강/밤섬/아라뱃길) 발표 및 토론, 협의과제 도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민관협의체에 지속 참여하여 한강 시민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아라뱃길 선박운항 관련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연구용역 등)와 사회적 합의 도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55. 한강드론공원의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p>< 드론공원 조성현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 (약27천㎡) ○ 이용 : 12kg이하 취미용 드론 이용 개인 및 단체 ○ 방법 : 일반시민(단체 장소승인 및 개인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명이상 단체 : 광나루안내센터 승인 후 이용 - 개인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예약 후 이용 <p>< 추진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6월 : 한국모형 항공협회와 안전관리 MOU체결 ○ '16. 7월 : 드론 안내센터 설치 운영 ○ '16. 8월 : 드론 체험교실 설치 운영 ○ '16. 9월 : 드론공원 안전망 설치 ○ '16. 9.24~25 : '16년 서울 드론 페스티벌 개최 <p>< 향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관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무료 체험교육 실시('17.4.8~/ 격주운영) - 서울 드론 레이스 월드컵 대회 개최('17. 6월) ○ 드론 조종면허 시험장 운영('17.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교통안전공단, 한국모형항공협회
서울특별시	56. 낙후지역에 대한 마을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지역 재생을 위하여 2017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추진 계획 수립(총 20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2.16 : 희망지사업 공모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중 희망지사업 선정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보궐선거로 인해 공직선거법 검토 및 선관위 방문질의 결과 평가일정 연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월 희망지사업 공모접수 및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선정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및 주거낙후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 예정 ○ '17.6월부터 약 8개월간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18년에 희망지 사업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추진 예정
서울특별시	57. SH공사 가든파이브 사업비 미회수금 회수 방안 및 중소상인 입주 활성화를 위한 공급점포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동 현대백화점 입점공사 진행('17.5 예정) ○ 톨동 활성화 T/F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톨동 활성화를 위한 용도 및 업종의 다양화 검토 - 구성 : 상인대표 및 외부전문가 등 - 추진실적 : '17.3.27. 회의 개최 ○ 중소상인 입주활성화 방안 시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상가 대비 낮은 임대료 산정 - 임대기간 5년 만료 상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동결 · 분양전환 지원(계약금 인하 및 잔금 납부기간 연장 등) 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동 현대백화점 Open('17.5.26.예정) ○ 톨동 활성화 T/F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례 회의 개최('17.4월~6월) ○ 톨동 일괄공급 공고 및 계약체결('17.9월~12월)
서울특별시	58. 장기간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12년~'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면적 4.71km², 보상비 1조 7,495억원 ○ 제도개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국비 지원 ('12년~'17년, 14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실효제외('16년~'17년, 4회) · 제도개선 건의관련 국토위 위원장 면담('16.11.21) · 국토계획법 개정 안 입법 예고('17.3.21.)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12년~'17년, 9회) - 국유지 무상양여('16년 2회) 등 ○ 녹지활용계약 등 비재정적 방안 추진 - 실적 : 10필지 1,015㎡(노원 불암산 등 3개 공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 면적 183,450㎡ 보상비 101,865백만원 - 매년 1,000억원 이상 예산 편성 후 보상 예정 ○ 중앙정부 국비지원, 국·공유지 실효제외 등 제도 개선 ○ 녹지활용계약 등 비재정적 방안 지속 추진

공백

경 기도

공백

□ 경기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1.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성과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복공동체 심층사례 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2016.11.~20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복공동체 지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위원 등 6명 · 주요내용 : 공동체지원사업 평가 모니터링 관련 대응사례 조사 및 공유 - 대표사례 조사를 통한 심층사례조사 방법론 도출 ○ 성과 측정 위한 심층사례 조사계획 수립(20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2017.4.4.~6. 9 - 조사대상 : 30개소* * 경기도내 공동체로서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됨으로써 활성화된 곳을 유형별로 안배하여 선정 - 조사방법 : 예비조사→현지조사(인터뷰,설문)→결과공유 및 피드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복공동체 활동 심층사례 조사·분석 통한 성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동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분석 (정주성, 소통·공유 확산 사례 등) - 유형별, 단계별, 지역적 특성 분석 및 맞춤형 지원전략 도출 - 공동체 리더양성 및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2. 소방복 등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연구용역 계약(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기 간 : '17. 2. 14. - '17. 12. 11. ○ 복제개선 자문단원 관련회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현장대원 - 일 시 : '17. 2. 28. 15:00 - 18:0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경기도	3. 소방서, 병원, 수도시설 등 재난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 등 종합적인 지진 대비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경기도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17.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내진보강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시설 67건 2,016백만원 · 공공병원 11건 585백만원 · 사립병원 2건 115백만원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道 재난안전본부 및 17개 소방서 - 사업비 : 290백만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경기도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경기도	4. 지하수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등록 지하수 시설 관리 강화 등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미신고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협의 ○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지하수(음용) 수질검사 비용 무료 및 감면 추진('17.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미신고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기간 추가 시행 건의 										
경기도	5. 상수도 비급수 지역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식수원 수질조사를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미급수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개 시·군 241,591명, 우물·샘 등 개인 관정사용 145,812명(60.3%)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명></p> <table border="1" data-bbox="794 817 1465 952"> <thead> <tr> <th>계</th> <th>마을 상수도</th> <th>소규모급수시설</th> <th>전용 상수도</th> <th>기타 (우물·샘)</th> </tr> </thead> <tbody> <tr> <td>241,591</td> <td>51,846 (21.5%)</td> <td>14,193 (5.9%)</td> <td>29,740 (12.3%)</td> <td>145,812 (60.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대상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7. 4.~9. - 대상 : 12개 시·군 129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109, 차상위계층 20 - 내용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무료 검사, 결과 안내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급수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지속 추진 *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우선 선정 추진 	계	마을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 상수도	기타 (우물·샘)	241,591	51,846 (21.5%)	14,193 (5.9%)	29,740 (12.3%)	145,812 (60.3%)
계	마을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 상수도	기타 (우물·샘)								
241,591	51,846 (21.5%)	14,193 (5.9%)	29,740 (12.3%)	145,812 (60.3%)								
경기도	6. 경기북부 지역에 대하여 내진설계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17. 1월 ~ '30. 12월 - 예 산 : 227,533백만원 - 사업대상 : 753개소 * 도내 내진설계 미적용 공공건축물 ○ 2017년 북부지역 예산(공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성능평가 : 224건 2,995백만원 - 내진보강공사 : 30건 8,982백만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건축물 내진성능 조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년(당초) → '30년(변경) ○ 내진보강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30년까지 연차적 추진(공공건축물, 재난상황실 등 우선 시행)
경기도	7.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연구원 연구과제 의뢰 도입확대 방안 강구(2016년말 완료) ○ 저상버스 도입시 도비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당 1,000만원씩 총 270백만원(27대) 지원 ○ 저상버스 운영비 대당 250 → 500만원으로 상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운행중 저상버스 1,244대 5,887백만원 지원 ○ 저상버스 국비 확보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수요대수 292대 대비 184대 국토부 배분 (2017.2.24.) ○ 전국최초 저상버스 도입 및 운용 매뉴얼 작성 시군 배포 (2017. 2.28)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획 연계 검토 추진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3차 계획 목표율 달성을 위한 지원계획 검토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획 시내버스(10,590대) 대비 32%(3,389대) 도입목표 : ~ 2021년까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8.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을 확대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기관 운영사례에 비추어 신고기간 연장은 불요. * 준공일 부터 1년 이내(경북 등) ○ 신고대상 확대에는 조직 및 민간 부문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장기 검토 필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건설국 홍보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 홈페이지 게재 등 부실공사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 추진
경기도	9.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현행 턴키 발주 방식 재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난이도·상징성·예술성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하여 제한적 턴키 추진
경기도	10. 노후화 된 산단이 계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가공모 사업에 3개소('14년 : 반월국가, '15년: 성남 일반, '16년 : 시화국가) 선정,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수립 중임. ※ '14년~'17년까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48억원 (국비 23억, 도비 5.3억, 시비 19.7억) ○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15.1.14.) ○ 도자체 노후산단경쟁력강화사업 29개소 ('16년 6개소, '17년 23개소)에 대해 재생계획 및 구조고도화 용역수립 중 임 ※ '16년~'17년까지 노후산단 용역비 3.876억원(도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산단의 계획적인 정비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노후산단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부서)간 협력을 거쳐 예산반영 등 적극 추진 ○ 국가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가공모사업이 '16년을 기점으로 만료되어 증가 추세인 노후산단 재정비사업을 지방비만 부담하여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도내 노후산단: '16년 32개 → '17년 35개 → '18년 38개 → '19년 41개
경기도	11.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을 활용한 경기북부 야간관광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 장흥조각공원(8월), 포천아트밸리(9월), 가평 자라섬(12월) ○ 선(線)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생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철 등 교통 인프라 및 역사·생태·문화 등 테마별 프로그램 개발 중 - 우수체험관광 프로그램 인증 확대 ○ 관광특구와 연계한 도심야간축제 개최 추진 ○ 평창 동계올림픽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가서울강원 공동 해외마케팅 추진 중 ○ 광주-여주-이천을 연계하는 도자관광 상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강선 도자투어라인 프로그램, 도자비엔날레 상품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관광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경기도 관광활성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12. 광주시의 교통체증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대책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지도 57호선 교통정체 해소방안 관계 기관 회의 개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23.: 임종성 국회의원, 道, 광주시 등 - '17.2.2.: 도 및 시의회, 道, 광주시 등 - '17.3.16.: 道, 광주시, 교통 전문가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조사용역(광주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안) : 태재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 (장기안) : 대체도로 4.98km 신설 </div>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短期) 안은 광주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 추진 - 장기안은 관련기관(국토부, 광주시, 성남시 등)과 면밀히 검토 및 협의 추진
경기도	13.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 효율화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연정실행 과제로 도-도의회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용역, 의견수렴, 연정실행위 논의, 도의회 합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제정(2016.9.9.)을 거쳐 통폐합 완료 <p>※ 중기센터+과학기술진흥원→경제과학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영어마을→평생교육진흥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수원시 이관</p>
경기도	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기, 해빙기 등 수시점검, 매 2년마다 정기 점검(실태조사)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분기별 방치건축물 현황 관리 <p>* '16.11.23 안전관리 철저 통보 * '17.03.08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철저 통보</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 추진
경기도	15.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교통카드 지원 현물기탁 전달 완료('16.10.19) <li style="padding-left: 20px;">* 31개 시·군 저소득층 교통카드 5만원권 전달 ○ 이비카드, 버스조합에 대한 의회 및 집행부 의견 전달 및 협의('16.10~11월) ○ 버스정책위원회 인건상정을 통한 공론화('16.12.12) ○ 선불교통카드 미사용액 관련 천영미 도의원 요구자료(버스조합과 이비카드간 체결한 '15년 통합단말기시스템 구축 계약서) 제출 관련 버스조합 방문 협의 : '17.2.8 ○ 선불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관련 도의회 면담(천영미 도의원 : '17.4.4) <li style="padding-left: 20px;">* 버스조합 정재호 전무 참석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공익목적 활용 규모 확대방안에 대하여 버스조합, 이비카드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경기도	16. 무자격 119구조대가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10. 20일자 무자격자 인사조치 완료 <li style="padding-left: 20px;">- 감사시 20명 무자격 중 11명 인사조치 (9명 교육 등으로 자격 충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인사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li style="padding-left: 20px;">- 대응구조구급과에서 분기별 구조대원 자격 현황 확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17.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추진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시·군 28개 실과 추진독려(3회) ('16.9.30, '16.10.14, '16.11.21) ※ 실집행율 : ('16.8월) 27.8% → ('16.12월) 51.1% ○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 관리카드 작성 관리(2017.1.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시·군 38개 사업 관리카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활력증진사업 조속추진 독려(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이월사업과 2017년 보조사업 ○ 월별 집행실적 관리 추진
경기도	18. 임대주택 내에서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복하우스 거주자를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컨셉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16.11.) * 공동공간(육아나눔터, 맘스테이션, 도서관), 공동시설(계절옷장, 카셰어링, 무인택배), 지역편의시설(어린이집, 따복맘카페, 오픈·플리마켓) 등 ⇒ '17.3월 현재 수원 광고 등 9개 지구 실시설계시 공급유형에 따라 설계 컨셉 디자인 반영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차지원('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자녀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이차 차등 지원(기본 40%, 1자녀 60%, 2자녀 100%) ⇒ 경기도내 행복주택 5만호, 따복하우스 1만호 ○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 구성·운영('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북카페, 공동육아, 오픈마켓 등 ○ 도내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확대('18.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19.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위반건축물 담당 인력 확충 권고 ('16.11.15 도 → 시·군) - 불법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이행강제금 활용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 ('17.02.17. 도 → 국토부, 김현아 국회의원실) * 제도개선 건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된 이행강제금을 활용, 위반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 구조 안전, 피난 장애 등의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의원 자료제공 등 입법지원
경기도	20. 불필요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정비하거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앱 운영 성과측정에 따른 정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4.5.기준 총 11개(도 6, 공공기관 5)의 공공 모바일 앱 운영 중 - 폐지기준 : 성과측정결과 30점미만 앱 - 정비실적 : 폐지 7건 ※ '16.9월 이후 * 폐지앱 : 도시텃밭영농일지, 경기도119, 컬링경기, 경기문화창조허브, 세계문화유산수원화성, 경기도박물관, 문화나루 ○ 도-시·군 등 수시점검 및 관리강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앱 자체 정비 및 관리개선 요청, 폐지대상 앱 선정·통보 등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배포 * 道 관리방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화 사전협의로 무분별한 모바일 앱 개발 제한 2. 모바일 웹(Web) 우선 고려, 사전 타당성 평가 3. 서비스개시 1년이상, 다운로드 1천건미만 앱 폐기 4. 민간앱과 유사·중복되는 공공앱은 민간 이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앱 현황 업데이트 및 관리 철저 ○ 지속적인 홍보와 콘텐츠 보강으로 공공 모바일 앱 활성화 노력
경기도	21. 휠체어 탑승차량에 대한 시·군·구 지원 방법을 운영비 지원에서 차량 구입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 유도를 위해 운영비 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비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도비 지원 : 7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 41억원 · 구입비 : 32억원 - '17년 도비 지원 : 10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 76억원 · 구입비 : 31억원
경기도	22.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지지체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없는 시군 건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 : 건립 중 ('16.5.착공, '18.9. 개관 예정) ※ 노인복지관 55개소 ○ 장애인복지관 없는 시군 건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남, 안성 : 2017년 하반기 완공 - 광주, 포천, 양주, 연천 : 토지매입 등 추진 ※ 설치 시군 : 25개시군 34개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 건립에 따라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확보 ○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4개시군에 지속적 설치 독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23. 물류시설이 판매·상업 시설이 아닌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설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충분히 검토 후 적법하게 인·허가 처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물류단지 인·허가 접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경기도	24. 취약계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교체) 도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국비 70%, 시군비 30% (변경) 국비 70%, 도비 6%, 시군비 24% <p>* '17년 : 3,1125백만원(국 2,178.3, 도 186.7, 시군 747.5)</p>
경기도	25.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에게 제공하는 따복주택의 주거형태(임시주거형)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거형태(안정적 주거형)를 차별화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준주택 '기숙사' 재정지원 건의('17.1.26/국토부) * 현재 재정(국비, 기금) 미지원으로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임시주거형(기숙사) 공급 추진 지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주거형) 기숙사 재정지원 가능시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기숙사형태의 공급방안 마련(중장기) ○ (안정적 주거형)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36㎡이상 투룸형 공급(~20.12)
경기도	26. 광주시 곤지암읍과 도척면을 아우르는 전담의용소방대의 설치를 적극 검토 할 것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수요가 보다 더 늘어날 경우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보다는 119안전센터(지역대 포함) 운영이 더욱 효율적 ⇒ 관련부서 협조 요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27.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이륜차 사고감소 대책을 반영하였으며, 도민 교통안전 교육 시 이륜차 사고예방 교육 병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경찰청 및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배달청소년 및 고용점주 대상 이륜차 사고예방 홍보·교육 실시
경기도	28. 평택시의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개발사업지구 일부에서 일어나는 불법 체비지 예약판매, 불법을 방조하는 정관 내용, 불평등한 감보율 문제 등에 대하여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비지 판매 등 환지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평택시에 통보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6.12.8) : 환지계획인가 전 정관상 의결절차 없이 체비지 처분 불가
경기도	29. 경기도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타 지역대비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목표 제시('15년 대비 '21년까지 41.6%감축 목표 산정) * 880명('15년)→ 755명('17년)→ 721명('18년)→ 654명('19년)→ 585명('20년)→ 514명('21년) ○ 2017년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목표 824명 → '17년 목표 755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17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예방대책 사업 * 5개 부문 25개 사업 130,353백만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30.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 ('16.10.17. 도 → 법무부) * 제도개선 건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진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정예 응하도록 의무화 -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의원 자료제공 등 입법지원
경기도	31. 여주시 4대강 준설토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준설토 물량은 23,096천 m³으로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 내양적치장 등 10개 적치장 적치물량 * 여주시 계획상 2025년 판매완료 - 골재수급량 및 골재가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준설토 여주시장과 판매방안마련 * 한강사업 골재처리 협약서에 따라 준설토 처리업무 여주시장 담당 ○ 준설토 공급량 확대방안 마련 - 2017년 1,200만 m³ 공급·판매 계획 * 내양, 적금, 장안, 양촌 4개 적치장 * 기존 년 150~200만 m³ 판매 ○ 도 31개 시·군, LH, 한국레미콘협동조합 등 준설토 사용 협조요청 * 2017.2.13. 공문발송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내 4개 적치장(1,200만 m³) 판매완료 - 2017.4월 내양, 적금 입찰공고 - 2017.6월 이후 장안, 양촌 입찰공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32. 군남댐 방류로 인한 하류 농민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강 하류 염수로 인한 농민피해 방지를 위해 상류 대단위양수장에서 용수공급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 사업량 : 양수장 6개소, 도수로 40.8km · 사업비 : 132,163백만원 · '12.11. ~ '18.12.(공정률 48%)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구체적 염수피해 조사와 하류 취수장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강구
경기도	33. 영구·국민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광주시 지역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자체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장기공공 건설임대주택 약 1만8천호 자체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복 10,000, 국민임대 2,901, 영구임대 1,357, 10년임대 4,088, 분납임대 206 * 매입·전세임대주택도 매년 1,700호 수준으로 지속 공급 ○ 광주시 역동 역세권개발사업(따복하우스 500호 건립 추진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공공 건설임대주택(1만8천호) 차질 없이 공급('17~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전세임대주택도 매년 1,700호 수준으로 지속 공급 ○ 광주시 지역여건을 감안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 검토('17.6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34. 서울시와 경기도간 광역교통버스 노선 협의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진입 노선의 다변화를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212건 협의 신청 141건 동의, 부동의 노선 중 국토부 조정을 통해 24건 중 9건 해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경기도 광역버스의 서울 도심 진입에 부정적 입장이나 경기도에서는 대용량버스(2층 버스 등) 투입 등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서울시 및 국토부 조정 적극 추진
경기도	35. 수도권교통본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속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합회의 전문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추천 전문가 1→2인 - 수원~구로간 BRT 건설, 국가(수도권) 교통조사 공동사업,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자료 제공, 3개 시·도간 광역버스 노선 협의·조정 등 핵심 업무 역량 강화 및 추진 ○ 장기적으로 수도권교통본부를 수도권 광역교통청으로의 전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연구원에서 '17년 단기정책과제 추진('17. 2월) - 수도권교통본부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교통청 설립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7.4.14)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규약 개정을 통한 전문가 출신 위원 보강 ○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노력 지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경기도	36. 경기순환버스의 노선 문제 및 환승체계의 불편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체계 개편('1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09번(의정부→수원), 8407번(고양→군포), 8906번(양주→안양) 노선 연장 - 장암역, 불암산요금소 추가 정차 ○ 환승정류소 설치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요금소 환승편의 개선('11.6.9) - 가천대역 정류소 설치('15.12.29)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 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및 정류소 주변 지간선 체계 확대 ○ 환승정류소 추가 설치 확대

공백

제주특별자치도

공백

□ 제주특별자치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주특별 자치도	1.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 확보 및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념일로 지정 : 2014. 3월 - 2015년부터 국가추념식으로 봉행 (사업비 전액 국비 220백만원) ○ 4·3관련 국비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희생자 추념식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 -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 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 4·3희생자 및 유족 미결정자 조속 결정 건의 : '17. 4. 3(국무총리) ○ 19대 대선 야권다선정 대선후보자에게 제안: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 배·보상법 제정 - 4·3유적보존, 유해발굴과 유기족 찾기 사업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희생자 및 유족 미결정자 결정 : '17. 하반기(4·3중앙위원회) ○ 4·3사건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사건법 개정안 국회의결 : 17.하반기 • 시행 조례 개정 : '18. 하반기 •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시행 : '19년 ○ 2018년 4·3관련 국비사업 반영 추진 : 5개사업 16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념식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 - 4·3평화재단 출연금 - 70주년 기념사업 -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 제주4·3평화공원 후속사업 용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주특별 자치도	2. 제주 제2공항 부지선정 관련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16. 1. 13. ~ 지속 - 운영인원: 13명(공무원, 전문가 등) - 내용: 정보제공, 각종 민원상담 등 지역 주민과의 지속 소통 및 공감대 형성 추진 * '17.3.31.기준 소통 실적 : 1,552건 ○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16. 1. 25.~ - 인원: 2명(현장소통 및 갈등 전문가) - 역할: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과의 갈등요인 파악 및 해소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의기구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기능: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대안 제시, 합의·조정 역할 등
제주특별 자치도	3. 지속적인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종합 지원서비스센터 구축 준비 및 운영 : '17. 1 ~ 12 -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통역안내원 배치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해설사 : 34개소 148명 배치 ('17. 2 ~ 12) · 외국어통역안내원 : 6개 기관 20명 배치 ('17. 3 ~ 11) -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기도실, 무슬림 친화 음식점, 홍보마케팅 등) 개선 사업 : '17. 3 ~ 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장애 환경조성 : '17. 4 ~ 12 · 관광약자 편의시설보강사업, 리프트 전세버스 지원(3대) 등 -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 용역 추진 : '17. 4 ~ 12 ○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17년도 상반기 기금 지원 실적 (103개소 24,220백만원) - 중국인 관광객감소에 따른 특별용자 지원 : 300억원(경영안정 자금) : '17. 4 ○ 지역 관광사업체 경쟁력강화 기반강화 - 온라인마켓 탐나오 구축 및 운영: '16. 1. * '17. 3월 현재 입점 등록업체 : 761개 업체 - 숙박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운영 실태 등 상시적인 관리체계구축 : '17. 1 - 우수관광사업체 인증체계 및 관리강화 - 전문여행사 육성 : '17. 4 ~ 12 -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한 저가관광 단속: 년중 - 관광산업동향조사 지수개발을 통해 관광사업체 경기 분석 예측자료로 활용 : '17. 5 ~ '18. 12 - 종합비즈니스센터 신축으로 관광산업과 타산업간 융복합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허브 구축 : '15. 8 ~ '17. 9 ○ 마케팅 전략변화와 시장다변화 - 관광전문 웹사이트 Visit Jeju 운영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 '16.12.27 개시 - 일본 및 동남아 등 관광 시장다변화 · (일본) TV, 언론 활용 홍보 추진, 제주 ↔일본 항공접근성 개선, 민간교류 확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활용, 현지 설명회(년중), 여행사 및 언론인 대상 초청 팸투어 진행(년중) - 항공노선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 제주기점 항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공항확충지원과) 및 항공사 공동 마케팅 진행(년중) · 국적 LCC(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제주 ↔일본 정기노선 취항 추진 협의 중
제주특별 자치도	4. 관광객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양적 성장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bottom: 10px;"> <p><input type="checkbox"/> 환경분야</p>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기존 매립장 증설, 미처리 가연성 쓰레기 고품연료 생산 등 쓰레기 처리 난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 -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기 보급 및 감량화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좌읍 동북리에 2,034억을 투자하여, 매립장은 '18년 5월에 소각장은 '1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div> <div style="padding-top: 10px;"> <p><input type="checkbox"/> 교통분야</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총량관리 법제화 기반 마련 - 도내 차량수용 능력 분석 용역 추진(3~11월) - 단계별 차량관리 매뉴얼 마련(12월) ○ 사업용 차량 감차 및 수급조절 등 교통 수요 감소 유도 </div>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택시 자율감차 추진(21대) * 3년간('18~'20): 63대 감차 추진 - 전세버스 수급조절로 증차 억제 및 자율 감차(20대) 유도 * 사업용차량(전세버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지역총량제)이양 6단계 제도개선과제 포함(2016. 6월 도의회 동의) ○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무분별한 차량소유 억제 및 교통혼잡 완화 유도 -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까지 확대('17.1) - 도 전지역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18.7) ○ 개인교통수단 운행 감소 적극 유도 -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17.8) -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17~'19년) -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 검토 * 신교통수단 품평회 개최('17.10)→기본계획 사전조사 용역대상 선정('17.11)→예비타당성 조사 및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등('18~)
제주특별자치도	5.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재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 시설을 5억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 상태가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 - 국정감사 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관련 의견제출 : 법무부('17. 3. 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취득 후 부동산매각 시 영주권이 유지되는 사항 · 영주권 발급 등에 있어 의무체류 기한이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미흡 <p>* 관련호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2191(2017.3.3.)</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23.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부동산영주권제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개선 필요시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음
제주특별 자치도	6.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대비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기관 : 2017.12.26/제주발전연구원 ○ 자연재해(태풍, 호우, 강풍 등) 재난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풍수해 재난대응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협업기능을 활용 구축 재난대응 능력 강화 - 인명피해우려지역 등 재해위약시설 1,256개소 점검강화 및 예찰활동 강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2018.1. ○ 현장 밀착형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대처 민관군 공동대응 구축 - 주민행동요령 홍보, 피해조사, 응급복구 추진 구축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주특별 자치도	7. 제주 공유재산의 전현직 공무원 매입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수금지 ○ 공무원의 소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교환하지 못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요구(17.1)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5조개정요구안 -공무원은 공무원의 소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주특별 자치도	8.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소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충전기 확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495기(급속163, 완속332)구축 * 충전스테이션 2개소 13기 구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집중스테이션 충전기 확대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345기(급속178, 완속167기) * 충전스테이션 5개소 21기 구축
제주특별 자치도	9. 제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투기 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12.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 대책본부」설치·운영 ○ 토지쪼개기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제한 규정 도시계획조례 개정·시행 ○ 농지기능관리강화지침 시행(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강화 및 2,000㎡이하 세분화방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지속적 운영,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불법행위 강력대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주특별 자치도	10. 강정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철회 및 사면 복권 건의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	<p>< 조치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권 철회 건의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0. 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 구상금 철회 국회차원 협조요청 - '16.10.11 안전행정위, 국방위 국정감사 시 구상금 철회 국회차원 협조요청 - '16.10.25 국회의원 165명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 결의안 발의 - '17. 1.21 바른정당-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청구 철회건의 - '17.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4·3 추념식) ※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전 구상권 철회 건의 조치실적 (국회 3회,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3회, 해군 4회) ○ 사면복권 건의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0. 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 구상금 철회 국회차원 협조요청 - '17. 4. 3 국무총리에게 사면복권 건의 (4·3 추념식) ※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전 사면복권 건의 조치실적('14년~'16년) (국회 2회, 청와대 4회, 국무총리 등 3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정마을의 갈등해소와 공동체회복을 위해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토록 정치권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 제19대 대선공약사업으로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요구 ○ 구상권 해결을 위한 강정마을, 도내 정치권과 민정협의체 구성('17.3.3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정마을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 협의체(강정마을,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정당순서 가나다순)